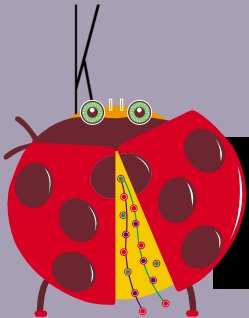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Sep·Oct 2003 9+10월호

Vol.30. No.5



- Project 특별기획 - 지방대학, 위기인가 기회인가? ■ HRD 다시쓰기 - 우리의 인적 자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 Power Interview - "제대로 된 교과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 베트남 교육 - 통일 베트남, 그 개혁의 선두에 교육이 있다



## 「한국교육」 제30권 게재 논문 공모 안내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술지 「한국교육」은 2000년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전문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로 등재된 데 이어 2001년 12월에는 “국내학술지 등급부여 조사 연구”에서 국제적 수준의 A등급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발행회수를 연 3회로 증회하였습니다. 「한국교육」 제30권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학술지 발행 목적

-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하며, 한국 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 게재 논문 공모 안내

- 공모 주제, 논문 형태, 투고자격 및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edi.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교육」 제30권 발행 예정일

- 제2호 : 2003년 8월 29일  
- 제3호 : 2003년 12월 31일

### ○ 공모 마감일

- 제3호 : 2003년 10월 31일

### ○ 논문 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

담당자 : 임소현 (only@kedi.re.kr)  
신경희 (skhee@kedi.re.kr)

전화 : 3460-0211

: 3460-0251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www.kedi.re.kr

# 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제

이중재 (본지 발행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jee@kedi.re.kr)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이 '참여'와 '자율'의 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연구·기획되어 시행되면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의 면모는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은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의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의 재배분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주요정책 추진계획(로드맵)에서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였다.

교육행정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교육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편이다. 교육행정시스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대한 기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편의 원칙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때 우리의 교육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육행정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행정시스템은 체제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체제구조와 운영원칙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육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행 교육행정체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중앙집권적·타율적 규제는 지방교육과 학교현장의 자

율성을 위축하여 창의적 행정 추진을 저해하여 왔고 실질적 책무성을 높이는 데 한계를 가져온다.

(2) 우리 교육계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접근을 조성할 수 없으며 실질적 '참여'를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지 못한다. 지방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제한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실효가 낮고, 학교운영에서 공동체적 운영이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다.

교육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행정시스템이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의 터 위에 구축되길 기대한다.

(1) 단위교육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의 폭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 운영의 자율화도 포함한다. 단위교육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권한 배분에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2)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매우 중요한 참여의 형식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학교선택을 통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선거를 통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선택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3)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는 분리운영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20]



# CONTENTS

Sep ◦ Oct 2003 9+10 월호

3

발행인 칼럼 - 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제 | 이종재

6

Power Interview

“제대로 된 교과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명지고등학교 박성수 교장 선생님

대담 | 구자역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서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는 과외나 보충수업 등 학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과서야말로 이른바 사교육을 잉태시키고 조장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른바 선진국형 교과서는 학생들이 그 교재만 읽으면 선생님의 설명없이도 그냥 알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비록 두껍지만 재미있게 되어 있고...



표지 설명- 나도 대학 졸업이란 걸 했지만 ...

14

새로운 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 이보영

18

세계의 석학들은

윌리엄 피아니(William Pinar)교수

“자서전을 쓰라” | 김영주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이종재 응보출판심의 위원회 | 구자역 (위원장) 고전 공은배 김영분 김홍주 박재윤 박효정 심용기 최상근 한만길 응보출판팀 | 채경은 김왕준 김태현 노근철 이숙희 이정희 디자인 | 디자인리서치 02) 704-0492

home page | www.kedi.re.kr ISSN-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3년 8월 25일 발행 | 격월간 등록번호|문화바 02718 등록변경 |2001년 4월11일 값 4,500원

「교육개발」 구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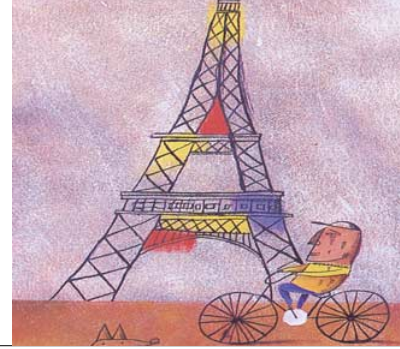
전화 | 02-3460-0235 팩스 | 02-3460-0151

이메일 | keditor@kedi.re.kr

24

Project 특별기획 - 지방대학, 위기인가 기회인가?

- 참여정부의 새 프로젝트, 그 중심엔 지방대학이 있다
- 어느 고등학교에 나붙은 “지방대교수 출입금지” 팻말
- 대학이 특성분야 정하면 정부는 지원정책 정해야 가능하다
- 지방대, 등록금 수입으로 겨우 버틴다 · 의외로 지방대 취업 적응력, 수도권 보다 높다
- 교수인가, 세일즈맨인가 · 성공한 지방대 교수들, 이렇게 뛰었다
- 천민, 이것이 지방대생의 신신분이다



63

World Education 세계의 교육

미국 - 백인이어서 불합격, 흑인이어서 합격된 그 역사적 재판 | 김영주

독일 - 여름방학의 경제학 | 김종기

태국 - 한국기업이 성장하면 태국 내 한국어도 승격된다 | 김영애

프랑스 - 프랑스는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한다 | 신연미

일본 - 21C 일본은 '마음이 중요하고 씩씩한 일본인' 을 육성한다 | 이정미

84

베트남 교육

통일 베트남, 그 개혁의 선두에 교육이 있다 | Bui Minh Hien

약 80년간의 프랑스 식민통치로 인해 (1858~1945), 베트남 교육에 가장 큰 저해 요소는 가난이었다. 단지 상위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945년 독립 전까지 전 국민의 95%에 이르는 국민이 문맹이었다. (번역 | 정중업)



94

주간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경동

대학은 '교육적 선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김동운

과외, 평준화, 영재교육정책의 딜레마 | 이해명



101

BOOK

104

HRD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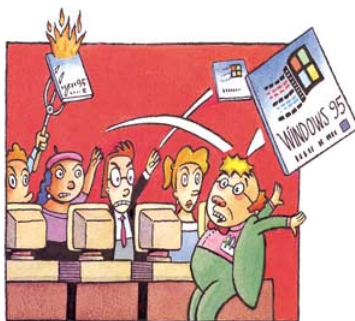
우리의 인적자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 홍영란

108

Research Finding -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 김은주

110

KEDI 보고서



THE HISTORY OF THE CLOCK  
The cloc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of the human race. It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to measure time and to coordinate activities. The first clock was made of wood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sundial. The first mechanical clock was made in the 13th century. It was made of brass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tower clock. The first pocket watch was made in the 16th century. It was made of brass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pocket watch. The first wristwatch was made in the 19th century. It was made of brass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wristwatch. The first quartz watch was made in the 20th century. It was made of quartz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quartz watch. The first digital watch was made in the 20th century. It was made of silicon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digital watch. The first smartwatch was made in the 21st century. It was made of silicon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smartwatch. The first smartwatch was made in the 21st century. It was made of silicon and was used to tell the time of day. It was called a smartwatch.

명지고등학교

박성우  
校長



선생님들은 연구수업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연구수업은 정상적인 수업하곤 다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선생님들에게 연구수업을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대담 / 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jogu@kedi.re.kr)

## “제대로 된 교과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Q**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 중에 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만큼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결론인데요, 명지고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수업 중에 지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이유요? 글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공개수업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지는 아이들이 1, 2, 3학년 모두 없어졌어요. 선생님들도 이상하다고 해요. 수업을 축제로 하자고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무슨 변화를 가져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수업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과 축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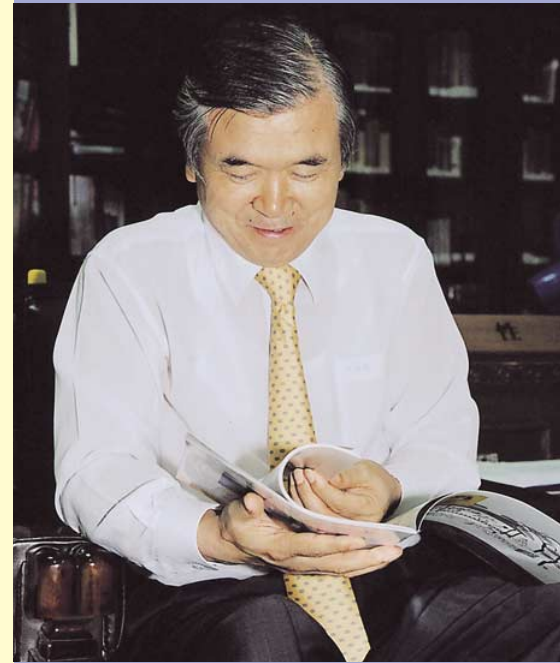
**Q** 교장선생님께서 명지고등학교에 부임하신 후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죠.

**A** 사업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추진하는 일과 외부로 알려진 일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교과교육체제에 관련된 일로, ‘명지형 교과교육체제’라 명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첫째는 학습자료 개발이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수업, 셋째는 쓰기 교육입니다. 학습자료 개발은 방학 동안의 자료수집을 거쳐 이번 2학기에 세미나를 실시하면서 구체화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각 교과별로 그 교과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찾아 그것을 우리나라 교육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과목별 선생님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여러 다른 나라의 자료 및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선진국가들의 교육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과학교과라고 하면 미국, 그렇지만 어학교과는 미국보다는 주로 구라파 쪽으로 핀란드, 스웨덴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런 곳의 사례와 경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학습자료를 개발하려고 해요. 두 번째의 공개수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쓰기 교육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학년 1학기에 3시간을 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매 학기마다 쓰는 것을 평가에 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꼭 논술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한 것이지요. 쓰기 교육이라고 해서 꼭 국어선생님만이 가르

대신 가족들도 초청하고 친구들도 초청해서 자기가 평소에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즉, 자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고, 그것을 축제 비슷하게 해보라고 주문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사가 1년에 한번 이상 축제를 합니다. 제 생각에 교장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저는 들어가지 않고요, 심지어 총각선생님이라면 애인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수업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개방하는 것이 없으니까 개념화가 어렵고 체계를 잡는 게 잘 되지 않더군요.





어쨌거나 우리 학교는 우선 선생님들끼리 공개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어난 변화라면 자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3분의 2는 잤거든요. 아이들이 학교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좋아졌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치고 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편지, 일기, 시, 단편적으로 문학적인 글쓰기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쓰기 교육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 쪽에서 쓰기, 자연과학 쪽에서 쓰기, 이것은 사회과 선생님과 과학과 선생님이 각자 쓰기를 맡으시고,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모든 과목에 쓰기가 부과되지요.

**Q 초빙교장으로 오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A** 사실 저는 총장을 한다든지 교장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카운셀링을 전공했기 때문에, 카운셀링에 서의 국가 수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보이고, 국가 수준에서 카운셀링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학교상담까지 폭넓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산업체에서 상담의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도 고려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라고 지금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입법하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그런 일들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관여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상담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어떻





게 하다 보니 대학의 행정을 한 임기 동안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느낀 것은 대학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학교행정 등 세 가지 시스템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보았고요. 그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고등학교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전공이 교육이고 교육 테두리에서 40년 넘게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교육 현실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두 대학에서 총장 제의도 있었지만, 교육행정을 하려면 중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운셀링을 했지만, 교육행정, 아니 교육 시스템 자체에 관심을 갖고, 생활지도 시스템도 보고 학교행정 시스템을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주대학에서는 학교행정 시스템까지 보고 손을 좀 데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아직 학교행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두 가지 시스템만을 보고 있지요.

**Q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크게 보면 교육내용 자체인데,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학생, 교과서,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나 교사가 큰 문제가 있는가', 물론 그런 점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서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완전 후진국형 교과서예요. 지금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교과서도 기본적으로 발상이 100불 정도 되는 후진국 시대의 교과서를 생각하던 그 개념에서 출발된 교과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지요. 결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과외나 보충수업 등 학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과서야말로 이른바 사교육을 잉태시키고 조장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도 교과서를 써봤습니다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유, 평등, 평화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면, 이 세 개념을 소개할 수 있는 분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원고지 몇 매 이내에 소화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평등 개념을 소개하고, 평화의 개념을 소개하려고 하면 지면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평화의 개념은 어물어물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축약이 되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축약도 할 기회조차 없는 개념들이 쉽게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만 가지고 학생들이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수학교과서 같으면 수학을 몰라서 수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책에 있는 국어를 몰라서 수학을 못한다고 그럴 정도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제7차 교

육과정에 나와 있는 물리 교과서가 보통 200페이지 미만 정도죠. 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400페이지가 넘질 않거든요. 이른바 선진국형 교과서를 쓰는 나라들의 교과서를 보면 학생들이 그 교재를 읽으면 선생님 설명이 없이도 학생들의 독서력에 맞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두껍지만 재미있게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에 학생들이 그걸 재미있게 읽는단 말이죠.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그 개념이나 공식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얇으니까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께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려면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현재 수업시간에 플러스 2배 내지 3배는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도 다 가르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학생들은 배울 게 많은데 덜 배웠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학원이나 과외다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후진국형 교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선 훌륭한 선생님이란 머리에 쑥 잘 들어가도록 암기위주로, 압축적으로 요령 있게 설명하는 선생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이나 학생들의 개성을 길러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에요.

설명이 충실히 된 교과서를 학생들이 읽어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고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 등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생님한테 물었지요. “이러한 시스템이 되면 선생으로서 설명하고 열강하는 데에서 오는 환희, 희열이 없어지는데 괜찮겠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그래서 제가 듣기에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신다고 들었는데요.**

**A** 선생님들께서 더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학원이나 과외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학교에서 제시해 주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 1차로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학습자료를 처음에는 아이들이 읽어야 할 자료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 외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보도록 했습니다. 한 과목당 2,000페이지가 되도 좋고 그 이상이 되도 좋겠지요. 그걸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더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의도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없었다는 게 씩씩할 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1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2단계에서는 편집, 3단계에서는 정리해 책으로 출판하는 거예요. 이번 방학이 1단계에 해당되기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재단에서 2억 정도를 후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Q 언제쯤 교과서가 나올 예정입니까?**

**A** 3년 후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3년이 지나면 원본이 나오는 것인지요?**

A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1학년 교재가 나옵니다. 현재는 1학년만 해당됩니다. 경제는 1학년만 해당되는 교과서가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만들어 모든 학년 전체적으로 교육할 생각입니다.

**Q 교장선생님께서 3무운동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A 3무가 뭐냐 하면 무봉투, 무체벌, 무결석 등이죠. 무결석은 무 무단결석이라고 해야겠네요.

학교마다 촌지가 가끔 문제가 됩니다. 촌지라기보다는 봉투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에 저는 봉투를 받지 말고, 심지어 떡이나 바자회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과자도 받지 말자고 했어요. 무봉투운동이죠.

제가 카운셀러협회 회장이었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아동폭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항상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있으면 안 때리겠지 하고 보아도 그래도 때립니다. 전 그 선생님께 그 후 계속 묻습니다. “정말 때려야 되느냐?” 그럼 선생님은 “때려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또다시 물어요. “꼭 때려야 하느냐?”, “때리지 않고는 도리가 없느냐?” 그럼 선생님은 “때리는 게 제일입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교감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들이 저 교장이 때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들더군요. 그렇지만 때려야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놔두지요. 그러면 전 또 묻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마 이 질문을 1,000번은 더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때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교3 때리기 주장의 선봉자인 선생님이 계신데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그분께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때렸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때리겠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때리지 말자는 선봉자가 되었어요. 무결석을 말씀드리지요. 현재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밤늦게까지 하다가 습관적으로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가정적으로 거의 무너진 집들도 있고요. 어머니가 아침에 보면 술 취해 있고 어떤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바람 나서 나간 집의 아이들은 학교고 공부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러면서 가



3무가 뭐냐 하면 무봉투, 무체벌, 무결석이죠. 전 선생님께 그 후 계속 묻습니다. “정말 때려야 되느냐?” 그럼 선생님은 “때려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또다시 물어요. “꼭 때려야 하느냐?” 그럼 선생님은 “때리는 게 제일입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교감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들이 저 교장이 때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들더군요.

출한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가출이 7, 8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애들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술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가출한 여학생을 작게는 5~6명, 많게는 300명까지 고용한 경우가 있답니다. 부산에서만 그런 애들이 6,000명을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어디를 가냐 하면, 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나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나가 있는 애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결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애들을 사전에 휴먼네트워킹해서 돈 필요한 애들은 돈도 주고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전에 했었어요. 시범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주로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다섯 사람이 한 팀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직업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약사, 의사, 경찰, 목사, 교사 등 어느 정도 전문직이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사장도 좋고요. 이렇게 다섯 사람이 한 아이를 지도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더군요. 물론 이 다섯을 구성하는 구성원에 드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동일직종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구성원들끼리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야 하죠. 애를 하나 지도하는데 등록금도 내주고, 용돈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들에겐 힘든 일이 아니지요. 몸이 아프면 약사나 의사가 해결해 주고,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리니까 거기에서의 문제는 경찰이 해결해 주고 학교 문제는 선생님이 있어서 해결해 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해 주면서 지원해 주니까 애들이 두 달 정도 있으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까지는 안 된 거지만, 나쁜 짓만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만약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다섯 명씩 한 그룹을 만들자고 했지만,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선 자문위원을 강지원 씨 등을 위촉하고 현재 추진중이에요. 무결석운동은 학부모들과 지역 동창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한 사람을 지도하자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결석하면 교장에게 결석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애가 왜 결석했는지 알아보고, 다섯 사람이 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1학기에 몇 번 했습니다. 무결석운동은 그런 겁니다.

**Q 대학에서도 계셨고, 고등학교에도 계셨는데요,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과외를 시켜야만 기초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A** 학력이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히려 학교교육을 더 기형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나 하면 선생님들이 내신등급을 좋게 해주려고 시험을 아주 쉽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90점을 넘거든요. 옛날 같으면 95점 넘는 학생들, 90점 넘는 학생들이 그저 몇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문제를 쉽게 내니까 학생들이 90점도 넘고 95점도 넘고 하거든요. 학교의 시험문제가 쉬워졌죠. 그건 제 생각엔 내신성적을 교사들이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입시지옥이다 뭐다 해서 압박감이 심했는데, 이에 반해 근래에는 공부하는데 너무 고생할 필요가 있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특히 지난 5~6년 동안에 과거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어느 정도 탁월한 성취, 업적을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것에 반해서 지난 10년 내의 생긴 풍토가 '공부를 그렇게 꼭 잘해야 되냐', 이런 풍토를 만들고, 한 줄로 줄 안 세우고 여러 줄 세우기, 그런 가운데 공부 잘 안 해도 된다는 풍토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의 교육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처럼 내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되면서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Q 교원 갈등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A** 교원 갈등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간단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 정부의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죠. 국가의 리더십을 바로잡아야 교원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Q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A**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느냐, 어디까지 길러내느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중국의 인민들이 세계의 최고, 최강국을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예요. 중국의 개혁 속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국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요. 학생이 1,000명도 안 되는 대학에 일년에 외국사람을 400명 이상 초대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국가 비교 우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교육전략이 없는 겁니다. 2010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2050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전략이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벌써 2100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세계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거죠. 현재 교육 시스템대로 가면, 우리 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간이 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교육 에센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고비가 1980~90년대로, 과거의 수천 년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사라고 보거든요. 1970~80년대까지는 외국어를 배우고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990년대 오면서 더욱 심해져 2000년대 오면 외국에도 없고 우리 선조들도 안 한 기술, 더욱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업, 경제, 정치, 문화, 교육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대처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세상 어느 곳에도 없고 선조들도 안 했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 교육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10]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서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현재 이 교과서를 가지고는 과외나 보충수업 등 학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른바 선진국형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과만 읽으면 선생님의 설명없이도 그냥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두껍지만 재미있게 되어 있고...

# 한 국 도 예 고 등 학 교

이보영 | 자유기고가 ring24@unitel.co.kr



## 12시간 걸리는 가마 불지피기 의식 은근과 끈기도 지퍼 도공후에 된다

예로부터 옹기는 숨쉬는 그릇으로 인식되어 왔다. 모래 알갱이와 작은 돌덩이, 고운 흙이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 공기는 통하되 물은 투과하지 못하게 하여 그 안에서 음식물은 잘 익게 하고 썩지 않고 천천히 발효되도록 하는 과학적인 전통의 질 그릇.

모양새 또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맛을 내는 전통의 우리 옹기는 언제 떠올려도 신비롭기만 하다.

최근 들어 한국의 전통도자기가 생활자기에서부터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새로 발전함에 따라 그 동안 사라져 가던 한국도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도예장인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해내는 국내 유일의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쌀·도자기·온천의 고장,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도예고등학교(교장 박창래)이다.

### 명장에게 배우는 전통가마 불지피기

취재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는데, 도자기 공방과 각종 도자기 전시행사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 이천은 전승도자기를 제작하는 도공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난 17년 동안 '이천 도자기 축제'를 이어온 세계도자기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서자 황톳빛 색깔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하얀 질그릇을 들고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자가 찾아가던 그날은 대한민국 도예명장인 도천 천한봉(陶泉千漢鳳) 선생이 집도하는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학교 뒤뜰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어서 와서 가마터 불지피기 행사를 참관하세요"라며 "도자기를 만드는 수비(원료조합), 성형(모양 만들기), 조각(문양 넣기), 초벌구이, 시유(유약 바르기), 본벌구이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광경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라고 기자를 안내하던 박창래 교장이 알려주었다.

그는 약 12시간 걸리는 불지피기는 내일 새벽 3시에나 끝나며, 그 과정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가 잘 구워지도록 하늘에 비는 경건

한 의식과 같은 행사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장들에게 직접 배우는 것은 어떤 교육활동보다 높은 동기 유발을 일으킨다는 자상한 가르침도 잊지 않았다.

우선 가마에 예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을 시작으로 가마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다. 가마 안에는 학교 초입에서 마주쳤던 학생들의 질그릇들이 들어 있었고 연기가 올라오는 가마를 학생들과 교직원, 도공들이 함께 지켜보는 광경이 여느 고등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이채로운 광경이었다.

### 국내 유일의 도예특성화고교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지난해 3월에 개교한 도예분과 특성화고등학교다. 전교생 97명, 교직원 23명의 소규모 신설학교이지만 지난해 경기실업교육 발전공로학교로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할 만큼 신직업교육 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여건상 특성화고교로서 전문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요즘, 한국도예고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을 통해 양질의 인재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물레성형실, 석고제형실, 컴퓨터 그래픽실, 제도실, 시유소성실 등 도예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시설의 구비, 현직 도예인들을 교사로 투입해 전문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난해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도예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충분히 활성화시켰다. 물론 이천시청의 지원도 한국도예고가 성장하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도자기축제에 한국도예고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 이를 통해 학교 홍보와 함께 학생들의 작품이 외부인들에게 쉽게 공개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도예 분야의 전문학교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설립하여 전문도예인 육성에 체계를 세우고 이들 전문학교들이 지역육성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자율운영에 성공한 지금, 마케팅 기법도 가르칠 예정

자율학교 운영에 앞서 국내에는 도예와 관련된 특성화고교가 없었던 만큼, 시행초기 교육프로그램 편성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실과부장교사 유성욱 씨는 “개교전부터 교사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예 분야의 자율학교는 전무한데다가 신설학교라서 교사는 적고 그렇다고 타학교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서 모두가 전천후로 일을 해야 했지요”라며 “모두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준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털어냈다.



“약 12시간 걸리는 불지피기는 내일 새벽 3시에나 끝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도자가 잘 구워지도록 하늘에 비는 경건한 의식과 같은 행사지요”

우선 자료조사와 현지탐방을 통해 자율학교 모델이 되는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실천교육이 중요한 만큼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실정에 맞는 도예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9개 교과목의 교수학습자료를 교사들이 직접 개발, 활용 중에 있으며 다량의 도예학습자료를 구비, 도예교육과정에 관한 산·학·연 협의회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청강사의 도예특강, 이천도자기축제체험학습 실시, 미술교과 세미나와 연구회도 개최하는 등 자율학교 운영의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박 교장은 “올해는 더욱 세분화하여 전통가마 학습자료, 도자장식 학습자료, 주제에 따른 교수학습모형등의 전공교재 개발과 도자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의 현대적 감각을 살려주는 마케팅기법을 첨가하여 교육과정재편에 주력하고자 합니다”라며 “도예고는 도자 전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학생들이 나서서 도예상품 개발한다

도예상품 개발에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한다도 및 다구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차사랑’, 생활 속의 도자기를 체험하는 ‘토요락’, 미(美)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실내인테리어용 도자기를 개발하는 ‘토나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전공 동아리들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자신의 적성을 간파하여 진로결정에 발판이 되고 향후 졸업생과의 연계를 통해 교부가 가치의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해 줄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험무대인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재학생들을 위해 최대수용인원 112명 규모의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였고 일찍 가정을 떠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협동심을 요하는 래프팅, 서바이벌, 도미노게임 등을 실시, 장애인체험과 도예인 자세교육 등의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한국도예고교도 인문계고교가 아닌 만큼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 도자디자인과와 자매결연 및 연계교육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여주대학 도자기공예과와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천시에 위치한 300여 개의 공방과 여주·광주 지역에서 업체당 1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어 졸업 후 취업을 돕고 있다.

또한 2004년도에는 해외 유사교육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학생들의 유학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 외부에도 개방, 도자교육 중심역할 하는게 궁극적 목표

한국도예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운영은 재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타지역 학생들에게까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체험교실, 각종 도자캠프의 장소로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도예연구소를 설립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원, 도자기 관련 업체직원들의 연수원으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다.

박 교장은 “처음 교사(校舍)를 지을 당시, 흙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관을 따로 설계하고 교실 크기를 다양하게 하는 등의 도자기 전용건물로서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건축했습니다”라며 “이러한 좋은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여 도자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모형을 구안적용, 학교 공원화 계획의 추진, 전통도예 시설설치 및 활용기관 유치, 지역사회 각종 도예 관련 세미나 및 행사 유치, 도예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추진 방안 수립, 도예전시관 행사 추진 등의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을 통해 양질의 인재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물리성형실, 석고제형실, 컴퓨터그래픽실, 제토실, 시유소성실 등 도예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시설의 구비, 현직 도예인들을 교사로 투입해 전문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 박창래 | 교장 | 인터뷰 |

### 도예산업 핵심인재 길러낼 터...

“도예는 은근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고된 예술작업입니다. 유능한 한 명의 예술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 학교장으로서 최대의 보람일 것입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특히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교와 함께 첫 교장 발령지로 오게 된 박창래 교장의 각오는 남달랐다. 30년간 실업과 전자과 교사로 근무한 그는 지난 근무지였던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도예디자인과 교감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선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도예실습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고, 교통이 불편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유능한 교원 유치와 편리하고 규모 있게 꾸며진 내부시설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홍보활동을 펼쳤던 점도 주요했다고 한다.

“도예분야가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성을 겸비한 진정한 전문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랜 교직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제자를 묻는 기자의 물음에 “부천공고 재직시절, 담임으로 맡은 어느 문제학생이 졸업후 15년만에 만났는데 전자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그 지역 유지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라며 “또 다른 제자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아간대학을 힘겹게 다녔는데 지금은 직원수 70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지, 때를 놓쳤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평생 실업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온 그는 “실업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세심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보다 탈락률이 높은 실업고에서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면 졸업후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사장이 돼 든든한 사회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도예에 특기가 있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도예과를 세분화하는 학과개편을 준비중입니다”라며 “도예에 관한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고 그 다음은 가족공동체 같은 느낌을 주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15]

## 윌리엄 파이나(William Pinar)교수



# “자서전을 쓰라”

- ‘나는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았는가’ 살피는 것이 ‘교육’

미국 교육자들이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 나르스에 젖어 있다는 개인적인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기만족적 폐쇄성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0여 년간 많은 교육학자들, 특히 교육과정학자들이 역설해 온 것이 바로 ‘상황성’이 중요하다는 점이거든요. 사람들은 사회적·환경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더불어 개인의 자신, 삶,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영주 | 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이번 호『세계의 석학들은』편에서는 미국의 교육학자 윌리엄 파이나(William Pinar) 박사를 만나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쿠레르’, ‘자서전적 연구’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교육 사상과 이론을 들어보았다. 파이나 박사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의 교수이며, 「교육과정 이해(Understanding Curriculum)」, 「자서전, 정치성과 성별(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외 많은 교육서의 저자이다. 파이나 교수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교육학자들의 전통적이고 제도적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점점 비판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사회 건설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적 사상을 논하는 대표적인 장이 되어 온 버가모 학회(Bergamo Conference)의 창설자이며,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하는 교육이론 저널인 JCT(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의 편집자이다. 최근에는 국제 교육과정 학회인 IAAC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urriculum Studies)와 IAACS 미국지역 학회인 AAAC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urriculum Studies)를 설립했으며, 현재 IAACS 학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지난 2000년에는 미국 교육연구 학회인 AERA가 주는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이나(William Pinar)교수와 이번 만남은 지난 해 소개되었던 슈버트(William Schubert)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슈버트 교수는 “파이나 교수만큼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고, 교육계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는 학자도 드물 겁니다. 교육과정이 타일러 식의 단순한 개발이나 디자인의 대상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넘어, 교육 경험이라는 것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이론은 물론 그 실천과 연구에 대한 재개념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입니다”라며 「교육개발」독자들과 파이나 교수와의 만남(비록 지면을 통해서이긴 하지만)을 추천했다. 파이나 교수가 1970년대 이후부터

과거 교육에 있어서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타일러(Tyler)의 '목표-내용-활동-평가'의 기본 교육 원리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논의하는 데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삶이 주는 경험, 삶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배제된 교육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논하는 데 형식과 제도화된 활동이 아닌 그 속에서 학생의 경험과 삶이 어떠한가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불어넣으며 교육을 보는 관점과 판도를 바꾸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학자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더불어, 또 다른 석학으로부터 절대적 인정과 존경을 얻는 학자라는 점은 그의 학문적 깊이와 신임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파이나 교수와 여러 통의 이메일을 교환한 끝에 때마침 계획되어 있던 교수의 시카고 방문 기간에 맞추어 그와의 인터뷰를 정했다.

파이나 교수를 만난 것은 지난 봄 AAACS 학회가 열리고 있던 시카고의 한 대학에서였다. 학회장에 들어서자 학회 진행을 챙기고 발표자들을 독려하느라 분주한 교수가 눈에 띄었다.

점심을 고사해가며 시간을 내어 준 교수와 학회장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AAACS를 화두로 담소를 열어보았다.

**Q: 이 국제학회를 직접 조직하고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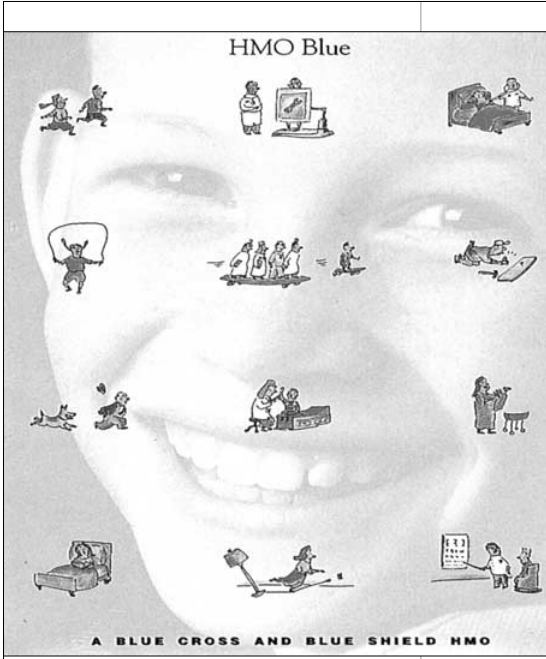
**A :** 미국 교육자들이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 나르시스에 젖어 있다는 개인적인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 1993년 유엔이 주최한 교육과정 분권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 규모의 학회와 1995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앵글로아메리칸 교육과정 학회가 있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학회에서 제가 미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적 관점과 사고를 접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경험이었죠. 그리고는 '나의 사고나 시각이 그 동안 나

자신 속에 폐쇄되어 있었구나' 하는 자성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자기 폐쇄적 성향이 미국 교육학자들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죠. 대개 많은 미국 교육학자들이 국내, 좀 넓게는 캐나다의 교육적 이슈에만 치우쳐 있을 뿐 다른 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외국의 교육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보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의 이 같은 자기만족적 폐쇄성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0여 년간 많은 교육학자들, 특히 교육과정학자들이 역설해 온 것이 바로 '상황성'이 중요하다는 점이거든요. 사람들은 사회적·환경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더불어 개인의 자신, 삶,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넓은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기타 제반 환경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우리들의 존재를 좀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상황성이 중요하듯이 교육자들 역시 상황성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감금하고 소외시키기보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사회나 그룹 속에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스스로 상황적 인식을 높이





기 위해서 다른 나라 교육학자들의 견해나 사고에 귀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것은 전문 교육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교육자들 사이에 교육사상의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미국 교육을 좀더 넓은 국제적 시각에서 볼 줄 아는, 즉 교육의 상황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구나' 하고요. 그게 바로 IAACS이고 AAACS입니다.

**Q :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AERA(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미국교육연구협회)와 학회 시기가 다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AAACS학회가 올해만 이 시기에 열리게 된 건지 아니면 매년 이맘 때 열리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A :** AAACS는 AERA 며칠 앞서 열리고 AERA가 시작하는 날이나 바로 전날 끝납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데, 미국 교육학자들의 참여가 작년보다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이런 국제학회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AERA와 같이 큰 학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이 AAACS에 대해 미국 교육자들 사이에 널리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학회 시기를 AERA가 열리기 바로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6년 파이나 교수는 당시 자신의 학생이었던 마델라인 구르메(Madeline Grumet, 현 브루클린대학교 교수)와 함께 「Toward a Poor Curriculum」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파이나 교수와 구르메 교수는 이 책에서 교육과정은 달려야 하는 코스와 같이 정해진 일련의 계획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커리큘럼(curriculum)의 어원 그 자체인 '쿠레르(currere)', 즉 '뚝다에서 보여지듯이 달리는 동적이고 학습자 주체적 활동으로,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가 하게되는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교육과정을 일년 동안의 학교 수업 계획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교육관에서 크게 탈피한 급진적인 것이었으며, 향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틀이나 형식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제반 경험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번엔 그 '쿠레르'에 대한 설명을 파이나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Q : 교수님께서 '쿠레르'를 커리큘럼의 어원으로서의 분석 차원을 넘어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보적 사고인 '쿠레르'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A :** 그때 당시 저는 학문적으로 존재주의적 사고와 의식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기에 어떤 지적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거

자서전은 삶을 의식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의 의식화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회고하는 것이며 이 회고는 한 개인의 과거 삶에 비친 오늘날 모습이 어떠한가를 일깨워줄 뿐 아니라, 살아온 삶의 노선과 가오자 하는 노선을 고찰하고 사색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책임 있고 선택적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에 있어서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타이러(Tyler)의 '목표-내용-활동-평가'의 기본 교육 원리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논의하는 데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삶이 주는 경험, 삶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배제된 교육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의도했느냐보다 실제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바로 교육이 실천된 현실인데, 이를 배제하고 교육을 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교육과정을 수업 안이라는 도구적이고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경험적 측면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것이 '쿠레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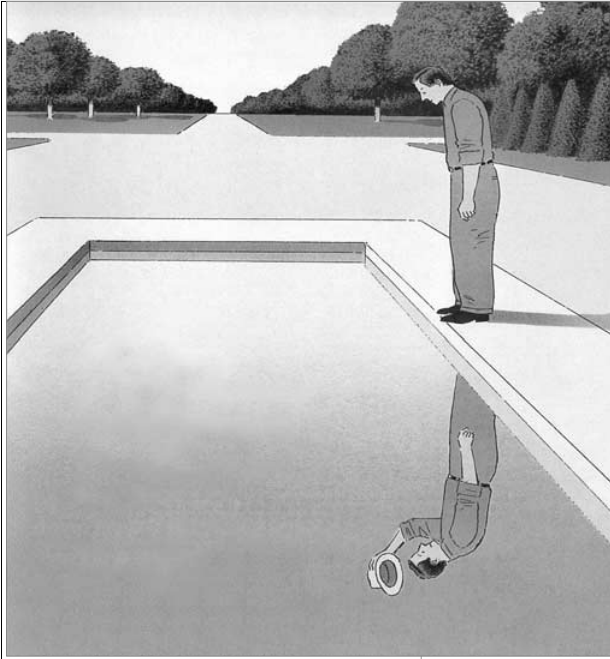
**Q: '쿠레르'의 의미를 좀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의를 내려 주셔도 좋고요.**

A : '쿠레르'에 대해 저 나름대로는 교육과정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쿠레르'의 방법으로 교육 연구에 있어 자서전적 접근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레르'를 소개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개념을 다소 애매하고 모호하게 제시하고 싶었지요. 왜냐하면 '쿠레르'라는 것을 통해 교육과정이 포함하는 요소와 영역, 이들이 갖게 되는 역동 등의 범주가 무한정 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 스스로 '쿠레르'적 교육과정 개념이 교육 논의의 대상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무궁무진한 연구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었습니다. 명확한 정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교육학자들이 교육 경험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데 제가 내세웠던 자서전적 접근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외에 경험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여러 학문적 요소들을 적극 이용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Q: '쿠레르'는 교육과정을 학습자 주체적 경험으로 재개념화하고 연구에 있어 다학문적, 다양한 방법적 시도를 촉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쿠레르'가 학교 교육에 가져오는 변화는 없습니까?**

A : 일반적으로 지금의 학교는 제도적,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고, 교육활동 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하는 도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의 형태를 보면 학교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일정 시간에 일정 교과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하는 인간 자원으로 길러내는 장치라는 색채가 강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지요. '쿠레르'로서의 학교 교육은 지금의 제도적, 절차적, 도구적, 형식적인 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초점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즉,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실제 학생들은 무슨 경험을 하는가,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개개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를 어떻게 내적으로 통합을 하는가 또, 사회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교육 경험과 지적 발달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레르'는 직업준비와 노동력 생산 수단으로서의 기능, 교과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 개인과 경험이 되어지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나 교수는 교육과정을 쿠레르, 즉 인간 존재로서의 경험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쿠레르하는 것은 학습자가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지금까지 쿠레르 해온 삶의 경로와 미래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하고 종합하는 변증법적 절충을 통해 찾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과거-현재-미래 선상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학습자가 쿠레르하는 방법으로 '자서전' 혹은 '자서전적 탐구'를 제시했다. 자서전적 탐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달의 주체가 되게 함과 동시에 살아가는데 의식적인 판단과 행동 주체로 계속해서 쿠레르하게 하는 한편, 이는 교육과정의 연구 대상인 교육 경험의 연구 방법이 되기도 한다.

**Q : 교수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쿠레르'의 방법으로서 자서전을 주창하셨는데, 이 자서전 연구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A :** 자서전은 삶을 의식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의 의식화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회고하는 것이며 이 회고는 한 개인의 과거 삶에 비친 오늘날 모습이 어떠한가를 일깨워줄 뿐 아니라, 살아온 삶의 노선과 가고자 하는 노선을 고찰하고 사색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책임 있고 선택적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적 의미에서 자서전은 과거의 교육 경험에서 현재의 지적·윤리적 발달상황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교육경험을 의식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개인적 존재가 진공 상태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계층적·성(gender)적,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인종적 요소 등 사회의 제반 상황들과 긴밀한 상관을 맺고 이들의 영향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전기를 기술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이 어떤 교육 경험을 통해 어떤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 속에, 삶 속에 투영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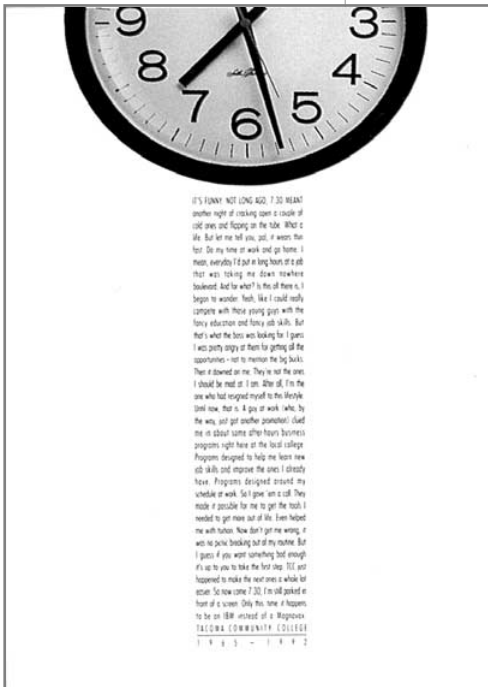
회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서전을 연구하는 것은 '나'의 개별성과 독특한 교육적 행로를 드러낼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의 상황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으로 성장을 보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Q : 자서전은 개인의 교육 경험과 존재의 형성을 연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를 읽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는 연구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행로, 교육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고 교육적 이슈들을 분석하는 건가요?**

**A : 둘 다입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의 경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지적 성장과 사고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싶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 흥미나 경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성격의 것들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했지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자서전을 통해 교육 경험과 인간의 성장, 그리고 공교육의 문제가 가진 딜레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이나 교수는 상황성, 역동적이고 의식적 개념의 '쿠레르', 자서전적 탐구 등의 주제를 통해 교육과정은 관료주의적 체제 속에서 지식 전달의 도구적 장치가 아닌 개방적이고 인간 존재 방식과 성장에 대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 어느새 교수와의 인터뷰를 접을 시간이 다 되어오고 있었고, 끝으로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역시나 교수는 학습자 개개인이 갖게 되는 실제 경험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수는 오늘날 우리 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입시를 위한 경쟁이라는 학교 문화 경험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공존보다는 적자생존과 성공을 다른 이의 실패라는 전제 위에서 규정짓게 하는 왜곡된 사회의식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시험 성적이라는 골레아래 손쉬운 방책으로 가해지는 각종 학생통제 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적 가치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수동적 성향을 갖도록 유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사회 기관으로서 학교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오늘날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즈음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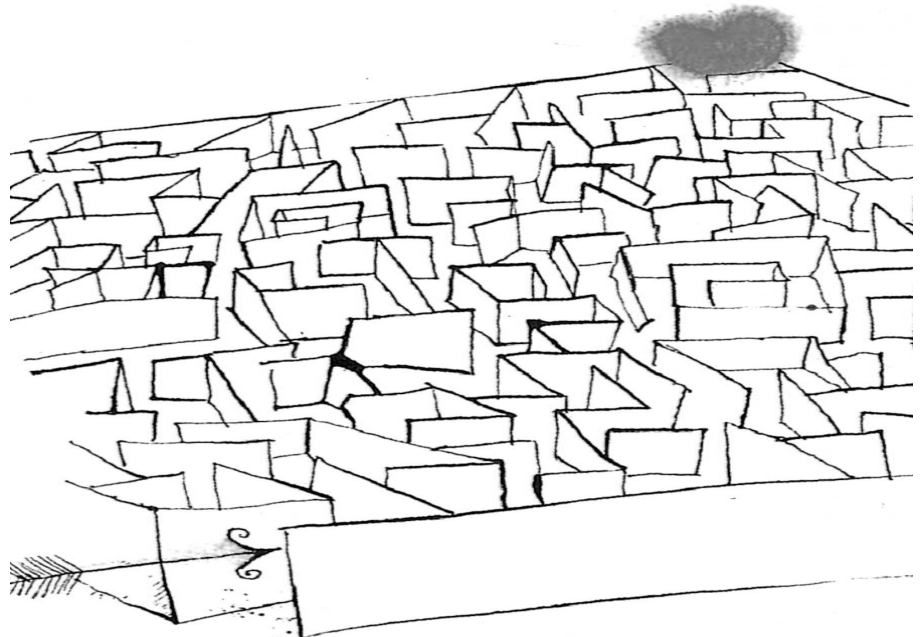


## Project



## ■ 특별기획 : 지방대학, 위기인가 기회인가

- » 참여정부의 새 프로젝트, 그 중심엔 지방대학이 있다
- » 어느 고등학교에 나붙은 “지방대교수 출입금지” 팻말
- » 대학이 특성분야 정하면 정부는 지원정책 정해야 가능하다
  - » 지방대, 등록금 수입으로 겨우 버틴다
  - » 의외로 지방대 취업 적응력, 수도권 보다 높다
  - » 교수인가, 세일즈맨인가
- » 성공한 지방대 교수들, 이렇게 뛰었다
- » 천민, 이것이 지방대생의 新신분이다





# 참여정부의 새 프로젝트, 그 중심엔 지방대학이 있다

- 참여정부의 지방대학육성정책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장기원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jkw19@hanmail.net

90년대 정보통신혁명이 가져온 지식기반사회, 세계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를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면서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으로부터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교육기관으로 급속히 팽창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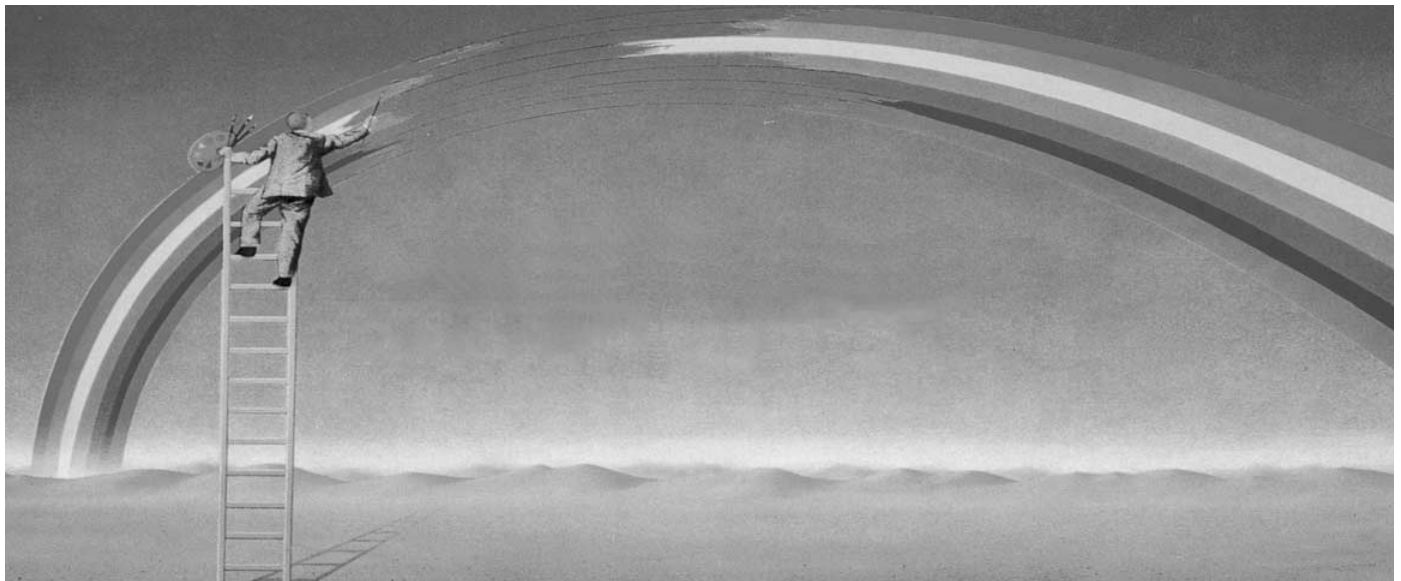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대규모 집적 산업 등 제조업 위주 경제체제는 국가 전략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문화적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산업과 문화, 학술의 요람지 역할을 수행해온 지방대학은 갈수록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우수 인재가 취업이나 사회적 인지도를 이유로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공동화 위기에 처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동반침체를 가져오는 복잡한 악순환 구조에 직면해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중심에 지방대학을 두어 자립형 지방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정부는 반성한다

지방의 우수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 357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은 65.5%인 234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능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의 68.8%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지방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국가공공기관의 84%, 30대 기업본사의 88%, 정보통신업체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대학과 지역내 산업체, 지자체 등과의 교류협력도 부족한데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경쟁력이 약하여 매우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수한 교수와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교육·연구와 혁신역량도 부족하므로 지역에서 지식창출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책은 전국의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지방대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단년도 재정지원사업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도 어려웠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의 지방분교 증설, 대학 정원의 증원, BK21사업에 따른 지방대 대학원의 침체 등을 초래함으로써 지방대학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추진하는 사업간 연계도 미흡하여 제한된 투자마저도 비효율과 중복이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심사·평가됨으로써 지역의 특성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역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대학내부사업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계획과 부합되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상은 소극적으로 지

방대학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지방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지역인재의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해 내며 이에 따라 자본과 사람이 다시 지역으로 모여드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영역을 망라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산·학·연·관의 혁신주체들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다. 사업의 추진절차나 재정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방대학 지원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지역산업, 문화 발전의 핵심주체로 키우기 위한 국책 시범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성격과 취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과 지역산업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NGO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기획, 집행, 평가하는 상향식(bottom-up) 민주주의형 사업이다.

둘째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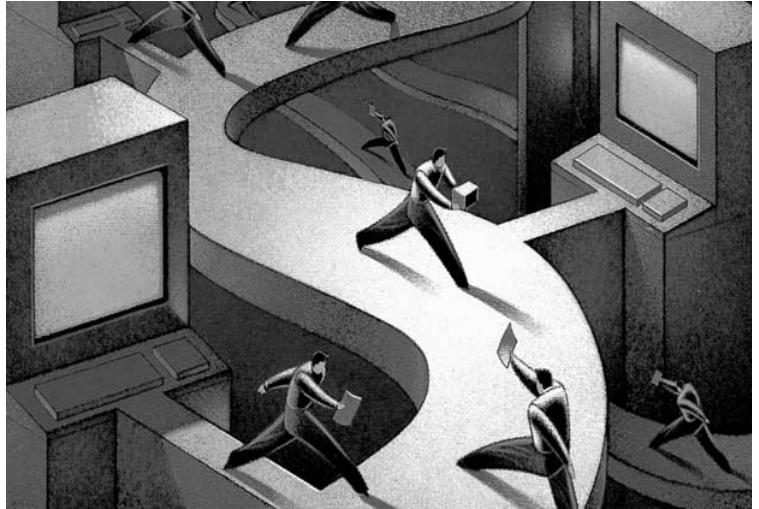
다는 점이다. 취약한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산업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특성화 분야를 다년간 계속적으로 중점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지방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단순한 지방대학 육성이 아닌 지역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BK21사업', '대학 다양화·특성화 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수·학생 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대학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발전전략과 결합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재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다시 인재의 지방정착,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부의 'RRC사업', 산업자원부의 'TIC사업' 등 타 부처의 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대학 내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산학협력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방식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의 기본 단위는 사업단이다. 사업단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산업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참여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별로 지역의 인력수요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단이 마련한 사업계획은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의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선정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심의기구 형식으로 출범하되,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광역



단위 수준에서 구성·운영되도록 하나 필요할 경우 초광역 단위 협의회 및 시·군 기초단위 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지역 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경제계, 학계, NGO 및 언론계 등에 분산한다.

중앙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선정하도록 한다. 사업계획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전문위원회 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평가단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권역별로 사업단 선정案을 마련한다.

이러한 사업단 선정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의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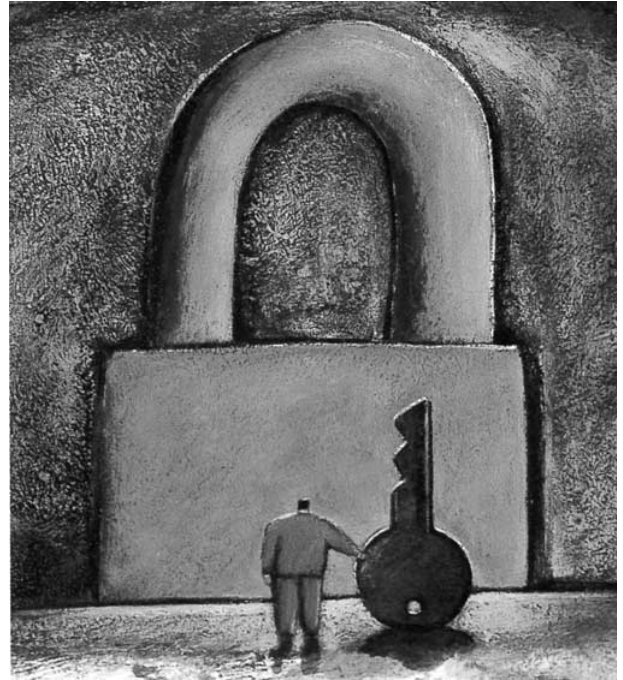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게 선정된 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중간평가 및 집행상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한다. 특히, 수시평가를 통하여 부실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우수 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사업단간 경쟁체제를 유지한다.

사업단이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농학, 공학, 문화, 환경 등 폭넓은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 지역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작지만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연구소 유치 및 연구수행, 우수교수 초빙, 산학협동 프로그램, 학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연구소의 대학내 유치와 산학협력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식품공학분야 기업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연구인력과 교수인력의 공동 활용,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연구 및 연구성과 분배에 대한 계약 체결을 통한 연구와 상품과 지원, 대학원 석박사 인력의 산학협동 연구 참여와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작은 규모의 사업계획을 예로 들자면,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전문대학과 기업간 연계사업을 들 수 있다. 관광 안내와 통역, 호텔 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학과 학생의 기업 인턴제 기회를 보장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을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 그리고 필요한 첨단 어학훈련 장비 및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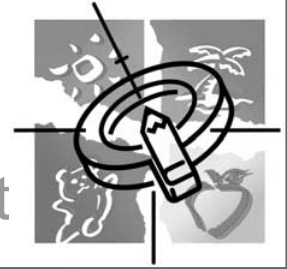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대학 내부 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 스스로도 대학내,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계획과 부합하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구조와 학벌주의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대학이 지역 혁신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의 내부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특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 정원 및 설·폐정책을 개선하



고 대학간 제휴·연합, 경영이 어려운 대학의 퇴출경로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고 한다.

또한 폭넓은 기초학문의 습득 후에 전문분야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의·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면허 관련 분야 및 경영, 교육, 법률, 행정, 정보통신 등 전문직업분야에 대하여 전문 대학원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기반의 산학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동법은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된다.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체결, 특허권의 대학 귀속, 학교기업 운영 등이 가능해지므로, 대학은 적극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시스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내 혹은 대학간 협동과정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joint degree)과정 등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사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촉진하려고 한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기숙사 등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대학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편입제도도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수업적 평가시 우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하고 연구와 주거기능을 겸비한 권역별 「복합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교수의 안정적인 지방 근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학생과 우수교수 유치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인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년내 입법 추진 예정인 (가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방대학 육성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대학 재정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

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정부의 최고 국정과제는 국가 균형발전**

우리 대학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양적인 시대에는 충분히 부합하여 왔다. 이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역사적 도전을 받고 있다.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재정투자가 절실한 때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우선 목표로 삼고 그 중심에 지방대학을 두고 있다. 지방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실천할 혁신 주체로서 거듭날 때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혁적인 자세, 내부 시스템의 유연화, 대학 외부환경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하여 부단한 변화의 노력을 추구해 나갈 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어느 고등학교에 나붙은 “지방대학교수 출입금지” 팻말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합병,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전하성 | 경남대학교 기획정보처장, hschun@kyungnam.ac.kr

## 신입생 유치하러 다니는 “지방대학교수 출입금지” 팻말

“대학들, ‘신입생 유치 전쟁’ 돌입”이라는 제하의 기사처럼, 지방대학의 정원미달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2003년도 지역별 입시 결과에 따르면, 전북(29.0%), 전남(27.4%), 경북(26.7%), 제주(24.6%), 강원(21.9%), 광주(21.7%) 지역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대학의 경우 수도권의 미충원율이 1.2%임에 비해, 지방은 12.9%로 10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1.4% 대비 25.7%로 그 차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수도권 미충원이 2,868명인데 비해 지방의 경우 75,923명으로 26.5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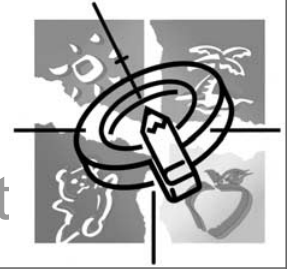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미달사태가 심각한 지방대학 교수들의 경우 감봉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일선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입생의 공급원인 고교에서는 대학마다 보내오는 각종 입시관련 홍보물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 통으로 집어던지고 만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어느 고교의 3학년 부장선생의 말마따나, 신입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연고가 있는 고등학교를 기웃거리는 대학교수들의 학교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으로 “대학교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나붙는가 하면, 여행과 향응 제공, 담임교사 추천에 따른 사례비 제공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문제는 이미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될 당시부터 예견된 사실이었다. 대학입학 적령인구(만18세) 수는 1990년 788,841명, 2000년 634,452명, 2002년 619,232명으로 감소했으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정원은 1990년 344,480명, 2000년 656,133명, 2002년 668,636명으로 증가해 왔다. 대학자율화 확대정책 기조 아래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자율적인 규제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 이상 교육여건을 갖추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는 ‘정원자율화’ 조치에 따라 계속 정원 확대를 기했다.

한편, 대학에서 획득한 전공지식이 산업체에서 불과 1/4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어느 조사기관의 보고서 내용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대학이 배출하는 졸업생에 대한 상품성이나 경쟁력의 현주소는 말이 아니다. 결국 기업은 재교육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84%, 30대 기업 본사의 88%, 정보통신 업체의 89%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기업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학에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수도권 대학을 중히 여기는 우리의 학벌중시 사회도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난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우수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 하고, 지방대를 졸업하고도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함은 인지상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의 유출로 지방의 경우 악순환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교육시장 개방압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의 시대에도 성장 지상주의와 백화점식 학과 니열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결국 오늘날의 지방대학의 위기는 외부적 요인 못지 않게 대학 스스로가 초래한 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이들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구조조정 측면과 대학간의 인수합병 측면, 이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신입생 유치' 보다 '재학생 관리'**

오늘날의 구조조정은 위기국면에서만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직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강구되는 일상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할 때, 신입생 유치(input) → 재학생 관리(process) → 졸업생 배출(output)과 같은 간단한 흐름을 연상해 볼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구

지 고교 등으로 교수들을 내모는 것과 같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는, 구조조정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재정에 직결되는 신입생 유치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세스단계인 재학생관리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축과 이를 실행해야 하는 구성원의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 아닐 수 없다.

마침 지난 5월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에서 개최된 8개 지역 대학연합회의(제19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에서 토론 주제로, "지역대학 육성방안"이 다루어졌다. 여기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 중 대학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취업성과 제고, 재정역량 강화 등의 방안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취업성과 제고 방안**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2~3%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일자리 또한 약 15만~20만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발전, 그리고 특화된 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의 동인 없이는, 대졸자 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묘책은 있을 수 없겠지만,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만 가진다면 실시 가능한 구체적인 실무방안들을 중심으로 취업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의 대응이다. 기업의 채용패턴이 점차 경력자 중심 채용방식과 결원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수시 채용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졸자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취업난은 더욱 가중된다. 특히 채용회사가 대기업군일 경우 수도권 일부 대학과 지역권 대학 중 1개 대학 정도만 교내 리크루팅을 통해 지원자를 선별하거나 지원서를 한정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수많은 입사지원서에 대한 필터링과 정으로 학교, 전공, 학점, 토익점수를 계량화해 서류전형울

함에 따라 등급화된 학교 점수가 서류전형 통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지방대학 독자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기업이 지방대학 출신자의 인턴 채용 및 고용계약 체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함으로써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이 더 이상 폐쇄적 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채용정보의 입수나 추천업무는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취업행정부서의 일로 간주한다. 때문에 전공분야와 연관된 채용정보 입수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적극적인 학생 추천·알선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교육결과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졸업자의 취업상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떨어지는 것 같다. 결국 전공별 졸업자의 취업상황에 대한 자료 분석 및 관리가 소홀해지고 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산업수요 현장의 니즈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조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공별로 재학생들과 함께 교수들은 취업이 가능한 지역권 내 우량 중견·중소 기업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분류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업 방문활동을 통해 채용정보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추천·알선뿐만 아니라 취업 후 추수교육 등과 같은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연, 지연 등과 같은 과거의 교수 개인적 연고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방식을 벗어나 프로젝트 수행관계, 자문관계 등과 같은 대외활동에 따른 사회적 연고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를 학생들의 추천·알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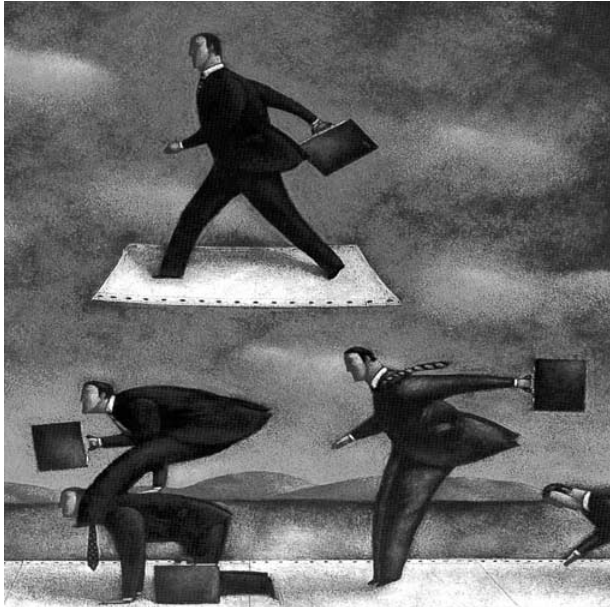
셋째, 부실한 전공교육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현장과 괴리된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직업세계, 예컨대 다양한 직종의 생성·소멸과 같은 내용에 다소 둔감한 편이다.

위기의 시대,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과감한 전환과 수요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과 풍부한 감성으로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과 다문화주의적 균형감각을 지닌 리더십도 길러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향적 주입식 교육형태를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형태로 전환해야만 한다.

교양교육과정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교양세미나를 운영하면서, 학생 개인 또는 팀 경연대회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표관리를 일상화하고 역할 체험, 집단 토론, 창의적 자기 표현 등을 통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전공교육과정에서는 현장감각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또는 실습교육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현장체험은 낭비적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겸비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발명 또는 창작, 개별 연구과제 수행, 팀별 연구과제 수행 등과 같은 개인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공심화과정과 연계전공을 통





해 개인적 차원의 전공 프로젝트 결과를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연계고리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 봉사활동이나, 국내 및 해외 현장체험 등과 같은 취업체험도 두루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전공관련 기업체 실무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거나, 교수들의 연구년을 국내 산업체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동아리형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나아가 졸업 후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평생사제 동행제도도 도입해 보자.

넷째, 학생들의 취업의식 강화이다. 많은 학생들의 경우 취업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 또한 부족한 편이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일과 향후의 비전'보다 '편하고 쉬운 일 즉, 근로조건과 지역권내 근무'에 집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진로상담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전공별 재학생 경력관리 및 취업통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재학생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수준의

이력서가 아닌 개인능력서(qualifications brief)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구직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졸업자들의 취업처, 근무지, 업종, 근무직종 등을 전공별로 교수들이 직접 관리하고 자료화함으로써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재정역량 강화 방안**

신입생 충원의 미달사태는 대학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2001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사립대학의 본예산 대비 등록금 수입비율은 평균 68.85%이다. 그 결과 미달사태가 심각한 대학은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 교수 급여부터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달사태에 직면한 지방대학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정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 재정역량(Financial Competence)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획득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다시 재정보호역량(등록금 확대, 비정규수입 증대, 기부금 증대, 발전기금 모금 등)과 재정운용역량(분배의 효율화, 예산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재정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생 이탈률을 줄일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간의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과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과정 수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평생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을 책임경영제 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산학연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동문관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운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성화의 기본 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경영체 아래 내부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위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이어 적절한 권한의 이양,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과 처벌이 일반화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예산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제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타조직과의 과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절감 요인 또한 강구해야 한다.

**인수합병, 일본과 중국에선 이미 활발하다.**

인수합병(M&A)의 유형은 먼저 대학간 M&A와 학부(과)간 M&A처럼 범위의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학부(과)간 M&A는 대학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비해, 대학간 M&A는 선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들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다. 또 경영학적 관점에서 M&A의 유형을 대학간 M&A와 조직적인 제휴·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간 M&A는 통합 이전에 각자가 보유한 학문 분야를 학제적으로 융합시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이며, 조직적인 제휴와 연합의 경우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복수 대학이 연합하는 경우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대학간 M&A가 활발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독립법인화를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01년에는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가 통합을 결정했고, 야마나시대학과 야마나시의대의 통합도 합의됐다. 올해는 도쿄상선대-도쿄수산대, 고베대-고베상선대 등이, 2004년에는 후쿠이대-후쿠이의과대, 시마네대-시마네의과대 등 28개개 대학이 통합에 기본 합의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대학 통합이 활발하다. 오는 9월 광저우 지방에서 중산대학과 중산의과대



학이 통합, 개교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1992년에 556개였던 고등교육기관들이 통합돼 2000년에 232개로 대폭 줄었다. 무려 32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감소됐으며 결과적으로 교수·교육·학교경영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간 M&A는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대가 부경대로 통합된 사례에 이어, 2001년에 2년제 공주문화대가 공주대에, 2년제 지산대가 부산가톨릭대에, 그리고 2002년 전문대인 성심외국어대가 4년제인 영산대에 통합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한때 국립대학간의 M&A에 대한 시도도 있었지만 정권교체기와 더불어 유아무아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이 연합대학 설립을 전격 선언하면서 지역 국립대의 새로운 공존전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간 M&A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해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모델 개발과 대학간 M&A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록 대학간 M&A나 구조조정이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해산이나 구조조정 펀드 구성 등과 같은 적법한 제도의 마련이 필연적인 만큼, 당분간 지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퇴출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퇴출이 용이하도록 채무 및 교원문제, 학생처리 규정 등을 삽입하는 등 현행 사립학교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대학간 M&A는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교육의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이나 고도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도록 재편된다면, 사립대학은 산업수요 및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를 통한 전문분야의 분업화에 치중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때는 지역 내 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재도 피폐한 지방대학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지역별 균형 문제를 따질 때 현재의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인구나 면적은 물론,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거지 평균지가, 제조업 종사자 비율,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실업률까지도 주요 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자본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지방대학의 위기를 대학의 몫으로만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대학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대학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M&A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사업 정책은 지방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함으로써 이에 따라 자본과 사람이 지역으로 모여드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역 R&D사업의 통합적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또는 지역소재 대학마다 기본 인프라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사한 영역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자원의 최적배분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역할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와 상호 조정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틀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의 양방향식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대학을 진정한 지역 R&D와 산학협력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사업 선정에서부터 선정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분배의 투명성이 실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단순히 지방대학

차원만의 육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지방산업의 육성전략을 함께 결합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신규의 국가 R&D 투자는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것이 지방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이 선택한 중점 육성분야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활동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산업·문화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야 한다. 지역혁신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합의에 의해 대학간 역할 분담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원 및 연구소 수준의 R&D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재학생의 수도권지역으로의 이탈을 억제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국비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현행 편입학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우수 연구인력 및 교수의 지방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업적 평가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로 연구실적 위주의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전담교수와 연구계약교수 등 교원임용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서열 매김 중심의 대학종합평가제도나 학문영역평가제도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수인력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못지 않은 자녀교육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므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연친화형 대안학교 등의 설립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육문화 인프라의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표명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주관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국공립과 사립대학이,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는 듯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여겨라”의 마음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학이 우수인력과 연구성과의 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 지역으로부터 입학자원과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구성원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혁적 자세, 내부 시스템의 유연성, 대학 외부와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만이 오늘날의 총체적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소득 2만불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리라 본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 우리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일을 서둘러서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장고에 장고를 거듭할 수도 없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겨라(行百里者半於九十)”라는 어구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각 대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구조조정의 그림을 완성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학이 특성분야 정하면 정부는 지원정책 정해야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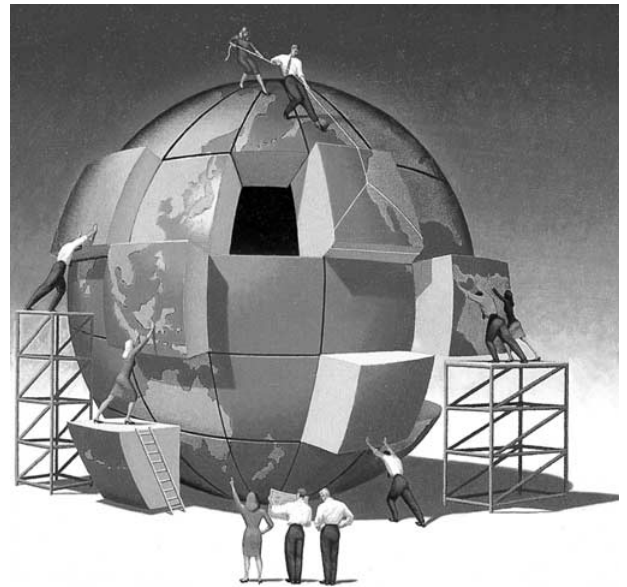
- 지방대학의 위기극복과 특성화 추진

김종웅 | 대구한의대학교 기획처장, kimcu@dhu.ac.kr

지방대학의 위기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연되어 있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그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진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질적인 변화가 미미했던 관계로 우리의 대학교육을 외면하는 고교졸업생들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고등교육 그 중에서도 지방대학의 위기상황과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위기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수도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등교육의 위기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인 인프라와 경영능력이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에 비해서 열등함으로써 많은 인재들이 외국의 대학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대학만이 안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이는 개별대학들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지방대학들이 입학자원의 감소로 겪고 있는 경영상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는 고교졸업생 수의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지방출신 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또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입학관련 자료를 보면, 2000년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의 입학자 중에서 지방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48.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외에도 학생과 산업체 등의 수요자보다는 교수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내용과 지역발전 및 지역산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대학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의 진행순서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제시한 다음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지방대 위기, 이미 10년전 예견했던 일

요즘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15년 이상을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가 21세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10여 년 전부터 대학 입학자원을 연구한 보고서

등에서 생산물의 감소와 대학의 정원확대 등을 고려할 때 2000년을 넘어서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왔다. 또한 국제화의 진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높아진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외국으로의 인재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대학교육의 예견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대안 마련이 교육당국과 대학의 무지와 방관으로 인해 지연되고 외면되어 왔다는 점이다. 필자 또한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지방대학들의 위기상황은 주로 입학정원의 미충원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대학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대학 소재지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대학이 속한 자치단체의 크기(시·군·광역시 등), 대학의 설립주체(국립 또는 사립) 등에 따라서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의 내용은 구분된다. 예를 들면 지방국립대학들은 대부분의 지방사립대학들이 겪고 있는 정원 미충원의 문제보다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우수 인재의 확보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대학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려움의 발생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부적 요인으로 많은 대학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즉 지방대학의 교육주체인 교수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대학진학률의 증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변화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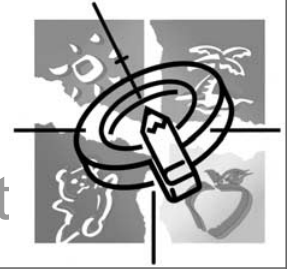
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편승해 안주함으로써 자기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역사와 같은 여건을 가진 대학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과 사회적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고교 졸업생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준칙주의에 의한 기준미달의 대학설립과 무리한 정원확대정책을 펴온 교육당국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방치함으로써 50%에 가까운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생산물의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의 감소와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내입학자원의 해외유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 대학은 자기혁신 강행해야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은 복합적인 요인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 또한 획기적인 묘안이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위기는 현재의 대학교육이 국내외의 교육 수요자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물 감소와 대학정원확대로 대학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도권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로 인한 지방출신 고교졸업자의 수도권유출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질적으로 대학의 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존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해답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대학의 존립을 위한 성급한 처방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수의 고교졸업자들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대학이 학문위주의 엘리트 교육으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교졸업생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에는 대학의 역할 또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용지식위주의 보



통교육을 하는 실용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거나 적어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동일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경쟁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대학간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했다. 이는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대학의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에만 관심

을 가지게 함으로써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의 중복투자로 교육내용의 질적인 수준의 저하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대학기능의 부실화는 대학이 사회의 변화를 리드하는 혁신의 구심체가 되기보다는 변화에 끌려가면서 사회적 요구로 피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혁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대학은 이성적이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학교육의 대중화시대에 걸 맞는 자기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학교육이 학문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전문화된 실용지식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내외 타 대학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고려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특성화전략을 선택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연간 약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대학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고등교육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들은 장기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혁신을 서두를 때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다.

**지방대 특성화, 대학·정부 각각 하는 일 있다.**

지방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특성화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방향과 전략들이 성공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구비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지방대학의 모습이 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합작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제시된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특성화를 지향하는 대학들이 특성화분야를 선택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주체인 대학과 정부가 정책 입안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 다음 정부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 1) 대학의 추진전략

첫째, 각 대학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적인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부에 평가기구를 구성해서 활용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학 내부의 조직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선택할 때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여건 및 변화요인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의 선택이 필요하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대학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서비스가 사회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외부적인 여건이란 대학 주변의 국내외적인 환경, 즉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학과 관련 있는 총체적인 여건을 의미한다.

물론 대학이 구상하고 있는 발전모델에 따라서 외부여건에 대한 가중치는 달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인재들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국내의 고교졸업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으로 지역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기



때문에 대학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사회적 수요와 대학간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고려한 다음 대학이 집중하고자 하는 특성화 분야를 단수 또는 복수로 결정해야 한다. 특성화 분야의 숫자는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거나 대학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앞으로 구성될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대학간의 협의체를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그 성공여부가 대학 구성원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 민주적, 공개적이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조직이 교수중심의 학사조직과 직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동안 많은 대학에서 대학의 중요한 문제들이 의사결정과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규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알아본 사항들이 대학이 특성화전략





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할 사항이라면 아래 사항들은 고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부의 추진전략**

첫째,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의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 적합한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대학 특성화의 추진도 한 가지 방안이지만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은 고려할 때 대학교육의 가치와 목적 등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중심 또는 학부중심 등 두세 가지로 단순화되어 있는 대학의 발전모델도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등교육을 양분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물론 이는 대학간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학사회의 공론을 수렴하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례로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중심으로 사립대학은 응용학문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을 도립 또는 시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운영이 국민들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 국립대학들의 시립 또는 도립화는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지방 국립대학의 시립 또는 도립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지방 국립대학의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정책결정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국립대학의 시립 또는 도립화로 추가되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은 현재의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분을 자치단체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틀을 정립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서비스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대학설립의 준칙주의에 의해서 수준미달의 대학들이 생겨난 것처럼 이런 대학들이 도태될 때까지 상당기간동안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이 될 것이다. 현재 교육서비스 시장이 교육수요자의 감소로 공급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과장 및 허위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가칭 '대학특성화추진특별법'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추진기구와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그 동안 고려되었던 지방대학 관련 특별법이 수도권대학과의 형평성 등으로 법안의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특성화추진특별법' 이 명분과 내용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로 다른 이름으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특성화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과 정부당국이 조화롭게 대학의 특성화를 성실하게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사회의 혁신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리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대학교육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과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40]

# 지방대, 등록금 수입으로 겨우 버틴다

-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정종택 | 한국지방대학총 · 학장협의회 공동회장/충청대학장, jt@ok.ac.kr

## 지방대 미충원율, 수도권 보다 14배나 높다

현재 전국의 357개 대학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은 234개로 65.5%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은 이보다 약간 낮아서 62%내외를 보이고 있다(장기원, 2003).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미달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정원 미달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대학입학 대상연령인 18세 인구(633천명)는 현재의 대학정원(655천명)보다 더 적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에는 현대 대학정원의 73%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결과에 의하면 수도권대학의 미충원율은 1.3%에 불과하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18.3%로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뿐 아니라 지방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 편입에 따른 학생유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수 인력일수록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999년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자중 48.8%가 지방고교 출신자이고, 2003년 수능 상위 4% 성적자 중 41.7%가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한 반면, 18.9%만이 지방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에 잔류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지방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업률 측면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첫 일자리를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첫 일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각종 고시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 진출하는 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방대학 졸업생이 질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지방대학이 오늘날과 같이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중앙집권과 수도권 인구집중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와 경제개발 전략에 따른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다. 권한, 재정,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약1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의 84%, 30대 대기업 본사의 88%, 정보통신업체의 89%, 외국기업의 75%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상주인구는 2.5배, 기업체 수는 73배, 금융기관수는 300배나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의 급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4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정원자율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이 급증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국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761,922명에서 773,122명으로 불과 11,200명 증가했으나, 전국의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350,413명에서 641,950명으로 291,527명이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수도권대학의 정원 증원은 억제된 반면



지방대학의 정원은 증가되었으며, 지방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율이 급증하여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부족이다. 지금까지 지방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학특성화와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늘의 지방대학 위기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 지역혁신체제구축 등의 자체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을 살리려면 먼저 지방대학을 살려야**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 살리기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경제의 위기와 문화의 위기를 초래하여 지방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권의 과도한 집중은 교통체증, 공해의 증가, 범죄의 증가, 지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고비용과 저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쇠퇴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고, 국민이 화합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지방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방대학의 역할이다. 지방의 황폐화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낳았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지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중추기관이다. 지방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지역발전과 비전을 창출하는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대 재정, 거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4년제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수입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입·기부금액중 재단 전입금비율은 8.5%선이고,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비율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표 1〉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비율현황

(단위: %)

내역 / 년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I. 운영수입	60.7	60.8	61.0	90.3	88.1	89.8
등록금 수입	44.4	44.1	42.0	61.9	60.2	64.3
전입·기부금익	10.8	10.5	11.8	21.1	20.6	20.0
교육부대수입	1.6	1.4	1.8	1.9	1.9	1.8
교육외 수입	3.8	4.8	5.5	5.4	5.3	3.7
II. 자본 및 부채	38.1	37.8	36.5	4.9	5.0	6.5
투자외 기타자산	5.5	5.6	6.0	3.1	3.5	5.5
고정자산 매각수입	0.1	0.0	0.3	0.0	0.0	0.0
유동부채입금	31.7	31.1	29.3	0.2	0.1	0.0
고정부채입금	0.8	1.1	4.0	1.5	1.3	1.0
III.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1.3	1.4	2.5	4.8	6.9	3.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교육 외 수입에는 1995년 이전은 기본재산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이 포함됨.  
 2) 해당연도 결산자료 합계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해당년도)교육통계연보, 엄영석(2002)에서 재인용.

4년제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지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운영지출 중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01년에는 전체 지출의 37.5%에 달하고 있다. 연구·학생경비와 관리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운영수입이 전체수입의 89.8%인데 비하여 운영지출은 72.6%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수입이 운영지출보다 17.2%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운영수입으로 운영지출을 충당하고 나머지로 고정자산 매입 등 자본 및 부채지출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 등록금(64.3%)이 보수

〈표2〉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지출 비율현황

(단위: %)

내역 / 년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Ⅰ. 운영수입	46.8	43.9	44.3	64.4	62.6	72.6
보수	24.9	23.7	22.9	36.7	34.3	37.5
관리운영비	5.6	5.7	6.9	8.7	8.8	10.4
연구·학생경비	15.6	14.1	15.1	18.1	18.2	22.5
교육외 비용	0.7	0.5	0.3	0.4	0.7	0.5
전출입·예비비	0.0	0.0	0.0	0.5	1.7	1.7
Ⅱ. 자본 및 부채	35.2	37.0	36.5	29.4	29.9	26.1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8.7	9.7	13.8	8.5	8.5	3.1
고정자산 매입지출	11.1	12.4	13.5	20.0	20.3	22.1
유동부채 상환	14.5	14.2	12.1	0.1	0.1	0.1
고정부채 상환	0.9	0.8	0.6	0.8	1.0	0.8
Ⅲ.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18.0	19.0	19.2	6.2	7.5	1.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해당연도 결산자료 집계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해당년도)교육통계연보, 엄영석(2002)에서 재인용.

와 관리비(47.9%)를 충당하고 연구·학생경비(22.5%)의 큰 부분을 충당하고 있어서, 대학운영에 있어서 등록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 운영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학은 높은 미충원율, 휴학, 편입학 등 학생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대학에 비해 일반 기부금과 연구기부금이 적고 모금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대학의 경우도 비슷하며, 오히려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동창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기부금도 기대할 수 없어서 등록금 의존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지방대는 작은 국고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

4년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2000년의 경우 총 9,508억원이며, 이중 일반지원이 6,908억원(72.7%)이고 특수목적지원이 2,600억원(27.3%)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 평가에 의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3〉 정부의 4년제 대학 지원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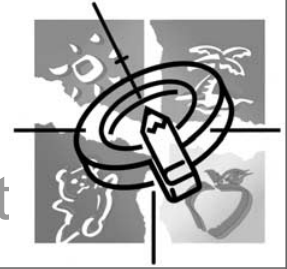
구분	내역 /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일반 지원 사업	교육차관 지원사업	1,651	1,696	1,956	2,010	1,170	
	학술연구 조성사업	900	1,200	1,000	1,008	1,200	
	박사후 연수과정 사업	80	80	80	80	80	
	외국석학 공동연구 지원	25	25				
	전국단위 연구소 지원	19	29	25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195	200	152	237	306	
	박사과정생 지역연구지원	2	4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5	5	5	4	4	
	신진연구인력 장학금 지원	9	15	14	10	10	
	대학생 학자금 지원	78	75	79	128	451	
	사립대학 시설확충 융자이자	1	1	1	0.2	-	
	산업대학 시설지원	251	313	283	259	272	
	대학시설 지원	2,055	2,381	1,965	1,851	2,112	
	공·사립대학시설·설비 확충	1,050	1,250	1,100	850	800	평가
국·공·사립대학 자구노력지원	600	540	450	450	450	"	
대학생 학·예술활동 지원	2	4	5	3	3		
사도장학금 지원	138	141	138	62	50		
특수 목적 지원 사업	대학원 중점육성 지원사업	200	200	170	170	-	평가
	국제전문인력양성	200	200	160	100	100	"
	이공계대학 기자재 첨단화	150	170	170	119	120	"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300	270	200	200	200	"
	지방대학 특성화	-	180	150	150	150	"
	산업대학 특성화	-	-	20	25	30	"
대학원 연구 중심대학 육성	-	-	-	2,000	2,000	"	
계	7,911	8,797	8,123	9,716.2	9,508		

주: 사립대학과 관련된 재정지원 현황임(국립대학 재정지원사항은 제외됨).

자료: 송기창(2000),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엄영석(2002)에서 재인용.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0년의 경우 총 1,664억원이며, 이 중 일반지원이 780억원(46.9%)이고 특수목적지원이 884억원(53.1%)이다.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부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사립 약 76%이고 전문대학은 무려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교육열을 단기간에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립대학 설립을 확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GDP대비 공부담 고등교육 투자는 0.6%로서 OECD 국가 평균(1.2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4〉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특 수 목 적 재 정 지 원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10,000	10,000	30,000(15,000)	15,000	15,000
	우수 자연계 연구소	3,000	3,000	4,600(2,500)	2,400	2,400
	특성화 프로그램	8,000	30,000	63,500(33,500)	40,000	40,000
	구조조정	-	-	5,540	3,000	3,000
	주문식 교육	-	-	20,000(10,000)	15,000	15,000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	-	11,000(6,000)	6,000	6,000
	실업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	-	-	6,000(3,000)	4,000	4,000
	신직업문화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	-	200	1,000	1,000
	교육 육성 실고생 경진대회	-	-	210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	-	4,000	3,000	2,000	2,000
소 계		21,000	47,000	144,050	88,400	88,400
일 반 재 정 지 원	전문 대학지구 노력비 중 일반지원	10,000	10,000	-	-	-
	공사립전문대 실험기자재 확충	63,800	75,000	(70,000)	70,000	70,000
	전문대학 실험실습비 지원	3,200	3,178	3,500	8,000	8,000
	전문대학교원 산업체연수 지원	-	800	-	-	-
소 계		77,000	88,978	3,500	78,000	78,000
총 계		98,000	135,978	147,550	166,400	166,400

주: 1999년에는 지원 차등 폭의 확대를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 700억원을 평가 사업에 합해 지원했으나(괄호로 처리했음), 2000년부터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해당년도)전문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 정지선(2001)에서 재인용.

규모와 지원방법이 달라져서 일선 대학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방법에서는 일반지원사업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지원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일부대학에 편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원금의 성격도 대부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지출목적도 경직되어 있어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많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로 나누어진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있어서 국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금액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지원형태도 특수목적지원이라든가 평가에 의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일부 사립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많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작은 국고지원이나마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대학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정원미달 대학이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여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의 질이 재정지원을 능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대학에 필적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만이 지방대학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원금의

**‘정부입법방식’ 보다는 ‘의원입법방식’ 추진해야**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선공약에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 수준 확대’ 제시와 관련하여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대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현재 GDP 대비 0.5% 수준(3조 246억원)을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0%(7조 8,157억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김진영, 2003).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향후 5년간 누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한 예산, 경제 관계부처의 반대와 고등교육재정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지방대학에 한정하여 정부의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줄이고, '정부입법 방식' 보다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지방대학의 총·학장 100여명은 지난 5월 2일 충청대학에서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가칭)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현재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28%에 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13조 1,435억원)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3%(11조 3,910억원 : 초·중·고교에 배정)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은 정부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증액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방대학 육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3% 내외의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회의원 140여명의 동의를 받아 놓고 있다.

지방대학육성을위한교육재정교부금법(안)

- 제안이유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학생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져 지방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대학 교육의 황폐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위기를 막고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방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안하는 것임.

정부지원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겠

〈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경영함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지방대학이라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전국의 지방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말한다.

제 3 조(재원)

지원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30(20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교부)

대학 경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부하되, 성과(실적평가),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과 및 대학의 통폐합등 인수합병을 고려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예산계상)

국가는 회계년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6 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만, 우선 두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수교원확보에 필요한 경상비 지원이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일본의 국립 10.4명(사립 25명), 미국의 14명, 영국의 7.8명, 독일의 10명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 학생감소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든 대학이 설립운영 규정에 맞추어 교원을 확보(인문사회계열 : 교원1인당 25명, 공학계열 : 20명)하고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역사회와 밀착된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NGO가 상호협력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대학이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된 특성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의 육성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이룩될 수는 없다. 지방대학으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지방대학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과 핵심기술을 공급하며,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체제 구축, 지방의 우수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의 불필요한고용차별 철폐, 지역대학간의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40]

〈참고문헌〉

김진영(2003). '지방대학의 경영진단과 재정지원 방안', 「지방대학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교육정책포럼 발표논문(주최: 한국교육개발원, 일시 : 2003.7.24)

문중철(2003). '충청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지방대학육성세미나 발표논문(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시 : 2003.6.12)

장기원(2003).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방안,정책토론회 발표논문(주최 : 교육인적자원부, 일시 : 2003.7.23)

정중택(2003). '지방대학의 재정지원방안', 「지방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

# 의외로 지방대 취업 적응력, 수도권 보다 높다

- 지방대학 졸업자의 진로 활성화 방안

이만희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 mhlee@kedi.re.kr

## 청년층 고실업률이 세계적 추세

세계경제는 “글로벌 지식주도형 자본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개인, 기업, 국가 수준을 막론하고 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지식 기술 정보를 생산, 전파, 응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능력”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식주도형 자본주의는 노동력에 체화된 “고능력의 경제(high competency economy)”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고능력 경제 시대에서 전세계적으로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실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OECD의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6.4%, 25~54세 5.4%, 55~64세 5.2%에 비하여 15~24세 인구의 실업률은 11.8%(한국 14.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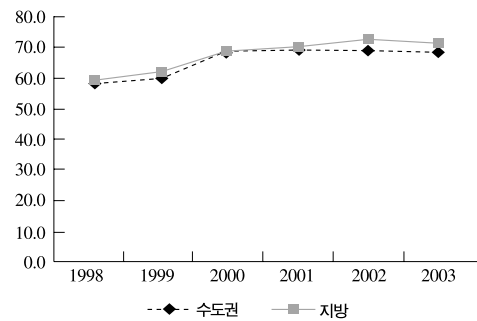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근본적 원인은 고능력 경제와 고등교육 과정의 불일치(mismatch)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요자 만족형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고등교육과정은 산업체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수요자 만족형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자인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이 요구된다. 고등교육기관이 고능력 경제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능력을 갖춘 졸업자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 능력이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등의 총합을 말한다.

## 알려진 바와 달리 지방대 적응력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수도권과 지방 등의

소재지 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률에서는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적어도 ‘양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질적’으로도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적으로는 지역간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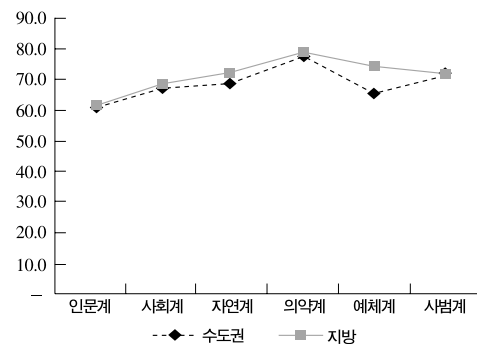
〈그림 1〉 고등교육기관(4년제+전문대) 취업률 추이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DB

전공별로는 진로 분야가 뚜렷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고등교육기관(4년제+전문대) 취업률 현황(2003. 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DB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취업률이 인플레이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들간, 그리고 전공간에는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이 양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보다 고능력 경제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능력과 수도권 졸업자들의 능력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23%의 기업만이 수도권 대학의 졸업생들이 좀더 우수하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커다란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경북에 소재한 H 대학교의 사례는 교육과정이 고능력 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① 전교생의 실용 영어 및 실용 한자 교육 실시
- ② 전교생의 전산 부전공 및 실무 전산과정 이수율 의무화
- ③ 재학 중 해외 유학 및 외국 방문을 장려
- ④ 전 학과의 학부제와 복수 전공제 실시
- ⑤ 창의성 개발을 위한 비정규 과목의 개발

이에 힘입어 위 대학교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내외의 유망기업이 위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률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전공(학과)별로는 취업률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고등교육기관의 소재지별, 취업률별 전공(학과) 수를 보여준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전공별 평균 취업률을 상회하는 전공(학과) 수는 인문계의 경우 수도권 68개, 지방 70개, 사

<표 1> 4년제 대학의 취업률별 학과(전공) 수 (2002. 4)

취업률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100% 이상	5	7	9	3	7	22	3	2	10	12	1	2
90~100%	1	3	5	10	3	11	5	4	7	11	1	2
80~90%	2	8	9	17	21	52	2	10	5	14	3	9
70~80%	24	17	19	29	51	61	2	7	24	31	8	8
60~70%	36	35	22	40	72	118	2	3	32	24	19	14
50~60%	32	29	19	27	17	113	3	1	14	28	7	13
40~50%	16	17	16	23	35	61	1	0	12	7	3	17
30~40%	5	6	12	8	20	30	0	0	2	8	4	4
20~30%	3	3	1	4	6	8	1	0	4	2	1	0
10~20%	0	1	1	0	3	5	0	0	1	1	1	0
10%미만	3	3	7	2	3	3	0	0	1	1	0	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DB.

※ 음각은 평균치 이상을 의미함.

회계의 경우 수도권 109개, 지방 154개, 자연계의 경우 수도권 154개, 지방 146개, 의약계의 경우 수도권 10개, 지방 16개, 예·체능계의 경우 수도권 78개, 지방 68개, 사범계의 경우 수도권 13개, 지방 21개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는 자연계, 예체능계 등에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그 밖의 계열에서는 지방대학(교)에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전공(학과)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재지별 전체 전공(학과) 수를 기준으로 전공별 평균 취업률을 상회하는 전공(학과) 수의 비율은 인문계의 경우 수도권 53.5%, 지방 54.2%, 사회계의 경우 수도권 66.1%, 지방 70.6%, 자연계의 경우 수도권 64.7%, 지방 30.0%, 의약계의 경우 수도권 52.6%, 지방 59.3%, 예·체능계의 경우 수도권 69.6%, 지방 48.9%, 사범계의 경우 수도권 27.1%, 지방 3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사회계, 의약계, 사범계 등에서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 수를 갖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자연계, 예·체능계 등에서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 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양적 취업률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수도권, 지방 등의 지역적 이점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상식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소재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전공(학과) 수에서 취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이 고능력 경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전문대학의 취업률별 학과(전공) 수(2002)

취업률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100% 이상	0	3	5	18	10	60	0	1	5	28	2	0
90~100%	1	7	9	64	28	129	2	6	6	40	1	2
80~90%	4	10	26	112	30	93	4	6	10	16	2	2
70~80%	4	6	19	34	47	35	1	3	16	22	1	0
60~70%	6	6	10	25	30	15	2	5	18	14	0	1
50~60%	4	6	5	4	18	10	2	1	21	4	0	0
40~50%	1	3	2	2	9	7	1	1	9	5	0	0
30~40%	1	3	1	1	1	1	0	0	9	0	0	0
20~30%	0	0	0	2	1	3	0	0	1	0	0	0
10~20%	0	0	0	2	0	3	0	0	5	0	0	0
10%미만	0	0	0	0	1	4	0	0	0	3	0	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DB.

\* 음각은 평균치 이상을 의미함.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전공별 평균 취업률을 상회하는 전공(학과) 수는 인문계의 경우 수도권 15개, 지방 32개, 사회계의 경우 수도권 69개, 지방 253개, 자연계의 경우 수도권 213개, 지방 317개, 의약계의 경우 수도권 6개, 지방 13개, 예·체능계의 경우 수도권 55개, 지방 106개, 사범계의 경우 수도권 6개, 지방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범계를 제외하고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전공(학과)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재지별 전체 전공(학과) 수를 기준으로 전공별 평균 취업률을 상회하는 전공(학과) 수의 비율은 인문계의 경우 수도권 71.4%, 지방 72.7%, 사회계의 경우 수도권 89.6%, 지방 97.3%, 자연계의 경우 수도권 87.7%, 지방 88.1%, 의약

계의 경우 수도권 50.0%, 지방 56.5%, 예·체능계의 경우 수도권 55.0%, 지방 80.3%, 사범계의 경우 수도권 100%, 지방 8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서는 사범계를 제외하고는 전 계열에서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 수를 갖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사범계열에서만 취업률이 다소 높은 전공(학과)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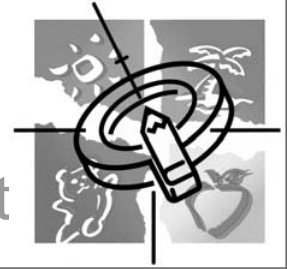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도권, 지방 등의 지역적 이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적인 취업 면에서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졸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전공(학과)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2002년 4월 현재 고등교육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90% 이상인 전공(학과)을 보면 전통적으로 구분되던 전공(학과)과는 달리 대체로 미분화되어 있다. 특히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취업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취업시장은 전공(학과) 능력 이외에 부가적 능력(SKA : skill, knowledge, attitude)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의 계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취업 시장은 매우 특화된 전공(학과) 소유자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진로가 뚜렷하게 결정되어 있는 의약계, 사범계를 제외하고는 특화된 전공(학과)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노동시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졸업자는 취업과 전공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

**<표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전공 일치율 (2002, 단위 : %)**

구분	Total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공 분야	74.5	53.8	73.1	71.4	93.5	75.7	93.2
다른 분야	25.5	46.3	26.9	28.6	6.5	24.3	6.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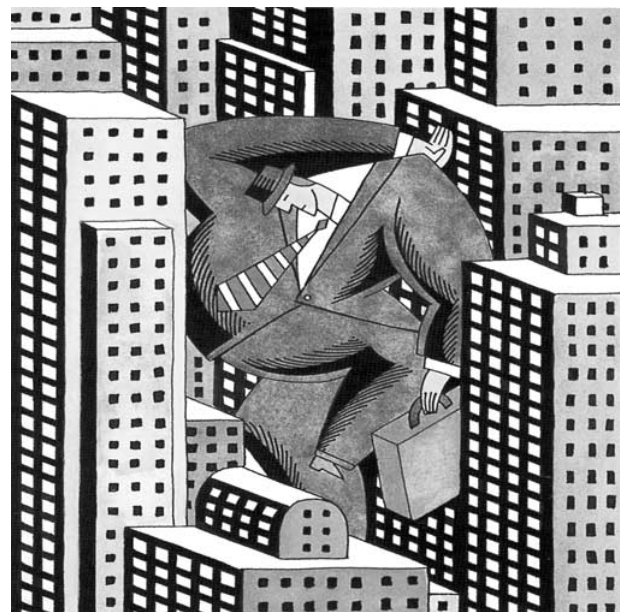
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특화된 전공(학과)이 아닐지라도 전공(학과) 특기 이외에 특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취업시장이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자가 노동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전공(학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H 대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는 전공(학과)의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는 달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특정 전공(학과)에 교육수요가 집중됨으로써 그 밖의 전공(학과)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서 학부제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명목적으로는 학부제를 실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의 전공(학과) 중심 형태로 환원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의 전공(학과) 구조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만큼 유연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공(학과) 구조는 취업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학습자가 특정 전공만을 선호하는 등 취업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전공(학과) 구조는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이해관계에 얽혀 설립과 통폐합, 폐지 등이 유연하지 못한 결함을 안고 있다.

고등교육 재학자, 졸업자의 시설 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직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이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업적 기능이 결여된 현명한 순응주의자(smart conformists)만을 양산했다는 비판은 이러한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구조, 고정시키지 말고 풀어야**

**가. 수요자 만족형의 전공(학과) 구조와 교육 과정**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취업시장의 신호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시장은 전통적 전공(학과) 구조보다는 매우 전문화되고, 또 여기에 고기능경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 예컨대 SKA를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요구를 내부화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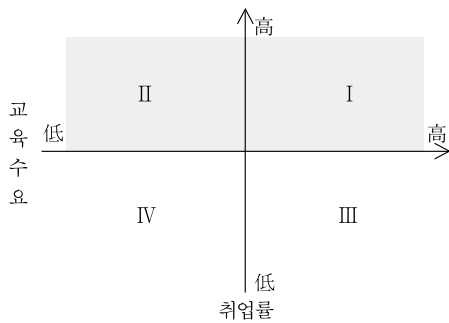
의약계, 사범계가 취업률, 전공-취업 일치율이 높은 것은 전공자들의 교육과정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내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제외한 계열의 취업률,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 과정이 노동시장의 신호를 내부화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시장의 신호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전공(학과) 구조가 유연해져야 한다. 취업시장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학 당시의 전공(학과) 선택이 4년 후 졸업 시점에서도 최선일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전공(학과)을 고정시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4년 동안 무전공, 또는 최종 학년에서의 전공 선택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공(학과) 구조가 취업시장의 신호를

**<그림 3> 전공(학과) 통폐합의 기준**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초과 수요에서 유발된 고등교육 팽창의 산물임을 고려할 때 '수요≒공급'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전공(학과)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계열별 취업률, 취업-전공 일치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부문은 초과 공급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와 취업시장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전공(학과)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전공(학과)의 통폐합은 다음과 같이 취업률, 등록생 수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다. I, II에 해당하는 전공(학과)은 그대로 유지하되, III, IV에 해당하는 전공(학과)은 지역

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통폐합, 또는 전공(학과) 교환을 실시하는 것이다.<sup>1)</sup>

교육내용은 취업시장의 신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 내용 이외에 고기능경제에서 요구되는 능력, 즉 SKA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전공과 취업의 일치율이 낮은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은 SKA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일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인증제'를 통하여 토익 700점, 독서량 100권, 컴퓨터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등을 졸업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벤치마킹할 만하다.

오히려 SKA가 취업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전통적 학점을 그 반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점 조정에서는 특히 최소한 1학기 이상을 현장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 현장 기반형 학습체제 구축**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훈련에 대한 고용주의 직접적인 투자는 “현장 기반형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취업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하는데 커다란 몫을 한다.

고용주 주도형 교육과 훈련 체제는 학교-기업간 파트너십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대학이 책임을 진다. 교육 훈련 과정에서 청년은 어디까지나 학생이지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기업 파트너십 위에서 직무 기반형 학습기회를 제공한 고용주는 훈련기간 후에 그들을 반드시 고용할 필요는 없다.

<sup>1)</sup> 일본은 최근 국립대학의 대학간, 학부간,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인접대학과의 역할 분담을 토대로 제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www.mext.go.jp/b\\_menu/houdou/14/01/020199b.htm](http://www.mext.go.jp/b_menu/houdou/14/01/020199b.htm), 검색일 2002. 4. 10).



이와 같이 청년 실업이 낮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직무 기반형 학습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Alan Burton-Jones는 지식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교육, 노동, 학습의 관계가 재정의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학습 기술이 보급되고, ② 아카데미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이 접근하고, ③ 학계와 산업계간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교육 훈련을 위한 "사회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의 주체인 기업, 노조, 정부 등이 교육 훈련의 고도화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적 능력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 축적에서 각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정부가 곧 현명한 정부이다.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고 있는 국가는 교육 훈련 체제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의 현장기반형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고능력 전략은 정부, 고용주, 노조간의 시장합의, 즉 국제경쟁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필요성,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더

욱 확대할 수 있는 시장경쟁을 피해야 할 필요성 등과 같은 합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장 기반형 학습 체제로는 산학협동, 인턴사원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산학협동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인력부족난 해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협조,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의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매개로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측에서는 인턴제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인턴제를 통한 현장 기반형 학습을 체험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또한 해당 기업에의 취업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인턴제를 수용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인턴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인턴제 때문에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기반형 학습 체제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또한 이 체제가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을 유발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여기에 동참할 유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대학이 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전략적 중재자로서 개입해야 한다.

**다. 산·학·연의 전략적 중재**

**1) 능력위주의 교육과정-자격(능력)의 통합**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에서는 학력과 자격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 자격이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국가 수준에서 인증한 결과라면,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핵심 능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격과 교육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하면 자격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직업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평생학습, 능력중심 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노동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특히 지방의 기관들에게는 이러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그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국가 수준에서 인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력과 자격을 연계시키는 중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범람하고 있는 자격 제도가 취업시장에서는 신뢰도가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능력 위주로 자격-교육과정을 통합,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 2) 산·학·연 연계형 교육과정

산·학·연 연계를 위해서는 그 주체인 정부, 산업체, 학교, 연구조직간의 협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2002년 4월 현재 102개의 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214명 재학)과 박사과정(114명 재학)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64개 대학원에서는 개설만 되어 있을 뿐 학생 수는 전혀 없을 정도로 대학원 수준의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이 몇몇 대학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이를 국가 수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선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교육과정에 직장 경험을 결합하고, ② 교수의 산업체 연수를 체계화하고, ③ 인턴제 또는 현장 실습 학점 인정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고용주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이 대졸자의 취업시장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학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전공(학과) 구조를 고려할 때,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 전공(학과)을 신설하기보다는 어떤 전공(학과)을 선택하든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전공(학과)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고등교육기관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K20]

# 교수인가, 세일즈맨인가

김재경 | 대구 매일신문 기자, kjk@imaeil.com

“말이 대학 교수지, 이진 완전히 세일즈맨입니다. 교육부에 서류 잔뜩 집어넣고 특성화 지정이라도 받아야죠, 고등학교며 입시학원이며 홍보 팸플릿 들고 가서 학생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게 할 노릇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쩡니까? 내년에 강의실 반이라도 채우려면 어떻게든 몸부림쳐 봐야죠.”(경북 A전문대 K교수)

“교수님들 말은 잘 부탁한다고, 학생들 많이 보내 달라고 하는데 별로 다급한 게 없어 보입니다. 고3생이나 재수생들이 어떤 걸 기대하는지, 학교와 학원의 실정은 어떤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나 왔다 갔다 생색만 내는 분이 적잖아요. 심지어는 다녀갔다고 확인증 끊어달라는 분도 있더군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지방대학이 위기인가 의심스럽기도 해요.”(대구 A재수학원 관계자)

‘지방대 위기’라는 말처럼 교육계에서 단기간에, 보편적으로, 심각하게 쓰여지는 용어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무한팽창하던 대학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고사(枯死)로까지 몰리는 상전벽해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 사이 갖가지 이름을 단 지원책, 회생 방안 등이 줄줄이 나왔지만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앞서 대학 교수와 학원 관계자의 코멘트는 여기서 빚어진 상황의 엇갈린 단면들을 비추고 있다. 문제는 미래가 더 암울해 보인다는 데 있다.

## ‘지방대 위기’는 곧 ‘지방대 학생의 위기’

경북의 한 실업계 고교를 함께 졸업한 뒤 올해 각기 다른 전문대에 진학한 동기생이 여름방학 때 고향에서 만나 나눈 얘기. “우리 학교는 이번 방학 동안 10억 원을 투자해 강의실

을 완전히 현대화한다고 해. 칠판 대신 완전히 대형 스크린으로 바꿀 모양이야. 교수님들도 강의에 열심이고, 취업 자리도 자기 아들 일처럼 나서 주니까 전망도 괜찮은 것 같아.” “에이, 그런 대학이 어딴냐. 우리 학교는 수업 제대로 듣는 선배 못 봤다. 어디 출석을 부르나, 강의 안 들어온다고 나무라기를 하나, 시험 때는 아예 문제 가르쳐 주고 책 펴놓고 치게 하더라. 소문엔 교수들이고, 직원들이고 온통 다른 직장 알아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데,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

앞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올해 충원율은 경북에서는 드물게 80%를 넘는 반면, 다른 학생의 대학은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긴 곳이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지방대 위기’보다 ‘지방대 학생의 위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지방대 위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재학생들이다. “작년 2학기 때 보니까 교수님들은 졸업반 취업 문제보다 신입생 모집하는 데 훨씬 더 열을 올리더군요. 조를 짜서 경북에 있는 실업계 고교를 빠짐 없이 다니느라 강의하기도 피곤한 얼굴들이었고요. 올해는 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일찌감치 그만두고 재수한 친구들이 차라리 부럽습니다.”(경북 K전문대 2학년생 P군)

지방대 교직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학생들의 허탈함에 못지 않은 게 사실이다. 외국 대학 출신 박사들이 줄지어 취업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신입생 부족으로 학과 구조 조정이니, 폐과니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이다 보니 신입생 모집에 절박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3년차라는 한 전문대 교수는 “이렇게 불안하게 살려고 부모님 신세 저 가며 외국 가서 학위를 따 왔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다”며 “재학생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당장 생존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 아니냐”고 했다.

**‘입학하면 50만원 주겠다’는 기본에 속해**

올들어 4년제 대학들의 수시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4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전문대까지 수시모집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방대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대부분 수시모집에는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대, 전문대로 갈수록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은 수시모집 확대로 덕 보는 건 상위권 대학들이고, 정시모집 때 지원할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수험생들까지 입도전매 당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대구의 한 4년제 대학 입학 담당자는 “수시모집에서는 일반계보다 실업계 고교 상위권 학생들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예년 같으면 전문대에 갈 수험생이겠지만 정시모집 때 이탈을 대비해 수시에서 기본인원을 확보하느라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도 지역 전문대 상당수는 2학기 수시모집을 아예 포기한 듯한 인상이다. 경북 안동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경북 북부 지역은 이미 수도권 전문대와 강원지역 4년제 대학, 대구지역 전문대 등의 각축장이 돼 끼여들 틈이 없다”면서 “수시모집 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막상 나서려니 총알 없이 전쟁터에 던져진 기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50% 이상을 모집한다는 대학 자체 계획이 수립돼 고교들을 순회하며 팸플릿을 돌리기도 했지만 교수들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 하는 거라고 털어놨다.

대학들의 제살까기 경쟁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중소 도시 소재 대학의 경우 기숙사 제공은 기본. 일부 전문대는 입학하면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아예 1학기 등록금은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 공공연히 약속하고 있다. 2년제의 경우 나머지 3개 학기 등록금을 받을 수 있으면 미충원보다는 훨씬 이익이라

는 계산에서다. 후배 한 명을 데려오면 장학금을 준다며 재학생들을 유혹하는 대학도 더러 있다. 한 입학과 직원은 “고3 교사들에겐 한 명 보내 줄 때마다 등록금의 10%를 사례비로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맞느냐”고 되물기도 했다.

**어쩌면 본고사가 학력고사 체제로 바뀐 것이 근본 원인 일지도**

지방대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인 데 대한 원인 분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준칙주의, 고교생 수 감소 외에 모든 분야에서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단위의 관심 부족 등 외부적 요인과 대학 자체의 혁신 노력 부족, 교육 여건 악화 등 내부적 요인이 주요하게 지적된다.

이에 비해 오랫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해 온 고3 교사들이나 재수학원 관계자들은 입시제도의 문제를 현실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대구진학지도협의회 박해문 회장(대륜고 교사)은 “70년대까지 대학별로 출제하던 본고사 체제가 국가 주관의 획일적인 학력고사 체제로 바뀌면서 대학 서열이 가시화됐다”며 “이는 곧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움으로써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간극을 벌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대구 일신학원 윤일현 진학지도실장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북대 상위권 학과에는 서울대 중위권 학과 정도는 갈 수 있는 이른바 리딩 그룹이 있었지만 학력고사-수능시험 체제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신입생이 합격선 근처에 몰리는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수시모집 확대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역시 대학 서열화를 깨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므로 지방대에 유리할 게 없다며 학생 선발에서 대학 자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의 선두권을 형성하는 국·공립 대학과 몇몇 사립대들의 안이한 자세도 위기에 한몫 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아직 정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학과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 자체를 거부하는 교직원들의 안일함이 지방 명문의 몰락을 가져왔고, 여타 지방대들도 덩달아 뒤처지는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대구지역 입시설명회에는 연·고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홍보물과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참가했으나, 한 지역대는 입시 안내 팸플릿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설명회를 준비했던 대구의 고3 담당 교사는 “설명할 순서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수도권 대학이나, 초청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와서 홍보물을 뿌리는 전문대들에 비하면 일부 지역 대학은 너무나 아미추어라기가 막혔다”고 했다.


### 지역고교생, 재학생을 감동시켜라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 있다. 국립과 사립대학 간 기능적인 역할 분담,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책 마련, 지역 전체의 협력 체제

구축, 대학 내부의 구조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각종 지원책에 관심을 두겠지만 고교 교사들은 대학 내부의 구조 혁신,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지역 인재를 유치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꼽고 있다.

교사들은 우선 대학 재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게 가장 좋은 대학 홍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예들든 두 전문대생의 경우를 보자. 고교 후배들이나 주위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대학을 홍보하는 일에 누가 더 적극적일지는 뻔한 일이다. 일신학원 윤일현 실장은 “입학생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이 돌머리들’ 하며 투덜거리기보다는 고교 공부부터라도 새로 가르치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절실하다”며 “재학생들을 감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가까운 지역 고교부터 홍보하고 장악해 들어가는 평상시 노력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경남의 한 대학 입학 담당 교수는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절반 이상이 원서 쓰기 전에는 우리 대학 이름도 몰랐다고 대답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학 인근 고교생들이 가까운 대학을 외면하는 현실을 깨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 고교 연구부장은 “입시 때만 되면 식사 대접, 술 대접 하겠다는 대학이 줄을 잇는데 생색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마다 입시 홍보비로 몇억 원씩 쓴다는데 이를 평소에 유용한 지역 고교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훨씬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방대 교수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 갈 만한 성적이 되는 자기 자녀를 소속 대학에 보냈다는 사례는 의·약대 같은 학과를 제외하곤 거의 못 들어봤다”면서 “지방대 살려 달라고 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교직원 자신부터, 대학 자체부터 발상을 바꿔야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공한 지방대 교수들, 이렇게 뛰었다

- 지방대,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아본다

손승태 | 포항고등학교 교사/대교협 입학상담교사, sst89@hanmail.net

“서울은 한국 최대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라고 말한 어느 외국인 학자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화 현상은 지금까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왔다. 우수한 인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한번 입성한 이는 기필코 그곳에 정착하려 한다. 더욱이 지방대를 졸업한 우수인력마저도 생활만큼은 서울에서 하려 하는 실정이다.

중앙 집중화가 초래한 이 같은 문제는 '과밀화(過密化)'와 '공동화(空洞化)'라는 지역적 모순성을 심화시켜, 지방은 이제 우리의 꿈과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 과제로 지방대 육성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처럼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폐쇄화 현상, 그 중심에 지방대 위기론이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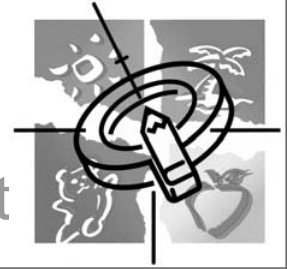
지방대학들이 맞고 있는 위기의 요인을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진학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 문제는 우선 대학에 대한 국민의 그릇된 인식과 취업난에 따른 지방대생의 평가절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외부적 환경에 개인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조화될 때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맥과 학연을 중시하는 병리적 사회 구조가 젊은 이들의 진취적 자세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의 31%가 신입사원 공채시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있어 이같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은 지방대를 외면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진학상



담 때에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동일학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느 대학의 인맥이 그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가를 많이 따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지방의 우수 고교생들이 한결같이 서울로 진학하고 있으며, 지방대 재학생들마저 편입학을 통해 지방대를 등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서울 우위의 그릇된 인식과 서울에서러야 제대로 된 공부가 가능하다는 학부모들의 낡은 인습이 지방대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교감 형성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에 소홀했다. 한 대학의 명성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들은 그저 입시 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에만 급급했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해 왔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학 상담을 해 보면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수험생들은 진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방대의 경우 수험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지방대학이 봉착한 위기 탈출의 해법은 위기상황을 직시할 줄 아는 안목과 미래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혜안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대학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지방대들이 있어 위기 탈출의 모범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경북 H대학교는 이 지역의 P고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지방대 중의 하나이다. H대학은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 TOEIC 강좌를 개설하여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유학한 영문학과 교수들이 직접 고등학교를 야간에 방문해 강의를 하면서 학교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까지 안내해 준다. 또 이 대학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즉, 봉사활동 학점제, 영어의 일상 생활화, 정보 마인드 구축을 위한 컴퓨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신입생 유치 및 취업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방대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P공대는 잘 정비된 교육 인프라 구축, 재정적 근거 마련, 기숙사 시설의 확보 등을 통해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공계 대학으로 발돋움한 좋은 예이다. 이 대학은 우수 교원을 초빙할 경우 연구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우수 학생들에게도 4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특정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여타 지방대학과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이 최근에 해외 유학생 유치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대전의 B대는 유학생 수가 올해 132명(9개국)으로 지난해 76명(8개국)보다 74%(56명)이나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2명, 러시아 11명, 인도 7명, 미국·일본·몽골이 각각 2명씩이다. 유학 형태는 한국어교육원 수강생 66명, 학부과정 35명, 대학원 석사과정 15명, 대학원 박사과정 5명 등이다. 이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기숙사 3곳(총 1백50여명 수용)을 마련하였으며, 유학생들이 생소한 한국 문화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학생과 교직원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 대학은 앞으로 유학생 1천여 명을 유치하고 한국 학생과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언어 등 국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교내 어학촌도 세울 계획이라 한다. B대로 유학 온 중국인 가오 이싱(高乙心, 23.여)씨는 "유학생들을 위한 B대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B대 정순훈(52)총장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대학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대의 경쟁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교감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몇 대학의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의 D정보대가 '주문형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슬로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장대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서부산권 기업체 밀집지역에 현장캠퍼스를

개설하여 직장인들에게 면학 욕구 충족은 물론, 재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와 학교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경남권에서 최초로 시도된 현장캠퍼스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일을 마친 뒤 기업 인근에서 공부해 4년제 대학의 정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일종의 출장대학인 셈이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녹산국가산업단지내 각 기업의 일반직원에서부터 임원 등 다양한 학생들을 학교로 흡수하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무역실무, 품질경영, 유통경영, 세계경제의 이해, 경영정보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등 6개 과목(18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이후 학기의 과정에서는

▶ 인터넷 활용, 품질정보시스템, 마케팅전략, 회계정보시스템, 물류관리, 정보기술과 경영전략

▶ 웹프로그래밍, 경영예측, 인터넷마케팅, 창업과 세무, 국제물류, 현장프로젝트

▶ MIS사례연구, 경영시물레이션, 전자상거래, 창업세미나, 국제통상관계론, 현장실습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생인 S산업(주) 자재생산부 P부장은 “빠듯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무와 IT 관련성이 큰 분야의 정규 학사 학위를 따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열심히 공부해 꼭 학사학위를 취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캠퍼스의 총장이나 다름없는 국제관광학과 P교수는 “실무경험을 가진 현장캠퍼스 학생들의 자질이 고졸입학 직후 바로 진학하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의욕은 훨씬 더 높다”며 “녹산단지내 근로자가 1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엄청난 잠재적 수요에 대비해 연내에 로봇시스템공학과 등 2~3개 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개방과 동시에 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내 이미지 제고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충북지역의 S대는 학교 인근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민잔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독거노인 돕

기, 경로당이·미용 봉사활동, 주민 인터넷 교육, 동(洞) 발전과제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해주고 정보검색실, 영상정보실, 세미나실을 개방하고 있다. C대도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캠퍼스 울타리를 따라 4.5km(폭 2m)의 황토 오솔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산책 및 조깅, 삼림욕 코스로 무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J대는 청주중앙공원에서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해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갖는데 이어 우암 대동체에 학교인근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 점심을 대접하고 국악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C과학대는 주민들이 각종 연구 자료 및 학위논문, 학술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관을 개방하는 등 각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대학들이 지역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의 위상 문제는 지역민들의 인식과 대학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동반될 때라야 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학일수록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취업이라는 현실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주민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일면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몇몇 대학들이 이미 시도하여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교육개방, 무한경쟁 시대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학일수록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실한 반성에 근거한 대학 차원의 다양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대학들이 지역과 함께 숨쉬면서 굳건한 지방대로서 자리매김할 토양을 마련하고, 지방대생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꿈과 희망 속에 젊음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열린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20]

# 천민, 이것이 지방대생의 新신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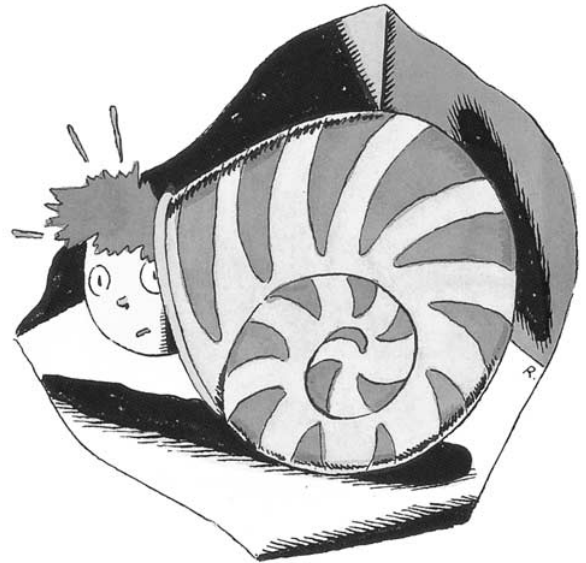
- 지방대생의 하루

윤대선 | 원광대학교 97학번, zang34@hanmail.net

아침 일찍부터 걸려온 전화벨소리에 밀려오는 잠을 뒤로 한 채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에서 온 전화다. 아마도 방학 인데도 그리 멀지 않은 집을 두고 자취하는 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인 것 같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나나 다를까, 어머니는 아침부터 먹었냐며 성화다. "네, 방금 먹었어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힘들면 사먹으라 하신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에 오늘은 아침부터 맘이 무겁다. 평소 같으면 밀려오는 잠에 못 이겨 한숨 더 잤을 텐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뒷바라지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 학교 도서관으로 향한다.

토익... 토익이다. 학점이야 어디 객관적인 자료도 아니고 지방대학 학점을 어느 회사가 봐줄 것인가. 토익 이것마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난 그냥 그저 그런 천민(?)으로 사회의 구원만을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아닐 수도 있지만 믿고 싶다. 그래야 천민에서 평민으로 계급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뭐든 할 것 같아서이다.

얼마 전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지방대생의 현실을 인도의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에 비유한 문구를 봤다. 엄하기로 유명한 인도의 카스트제도에도 속하지 않은 천민에 해당하는 불가촉천민이 오늘날 지방대생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 그래도 노력하는 이에게는 장사 없다고 열심히 하면 어딘지 모를 길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맘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다. 공부를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방학이라 잠깐 내려오는 참에 만나자며 자기는 상반기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아주는 S기업에 합격했노라고 은근히 자랑을 꺼낸다. 어려운 시기에 친구가 당당히



대기업 취업에 성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열심히 해오던 그 친구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내 주위 선배나 동기들은 아직 한 명도 그 회사에 면접 한번 못 봐서일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취업을 위해 졸업 후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학교에 남아 하루 하루 불안한 맘으로 선배들은 취업공부를 하고 있다. 지방대생 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 회사에 들어간 친구가 부러우면서도 웬지 모르게 허탈한 마음에 든다. 그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S대 10점 만점 같은 지방 국립대학인 A대는 2점 우리 학교는 0.2점이라는 소문이 거짓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기가 몇 년 전 선배들이 들려주던 얘기가 떠오른다. 한 정부의 권위 있는 기관에 뜻이 있는 몇몇 선배들이 방학을 통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기관에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기관 직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대생들은 힘

들다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란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취업하기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힘들다. 마치 우리같이 권위 있고 힘있는 기관에서는 지방대생은 뽑지 않습니다란 말처럼 들린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부터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지방대육성이나 지방대생에게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외쳐대는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정황을 간파해서일까. 학교 취업지원실을 가보면 온통 7·9급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 투성이다. 물론 오늘 날의 7·9급이 예전의 7·9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나는 건 학교에서도 지방대생이 갈 수 있는 곳은 7·9급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한 듯한 학교 정책이다(사실 경쟁률이 100:1을 상회하는데도 많은 지방대생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은 학력제한이 없는, 졸업대학의 이름이나 배경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력을 느끼는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한다). 취업지원실 대부분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곳을 위해 할애하고 있다.

글쎄,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못 본 듯하다. 또한 취업지원실 게시판은 정말 오늘 우리가 왜 불가촉천민이란 표현의 대상인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친구와 어제 찾았던 취업지원실 게시판에는 온통 아르바이트 공고 밖에 없다. 인도에서 그 당시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의 직업이 도살이었듯, 오늘날의 천민인 우리는 아르바이트나 3D 업종에 종사하란 말인가? 그래 방학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 입사공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들어본 건설한 지방회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말이지 아찔하다.

과연 비싼 등록금을 들여가며 대학이란 곳을 다녀야 할지도 의문이다. 맘 같아선 다른 사람들처럼 편입이나 늦었지만

재수를 해서 의학계열학과를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선 이 천민의 계급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 같다. 또한 취업이란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회사내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문회가 있어 그 동문회끼리는 서로 끌어주고 그 조직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그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들으니 어느 지역에 핵폐기장 유치를 조건으로 지방대의 분교가 생긴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사기면서도 핵폐기장을 유치해 대학을 건립하면 그 지자체장은 커다란 업적이라도 남긴 듯이 으스스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 대학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또는 졸업후에 대한 진지한 대책없이 대학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그들은 또다시 80년대 그 당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구 잡이로 대학을 건립해 생긴 지금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대란 속에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분명한 것 같다.

한숨만 절로 나온다. 20대 진취적인 꿈과 사고에 사로잡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신세타령이러니. 우습다 벌써 6, 70억은 노인네 같다. 꿈도 이상도 없이 그저 내일만 걱정하는...

오늘날 지방대학생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나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숨만 쉬면 비판하기보다는 아직은 젊음이라는 무기 하나 믿고 일단은 나를 만들어야겠다. 사회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 톡톡히 제몫을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

조금 철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이라는 곳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이 아닌 사회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양과 전문 지식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고 사회도 이들을 개인적 인맥과 편견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라는 희망찬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날을 위해 꿈과 이상을 잃지 말아야겠다. [KCO]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점검한 코헨 교수는 이 대학 인문대학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데 인종이라는 항목에 상당한 보너스 점수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학부의 경우,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계통의 지원자는 20포인트의 점수를 자동적으로 추가로 부여받고 있었다. 고등학교 성적과 SAT(수학적성검사) 점수만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소수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백인의 합격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 Worl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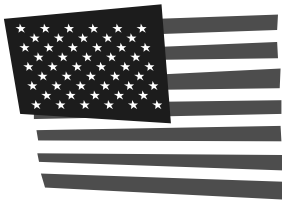




## 백인이어서 불합격, 흑인이어서 합격된 그 역사적 재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이제 교육적 필요 : 6.23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차별철폐조치

김영주 | 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점검한 코헨 교수는 이 대학 인문대학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데 인종이라는 항목에 상당한 보너스 점수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학부의 경우,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계통의 지원자는 20포인트의 점수를 자동적으로 추가로 부여받고 있었다. 고등학교 성적과 SAT(수학적성검사) 점수만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소수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백인의 합격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지난 6월 23일은 미국 역사 선상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다. 그것은 '인종'을 신입생 입학 사정 자료로 사용해 온 미시건 대학교가 입학정책과 관련하여 6년 동안 지속되어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것임과 동시에 크게는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소수계 우대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앞날을 결정짓는 판결이기도 했다.

'역사적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번 재판은 미시건 대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두 명의 백인 여성이 미시건 대학을 고발함으로써 벌어진 법정 공방이다. 사건의 발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디트로이트 근교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제니퍼 그라츠(Jennifer Gratz)는 미시건 대학교의 학부과정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이듬해 또 다른 여성 바바라 그러터(Barbara Grutter) 역시 1997년 입학의 목표로 이 대학교 법과대학에 지원했다가 역시 불합격되었다. 지원자는 100퍼센트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들의 불합격을 예상롭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대학의 교수 칼 코헨(Carl Cohen) 박사가 그 두 학생의 불합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코헨 교수는 신입생 입학 사정을 하는

데 인종을 고려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흑이나 하는 마음에 미시건 대학에 신입생 지원자 서류와 선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점검한 코헨 교수는 이 대학 인문대학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데 인종이라는 항목에 상당한 보너스 점수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학부의 경우, 지원자 평가 전체 종합점수가 150포인트, 보통 합격선이 100포인트인 상황에서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계통의 지원자는 20포인트의 점수를 자동적으로 추가로 부여받고 있었다. 고등학교 성적과 SAT(수학적성검사) 점수만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소수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백인의 합격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입학 사정 고려 항목으로서 인종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간대의 지원자들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미시건 대학교 학부과정에 지원했다가 낙방의 고배를 마신 그라츠는 후에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불합격된 이유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점 때문이었으며 이는 엄연한 인종 차별이라며 미시건 대학교의 입학 정책에 도전장을 냈다.

코헨 교수의 미시건 대학의 입학정책에 대한 의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사를 계속한 결과 대학원 수준인 이 대학교 법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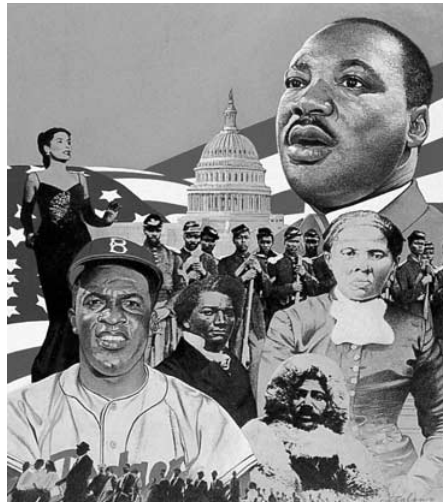




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법과대학은 인문대학처럼 인종에 일정 보너스 점수를 주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같은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비교할 때 백인 합격자의 수는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런 소식은 1997년 법과대학에 지원했다 떨어진 그러터에게도 전해졌으며 확인 결과 그러터는 학업 성적(GPA), 그리고 법학과 진학에 필요한 LSAT에서 자신과 같은 점수를 얻은 흑인 지원자는 모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러터는 자신이 법대에 떨어진 것은 자신이 백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항의했으며, 민권 센터(Center for Individual Right)는 1997년 그라츠와 그러터의 불합격은 백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라며 미시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인 역차별인가, 소수민족 차별철폐인가**

미시건 대학교가 신입생 입학 사정을 하는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기타 특정 인종에 특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차별철폐조치 때문이다. 차별철폐조치는 일종의 소수계 보호정책으로 백인의 소수 인종,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을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겨났다. 미국 사회에서 250여 년 동안의 흑인 노예사와 100여 년 동안 흑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이 사회가 영원히 안고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좁혀지지 않고 있는 계층과 불평등이다.

비록 노예라는 족쇄가 풀리고 흑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불평등의 제도적 장치는 무너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뿌리내린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흑인들의 피부색은 여전히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백인들의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권력에 대한 독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흑인들은 사회 후미진 곳의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 단순히 백인 세력으로부터 흑인을 보호하고 교육과 직업 등 사회 경제적 성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흑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발전되어갔다.

그 예로, 기업이나 정부가 고용을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하는데 있어 일정 수 이상의 흑인을 선발하는 것인데, 그 저변에는 사회적 억압을 받은 흑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 진출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었다. 즉, 흑인에게 백인과 똑같은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사회 성취 기반이 없는 이들이 기득권자인 백인과 경쟁을 하여 선발의 대열에 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흑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강한 기회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렇듯 흑인들의 불평등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오늘날 비단 흑인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이민자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는 사회적 기제로 발전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흑인의 과거사를 보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성향이 있으며, 이런 보상책은 과거 흑인을 노예로 억압하던 시절에 살지도 않았던 현대의 무고한 백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더 나아가 어퍼머티브 액션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며 이 정책을 통해 과거 흑인차별이 낳은 여러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할 수는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등 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 주장은 종종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는 대학이나 기업체들로 하여금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데, 그라츠와 그러터의 고발로 이루어진 미시건 대학의 법정 공방도 그 중 하나이다.

이번 미시건 대학의 법정 공방은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것은 바케(Bakke) 결정 이후 25년만에 대법원까지 간 어퍼머티브 액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바케 소송은 지난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바케가 자기가 불합격한 데에는 자신의 하얀 피부색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학교를 고발함으로써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바케의 탈락 원인이 인종에 따른 쿼터 제도 때문이라며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하여금 바케에게 입학 허가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는 데 인종에 따른 쿼터를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 인종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선언했다(바케 결정과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부가 설명은 『교육개발』2001년 7·8월호, 제 128호, 72~77쪽 참고 바람). 바케 결정 이후에도 어퍼머티브 액션은 논쟁의 꺼지지 않는 불씨였으며, 최근 들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정책과 관련하여 다시 법적 시비를



명확히 가려 줄 필요가 있었다.

### 승소이유, 다양한 인종은 훌륭한 교육적 지원

미시건 대학교와 원고, 그라츠와 그러터의 변호를 맡은 민권센터(CIR)와의 법정 싸움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된 팽팽한 줄다리기가였다. 이 사건에 대해 2001년 3월 미시건 지방법원은 미시건 대학교에 패소판결을, 2002년 5월 순회법원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이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를 하여 열린 재판이었다. 원고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주장하고자 한 내용은 특정 인종에게 '슈퍼 보너스'를 주는 등 백인 지원자에게 불리한 미시건 대학의 입학 정책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개인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 미시건 대학교 측은 지원자들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심사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험 성적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표준화 검사가 백인 중류층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 백인 지원자와 소수계 지원자가 얻은 점수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무엇보다 미시건 대학교 측이 입학 정책 방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사항은 학생집단 다양화의 필요성인데, 신입생 선발 심사항목으로 인종을 고려한 것은 학생집단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때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를 노린 조치였다는 것이다.

미시건 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하는 기관이며, 미국 대학들은 다인종 구성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 조화와 통합 능력을 가진 리더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인종간의 이해는 서로 다른 인종들과 잦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때문에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여 학생 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시건 대학은 미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인종간의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흑인은 흑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집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종에 따른 지역적 분리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대학이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 집단을 구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여러 인종이나 민족들과 고루 섞인 환경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열린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지적·학문적 발달에 있어 보다 큰 이득을 누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서로 다른 인종이 훌륭한 교육적 자원이라는 주장을 했다. 사람들은 동류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시건 대학교는 본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하는데 있어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한 것은 소수계에게 혜택을 주거나 백인에 대한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원간의 융화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 육성과 교육적 효과 극대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백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나 교육적 필요나를 놓고 맞선 싸움에서 대법원은 그러다가 제소한 법과대학의 입학정책과 그라츠가 제소한 학부의 입학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법과대학이 지원자 심사를 하는데 인종을 고려한 것은 '다양성' 추구를 위한 교육적 차원의 정책이었음이 인정되며, 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렸다. 하지만 학부과정의 입학 정책에 대해서는 인종이라는 심사 항

목을 정하고 특정 인종 지원자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며 시정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자들은 백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한 대법원의 실수라고 비난한 반면, 미시건 대학과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자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확실한 청신호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미시건 대학 총장 메리 수 콜만(Mary Sue Coleman)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이번 판결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 교실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다양성 추구 방법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준 것이다. 앞으로 학부의 입학 제도를 이번 판결에 맞도록 시정하여 다양한 학생 집단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소외층특혜에서 다양성 추구로 재 개념화

콜만 총장이 말하듯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만하다. 첫째는 바케 결정 이후 처음 있는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대학의 입학 정책이나 제반 교육 정책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는데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이 다시 한번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지지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정당성을 다양성 추구라는 논리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 사회의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은 과거 바케 판결 당시 포월(Powell) 판사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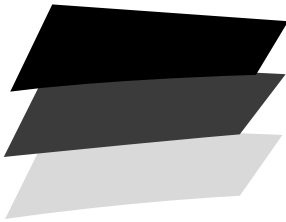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성'이 바케 대법원 판결에서 과반수의 판사들이 차별 철폐 조처에 찬성표를 던지고 덕분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수 인종들이 불평등의 역사를 딛고 보다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도록 하는 적극적 기회 부여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어퍼머티브 액션을 보는 일반인들의 지배적 견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6.23 판결은 대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한 피부색의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는 미시건 대학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단순히 보이는 이 변화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회 소외층에 대한 특혜로 이해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소수계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통해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진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는 사뭇 큰 의미를 지닌다. (14)



## 여름방학의 경제학

김종기 | 베를린 통신원, ki1325@hanmail.net



방학과 공휴일 기간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횟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6주간의 긴 여름방학 기간은 편모·편부 가정과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외탕어의 제안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았는데...

한국의 학사 일정은 3월초에 새학기가 일제히 시작되고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가 여름방학이며, 9월초에 2학기가 시작되어 크리스마스 전부터 1월말까지가 겨울 방학이다. 그리고 2월말에 일주일 가량의 봄방학과 함께 한 학년이 끝난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학사 일정에 따르면 봄방학이 사라지고 겨울 방학을 1월에 시작하여 2월말까지 이어지고 3월초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국의 학교에서는 대개 12월 안에 한 학년의 모든 교과목 시험을 일제히 치르는 학사 일정 때문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난 2월에는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육적 고려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하겠다.

그런데 독일의 학사 일정은 한국과 다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은 각 주마다 시차를 두고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보름간의 가을 방학이 10월 초·중순부터 11월 초 정도까지 각 주마다 조금씩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며, 크리스마스 방학은 대략 모든 주에서 비슷하게 12월 22일 가량부터 다음 해 1월 3일에서 7일 정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헤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이 조금 시차를 두고

2월초에서부터 3월초까지 하루부터 1주일 간의 짧은 겨울 방학을 가진다. 그런 다음 곧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며 부활절 기간 중(또는 부활절 전의 학기초)에 2주일 가량의 방학을 가진다.

올해 여름, 독일에서는 여름 방학과 관련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 하나가 6월에 교육부장관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여름 방학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기민련(CDU) 원내교섭단체 대표 쿤터 외탕어(Günter Oettinger)의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이었다. 언뜻 보면 별 관계가 없는 이 사건들은 내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학교 정책과 사회·경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부장관 협의회의 여름방학 일정 조정

올해 2003년의 여름방학은 독일에서 여름 방학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해였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던 규정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주가 한 해 전체에서 여름 방학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91일이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그룹별로 조금씩 시차를 두고 여름 방학을 시작하는 규정을 지켰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독일은 자신들



의 말처럼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여름 방학 기간 중에 해변과 도로가 인파로 넘쳐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적이지 않은 여름 방학 기간과 그로 인해 해마다 유동적인 방학 기간이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 갖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1999년 5월 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라이프치히에서 모임을 갖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방학규정 개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회는 그 규정을 통해 전체 방학 기간 설정 가능 일수를 91일에서 72일로 줄였고, 올해 2003년은 그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방학 기간이 정해지는 날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주의 6주간 여름 방학 일정은 7월과 8월중에 6주간의 대부분이 속하게 정해졌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바덴-뷔르템베르크(7. 24~9. 6), 바이에른(7. 28~9. 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7. 31~9. 13), 헤센(7. 21~8. 29) 주도 대부분의 방학 기간이 비슷한 일정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독일 대부분의 주는 한 학년의 일정을 거의 통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교원연맹의장 요셉 크라우스(Josef Kraus)는 연방 전체에서 한 학년의 학사 일정이 통일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사와 부모들뿐 아니라, 무엇보다 관광업계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는 원

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된 측이 교사와 학부모, 즉 일반 국민이며 또한 관광업계라는 사실이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정체된 도로 위에서 허비해야 했고, 또한 휴가철 목표지가 빨리 예약되는 바람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관광업계도 짧아진 방학 일



정과 침실의 부족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손실은 수백만 유로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교육부장관협의회는 올해 6월초에 로스톡에서 모임을 갖고, 여름방학의 설정 기간을 2005년부터 73일에서 83일로 더 늘이는 데 합의를 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방학 전후의 주말을 포함하면 2005년부터 전체 방학 설정 기간은 84일이 되며, 2006년에는 86일, 2008년에는 87일에 이르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바이에른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여름 방학이 겹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여름방학을 더 빨리 시작한다. 현 교육부장관협의회 의장이며 헤센 주의 교육부장관인 카린 볼프(Karin Wolff)는 최초의 여름방학 시작일은 6월 20일 가람이며, 마지막 여름방학 종료일은 9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부장관들은 1999년의 결정을 수정하는 길을 택했다.

의장 카린은 이제 2005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방학 일정을 통해 관광 경제가 다시 만족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 주는 이후 방학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적도록 교대로 방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름 방학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주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곧 여름방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주가 곧 이어 가을 방학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교육부장관협의회 결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사 일정과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방학이 가지고 있는 국민 경제적 효과를 더 중시한 결정으로, 그 이면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배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독일의 교육 체계가 우리와는 달리 중앙집중형이 아니라 지방분권적 자치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조치들은 피사(PISA) 발표 이후 학생들과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교육 기준과 통일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방 교육부의 노력과 일정 정도 어긋난 길로 흐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의 교육계는 교육의 방향과 교육에서 우선순위의 설정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름방학을 6주에서 4주로 줄이는 쿤터 외팅어의 주장과 그 사회적 파장

한편 이와 같은 교육부장관협의회 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기민련 원내 교섭단체 대표 쿤터 외팅어는 현행 6주간의 여름방학을 4주간으로 줄이고 제안했다. 그는 올 8월초 슈피겔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방학과 공휴일 기간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횟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교육적인 근거로 보아 의미가 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방학 기간을 줄이게 되면 잦은 방학으로 수업이 자주 중단되는 바람에 교사와 학생이 계속해서 예전에 하던 수업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줄어들고, 수업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쿤터 외팅어는 자신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미혼모, 또는 편모·편부 가정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6주간의 긴 여름방학 기간은 편모·편부 가정과 여자가 일하고 있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대안으로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6주간의 여름 방학 중 4주 이후의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가 문을 열고 교사들은 그 기간 중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거나 수업 자료의 예습·복습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외팅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유치원들이 오래 전부터 학교의 방학과 같은 일정에 휴일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쉬는 날을 연중 20일이나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외팅어는 학교의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은 일차적으로는 교사 자신이며, 그 다음 학부모와 활동적인 청소년 연맹의 종사자들이 후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외팅어의 제안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쿤터 외팅어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밝힌 교육과학노조(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 대변인 울프 뢰데(Ulf Rödde)는 외팅어의 계획을 방학기간이 짧아

지게 되면 그로부터 생길 다른 곳의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완전히 근시안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팅어의 제안을 두고 “우리는 이불 한 끝을 그저 당길 수는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에 교육과학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는 외팅어와 그의 동료들이 무더위를 식히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들은 정치인들에게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여러 아름다운 호수의 시원한 수영장에 몸을 담글 것을 권한다”라는 도전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독일 교원연맹(Deutscher Lehrerverband, DL) 의장 요셉 크라우스(Josef Kraus) 및 연방학부모위원회장 레나테 헨트릭스(Renate Hendricks) 등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방학 일수가 많은 나라가 결코 아니며, 남유럽에서는 학생들이 3개월까지 여름 방학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리고 4주간의 여름방학은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연맹(Verband Bildung und Erziehung, VBE) 의장 루트비히 에킹어(Ludwig Eckinger)는 외팅어가 전혀 반성되지 않은 언행을 퍼트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6주간의 여름방학이 필요하며, 또한 교사들에게 여름방학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가가 아니라, 연수와 보습교육으로 이용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협의회는 외팅어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방교육부는 방학 건이 각 주들의 권한임을 환기시키고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서기관 엘마 슈츠-반 하이든 (Elmar Schulz-Vanheyden)은 방학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경제와 관광업계만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라인란트-팔츠 주 교육부장관 도리스 아넨(Doris Ahnen, SPD)은 외팅어의 제안은 방학 규정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은 이미 넓게 확산되어 있으며, 그것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운데 외팅어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으로는 연방 국회의원 군드룬 코프(Gundrun Kopp, 자민당, FDP)가 유일했다. 그는 학교가 6주 반 동안이나 완전히 문을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쿤터 외팅어의 견해에 동조했다. 나아가 그는 스스로 경제 및 소비 연구 전문가로서 다음해부터 바로 방학중에도 학생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시범기간을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외팅어의 주장에 반대하는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들은 외팅어(와 코프)의 견해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명분 속에 합법적인 노동일수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자본가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교사의 근로조건과 학부모의 근로조건을 동시에 악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방학 기간 중에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문제는 도리스 아넨의 지적처럼 단순히 학교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나아가 학교가 책임져야 할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슈피겔지에서 벌이고 있는 다음의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는 역시 방학기간이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표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한 그 결과는 학교가 학생들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돌보아주기를 바

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외팅어 같은 정치인의 주장이 그 도를 떠나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수준에 도달한 독일 사회도 아직 학부모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고 있지는 못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K20]

〈학교 방학 기간에 대한 설문 조사〉

- 슈피겔지 인터넷 설문조사 2003년 8월 12일자 결과

설문내용	참가인원	비율
1. 이미 수업 중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학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272명	17.57%
2. 방학기간은 그대로 두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아주어야 한다	1527명	22.14%
3. 여름방학 기간중 2주일은 예습·복습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78명	8.38%
4. 프랑스나 그리스의 예에 따라 짧은 방학 기간은 없애고, 여름방학 기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	1265명	18.34%
5. 방학 기간은 지금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2249명	32.61%
6. 잘 모름	66명	0.96%



# 한국기업이 성장하면 태국내 한국어도 승격된다

## - 태국내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김영애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yoaikim@hufs.ac.kr



부라파대학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보급·발전시켰는데, 한국기업의 중요성을 대학교측이 빨리 읽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상의 특성에 착안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 공단에는 한국의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및 그 협력업체가 들어서 있어...



1949년에 태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승인한 데 이어 1959년 2월에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나 실제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근대에 들어서서 한·태 양국 간의 교류가 1959년이 처음이 아니다. 1950년에 한국동란이 터졌을 때 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제일 먼저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들은 혹독한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눈을 경험했고 눈 속에서 싸웠다. 그들에게는 추위라는 적이 하나 더 있었다. 겨울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후에 그 당시를 배경으로 태국군 장교와 한국인 처녀간의 사랑

을 그린 영화 “오! 아리랑”이 만들어진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우리나라의 박정희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고 태국의 타남 키타카 천 수상이 1967년에 한국을 답례 방문함으로써 좀더 실질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며 동남아로 눈을 돌릴 때였다.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풍부한 임산자원과 수산 자원이 있는 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난공사구역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던 남부의 파타나-나라티왓 구간의 도로 공사를 맡아 성공리에 작업을 완수함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이후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1980년대 후반에는 어느덧 태국의 경제를 앞서게 되었으며, 88년에는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정치적인 중요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중요성이 더 앞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양어로는 한국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개설**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시작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태국과의 무역증진 및 문화교류와 무관하지 않다. 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1986년으로, 태국남부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 있는 국립대학인 송클라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파타니 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태국어 및 동양어학과에서 교양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것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교과과정이나 강의자료 등은 한국외국어대학 태국어과의 지원을 받았고, 한국어강좌에 필요한 교수파견에 대하여 한국정부(학술진흥재단)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1986년 1학기에 한국어 I(초급한국어)를 수강한 학생 수는 14명이었으나 1988년 2학기에는 12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국어 I을, 한국어 II는 12명, 한국어 III은 5명이 수강해 모두 135명이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 사실은 한국에 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당시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에 이어 동양어로는 두 번째 언어로 개설된 것이다. 한국에서 양식새우 등의 수산물과 고무 및 타피오카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서 무역이 증진되었고 한국기업이 태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태국인이 요구되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을 체험한 송클라대학교 총장은 한국외대에 문의하고 자문을 얻어 한국어를 설강한 것이다. 한·태 양



국간의 관계발전을 예지한 혜안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한·태간의 경제협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국어가 태국의 국립대학에서 강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문과대학에서도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는데, 송클라대학교와는 달리 야간특별강좌(비정규과목)로 개설하여 언론인과 일반사회인 또는 전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교육수혜자는 대학생도 있는 했으나 대부분이 사회인 또는 일반 성인이었다. 이보다 1년 앞서 1988년에 방콕에 있는 수언두삿교육대학(Rajabhat Institute of Suan Dusit, 현재는 전국의 46여 개의 교육대학이 “롱리엔라차팻”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반(半)종합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1~2년 내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것이라고 한다)에서도 비정규과목으로 야간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해 1999년까지 운영했으며,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강좌를 운영했다. 특히 탐마삿대학교는 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연구소 내에 한국학연구센터를 두어 처음부터 한국어보다는 한국학연구에 더 관심을 쏟았다.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보다 앞서 강의를 시작한 다른 대학으로는 개방대학인 람캄행대학교(Ramkhamhaeng University)와 태국상공회의소대학(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이 있다. 기타 사립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자유선택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한국어가 전국의 대학기관(주로 교육대학 수준)에서 강의되었는데, 나콘파툼교대(Rajabhat Institute of Nakhon Pathom, 중부, 1993~1999), 찬타카



셈교대(Rajabhat Institute of Chantakaem, 방콕, 1994~1998), 치앙마이교대(Rajabhat Institute of Chiangmai, 북부, 1995~1999), 치앙라이교대(Rajabhat Institute of Chiangrai, 북부, 1996~1998), 람팡교대(Rajabhat Institute of Lampang, 북부, 1996~1998), 우본라차타니교대(Rajabhat Institute of Ubol Ratchathani, 동북부, 1996~1998)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한국의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가 그 지원이 끊어지면서 강의를 폐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대학교가 한국어를 자유선택과목 이상으로 승격하여 강의하고 있다. 현재 자유선택과목의 형태(한국어 I, 한국어 II, 한국어 III)로 3학기제로 운영하는 대학교는 람캄행 대학교(방콕), 탐마삿대학교(방콕), 마하사라 캄대학교(Mahasarakham University, 동북부, 마하사라캄), 킨켄대학교(Khonkaen University, 동북부, 킨켄), 나레수언대학교(Naresuan University, 북부, 핏사눌록) 등이 있다.

자유선택에서 부전공과목으로 승격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는 출라롱킨대학교(1996), 신평켄대학교(Silpakon University, 중부, 나컨파툼, 2002), 시나카린위롯대학교(Srinakharinwirot University, 방콕, 2002)가



있다. 위 대학교에서는 자유선택과목으로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와 편익에 부응하고 있다. 방콕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채택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 만큼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요구가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강의를 펴지 않는 태국교육문화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자못 심오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기업의 중요성 인식으로 한국어 빠르게 보급·발전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승격하여 매년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송클라대학교와 부라파대학교(Burapha University, 동부)가 있다. 송클라대학교는 1998년에 부전공과목으로 승격했다가 다음 해인 1999년에 전공과목

으로 승격시켰다. 부라파대학교는 1995년에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한 후 4년만인 1999년에 부전공과목으로, 그리고 다음 해인 2000년에 전공과목으로 승격시켰다.

부라파대학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보급·발전시켰는데, 이는 비록 한국어교육을 타 대학교에 비해 뒤늦게 시작했지만 한국기업의 중요성을 대학교측이 빨리 읽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에 송클라대학교 파타니캠퍼스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던 파숙총장이 부라파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고 이 지역상의 특성에 착안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부라파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방센(춘부리)이라는 지역으로 방콕과 파타이의 중간지점으로, 공단이 들어서 있는 춘부리(방파콩)와 시라차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공단에는 한국의 삼성전



기와 삼성전자 및 그 협력업체가 들어서 있어 그만큼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이점에 착안한 대학교측은 다른 대학교보다 앞서 졸업생을 한국에 파견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함으로써 교수요원을 양성하여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준비의 뒤에는 한국의 코이카, 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태 한국대사관 및 부라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한국의 여러 대학교—충남대학교 및 한국외대 등—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

위 두 대학교가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공통적이나 다른 점은 송클라대학교가 당초 격년제로 신입생을 받는 정책으로 한국어과를 설치한 데 반해 부라과대학교는 처음부터 매년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부라과대학교의 정책을 영향을 받은 송클라대학교도 정책을 바꾸어 2001년부터는 매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물론 부전공과 자유선택과목도 설강하여 두고 있다. 부전공학생들의 수도 전공학생의 수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부라과대학교의 경우 한국어의 부전공선택은 2학년초에 이루어진다. 한국어과는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지원한 학생을 일일이 면접하고 1학년과정의 성적과 학습의지 및 면접 점수에 따라 일정 수를 선발



한다. 아무리 지원자가 많아도 절대로 30명은 넘지 않는다. 교육의 내용과 질을 고려해서다.

신입생선발과정에서도 최대정원을 3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25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수 30명을 다 채우지 않는 것은 지원학생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이 목적이 아니라 수강능력의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또 국립대학이므로 신입생 전체의 학력과 상호 대비·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라과대학교에는 90여 명의 한국어전공 학생과 70명 정도의 부전공 학생이 있다. 송클라대학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로 거듭나야 한·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화에 부응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데는 심도

있는 한국학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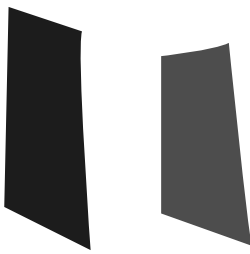
일본은 1930년대부터 태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나라이데다 태국인의 뒷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적지 않게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태국내 화인 또한 그 숫자상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제, 특히 상권은 예전에는 중국인이거나 그 후손들에게, 현재에는 일본인에게, 그리고 아주 최근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영향력이 갑자기 증대했으므로 그만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한국어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개설된 동양어권 언어라는 사실은 태국의 국익이나 아시아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그 중요성이 세 번째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하는 순서는 세계화의 시대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는 한·태 양국에게 공히 도움이 되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고 올바른 한국학의 연구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인 모두가,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안다.<sup>(140)</sup>



# 프랑스는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한다

## -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교육

신선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seonshin@kwdi.re.kr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투자를 맡게 되면서 약 10년 동안, 국가의 중등학교 시설투자는 1/3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이 지방의 의회는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수준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향후 5년간 동 센터의 운영비를...

### “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

2003년 3월 17일에 개정된 프랑스 헌법은 제1조에서 “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화(decentralisation)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새로 개정된 헌법은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재정적 자율권과 국민투표 실시권을 가지게 되었다.

새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 정부부처별로 분권화 개혁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교육부도 이를 위해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전국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분권화는 파리 중심의 중앙집권화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패턴의 모색을 요구할 뿐 아니라, 좀더 근본적으로는 지역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국가 국제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 파리만이 아니라 전국도와 전국민의 노동력을 고루 활용해야 하므로 분권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어서, 연방제 국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와는 매우 다르며, 우리나라에 좀더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안정권에 든 지방분권, 새로이 추가되는 교육개혁안

교육분야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이미 지방분권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방분권을 유지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1980년대 이후 중앙(교육부)에서 지방(지방의회)으로 권한이 이양된 주요 분야는 학교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교육계획, 직업교육,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과교육 이외의 각종 보충교육활동 등이다. 교원인사관리와 교과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구체적인 결정권이 위임되기는 하지만 지방의회가 거기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올해 헌법 개정 후 개혁안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에게 좀더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며, 특히 국가적인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교가 스스로 교육서비스 공급을 결정하며, 교육청은 그에 대한 질 관리를 담당한다.

2. 직업교육에 관한 학군 조정과 지역별 교육공급의 조절은 교육청장과의 협조하에 시·도의회



(Conseil régional)가 결정하며, 진로지도와 직업정보 제공 서비스는 시·도가 담당한다.

3. 각급 학교의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군·구(Départements)에서 책임진다.

4. 각급 학교의 지원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5. 평생교육(계속교육)에 관해서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가지며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지역별 교육공급을 조절한다.

6.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한다.

7. 대학생의 숙소는 인구밀집 지역이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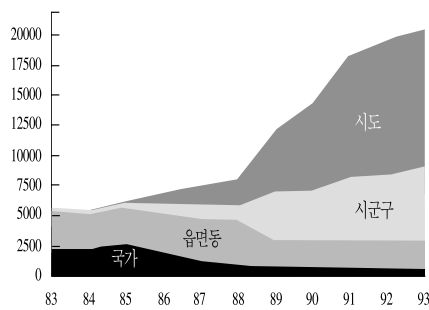
### 국가의 학교투자비는 줄었고 지자체 학교 투자비는 늘었다

프랑스에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공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코뮌(Commune)이, 중학교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이, 고등학교는 시·도에 해당하는 레종(Région)이 학교의 신축, 확장, 보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교육계획(S.P.F.)과 교육투자계획(P.P.I.)을 수립한다.

두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기 교육수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들(학교급별 학교수, 학생수, 학급당 인원수, 졸업자의 진로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당자료를 기초로 신규 교육

시설의 필요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해당지역의 향후 경제사회발전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계획(안)을 만든다. 이 안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위원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중학교의 교육계획안은 시·도 의회의 심의 이전에 시·군·구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교육투자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과정은 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계획 수립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공급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려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설투자와 함께 교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원의 채용, 평가, 인사관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계획과 교육투자계획 수립 후, 교육부가 그에 따라 교원배치 계획을 세워야 최종적으로 신규로 설치할 학교 리스트가 정

중등학교 시설투자에 소요된 지출예산 1983~1993



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투자를 맡게 되면서 1983년에서 1993년까지 약 10년 동안, 국가의 중등학교 시설투자는 1/3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중학교의 시설투자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고등학교 교육의 팽창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시·도의 지출예산 증가가 매우 크게 늘었다.

### 사회진출 전 한가지 이상 직업교육 받아야

지방자치단체는 1993년 12월 20일자 법에 따라 직업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직업교육에서 지방분권이 먼저 실시된 이유는, 직업교육을 통해 공급되는 인력이 지역 경제의 인력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육형태, 내용, 참여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해 중앙정부보다는 교육현장에 좀더 근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법에 따르면 각 시·도는 “시·도직업교육발전계획(Plan régional de développement d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에서 교육부장관을 대표하는 교육청장은 시·도의 직업교육발전계획 마련에 참여해 국가의 직업교육정책을 시·도 계획에 반영한다. 시·도의 계획은 학교(직업고등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직업교육을 모두 포괄하며, 진로지도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프랑스 남부 Midi-Pyrénées 지방의 경우, 70개의 견습생 훈련센터 (Centres de formation d'apprentis)에서 16세에서 25세 청소년 15,000명이 300여 개 중에 이르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이 지방의 의회는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수준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견습생훈련센터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향후 5년간 동 센터의 운영비를 1,900만 유로에서 3,120만 유로로 늘이고, 센터의 신설과 증축에 20억 유로를 투자하며, 매년 20종의 훈련 프로그램을 증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3월 26일에는 직업교육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교육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견습교육에 대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가 개최되는 주간에 56개의 견습생훈련센터와 직업고등학교를 일반인에게 개방해 직업교육실태와 여건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참고로 견습생훈련센터는 학교에서의 일반 교육을 포기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청소년들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세계에 진출했으나 계속교육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키려는 청소년들을 다수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는 1989년부터 모든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후 현재까지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

을 마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견습생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 보충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실패” 막는다

지방의회는 정규 교과와 교육내용과 그것을 위한 교육활동의 조직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생의 이질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예를 들면 Hauts-de-Seine(군단위 지역)의 보충교육활동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지역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1988년 군의회 의장을 맡은 샤를르 파스꾸아는 교육을 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학교 학교실패(échecs scolaires)를 예방하기 위한 보충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유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학교실패”라고 말한다.

1988년 가을에 보충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고 1989년 1월 지역의회를 통과해 68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성공을 거둔 뒤 다음 신학기에는 2학년 학생까지 확대되었고,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두 프로그램에 “학교실패 방

지계획(Plan de lutte contre l' 'echec scolaire)”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그 후에도 이 계획은 계속 실행에 옮겨졌는데, 보충교육 프로그램은 군내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었고, 초등학생 독서지도 프로그램은 군내 약 90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사업결과는 매년 군 교육위원회에 보고되었고 지방의회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199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지역사회대표, 교육청 장학관, Antony 사범학교, 파리8 대학의 교수 등이 참여했다.

#### 프랑스 지방자치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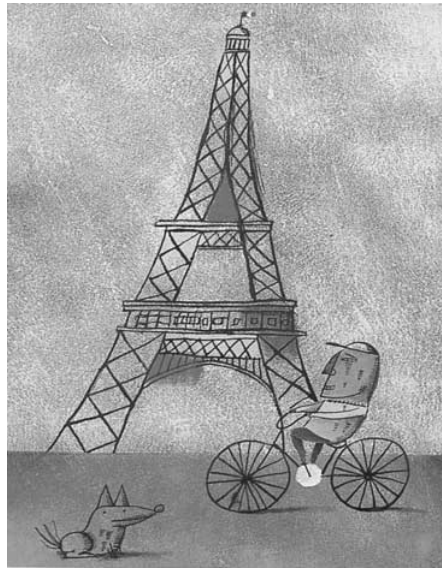
프랑스의 공립 중등학교는 사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 만이 아니라 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등학교는 “법인격(personnalité morale)을 가진 공공단체(établissements publics)”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등학교의 법인화는 1960~70년대 중학교 교육이 팽창할 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등학교의 시설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법인화된 중등학교는 그동안 재정적, 행정적 자율성만을 가지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거의 없다가, 80년대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국립교육공공단체에서 지방교육공공단체로 법적 지위를 바꾸면서 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받게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등학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중등학교는 매년 학교 재량에 맡겨진 사안을 포함하는 전체 교육계획, 즉 “학교계획 (Projet d'établissement)”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원대표,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 3개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각 집단의 대표자수는 동수이다. 학교계획에는 국가적 수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마련된 다양한 교육정책(교육우선지구 정책, 교육방법 개선 정책,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학생 진로 정책, 계속교육 정책, 학부모 참여유도 정책, 기업체와의 연계 정책, 졸업생 취업촉진 정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단위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지방교육공공단체로서의 중등학교를 통제하는 일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그러나 교육행위의 조직과 내용에 관한 통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소관이다. 교육활동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청에 보고되어야 하며, 교육청에 접수된 후 15일 이후에만 효력을 갖는다. 그 기간 동안 교육청은 접수된 내용이 관련 법규나 공교육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 밖에서 이루어진 학교장의 교육활동에 대한 행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받는다. 다만, 이 경우의 통제는 후원자로서의 통제가 아니라 상하 위계질서에 의한 통제라는 점이 다르다. 교육행위의 조직과 내용에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통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교육청,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제지가 없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삼자 중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사안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법에 어긋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장이 결정권을 갖는 사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

원회는 동의권만을 가지며,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음), 3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판사에게 집행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통제한다.

### 생각해 볼만한 프랑스 교육 지방분권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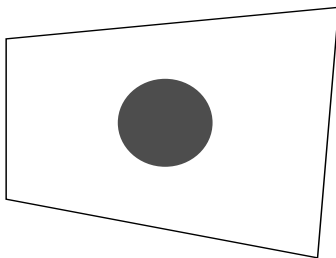
프랑스 교육의 지방분권은 중등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획일적 교육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게 되었고 학생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지방분권은 학생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지역의 교육수요에 맞추게 하고, 지방과 지역의 인구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를 둘러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개혁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문제는 점점 더 크게 산적되고 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모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의 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지역,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프랑스의 교육 지방분권 정책도 그러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21C 일본은 '마음이 풍요롭고 씩씩한일본인' 을 육성한다

-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로 새로운 사회상을 탐색한다

이정미 | 도쿄세이토쿠대학 교수, leejm@pop06.odn.ne.jp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취직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긋하게 젊음을 즐기며,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미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사회가 1990년 이후 고도경제성장사회의 정점을 지나,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경제성장에만 가치를 두었던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었던 사회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탈바꿈, 즉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씩 인식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그럼에도 그런 사회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사회적 틀과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을 전망할 수 없으므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욕구불만은 점점 도가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흔들리는 속에서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돈에 빠져 있으며,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과 행동 패턴을 통해 자기주장을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면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며 효율적인 삶을 추구했던 기성세대의 가치에 반발하며,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

면서 느긋하게 젊음을 즐기며,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미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나 사회, 회사, 조직을 우선시했던 가치관에서, 언제 회사로부터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개인 분위의 가치관이 점점 우위에 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새로운 '사회상'의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탐색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교육기본법'의 개정 논의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마음이 풍요롭고 씩씩한 일본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11월에 문부과학성이 '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책정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된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에 지문을 요청하면서이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심의회 산하의 '기본문제 부회'에서 심의를 계속해 왔으며, 일본의 교육 실정과 과제, 앞으로의 교육목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기본법과 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대





해 심의했다. 이런 경과를 거쳐 2002년 11월에 '중간 보고'를 발표, 5회에 걸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이듬해 2003년 3월 20일에 최종보고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된 교육기본법과 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답신에서는 '21세기를 개척하는 마음이 풍요롭고 씩씩한 일본인의 육성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새롭게 추구되어야 이념으로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개성, 능력, 창조성의 함양', '일본의 전통·문화의 존중, 향토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함양' 등의 8항목을 제시하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의 주된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요약〉**

- '21세기를 개척하는 마음이 풍요롭고 씩씩한 일본인의 육성'을 지향한다.
-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前文)을 두고 현행법의 기본적인 이념은 계속하여 규정한다.
- 새로운 이념으로서 ① 개인의 자아실현과 개성·능력, 창조성의 함양, ② 감성, 자연이나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 ③ 사회형성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공공' 정신, 도덕심, 자율성의 함양, ④ 일본의 전통·문화의 존중, 향토나 국가

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식함양, ⑤ 생애학습의 이념, ⑥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응, ⑦ 직업생활과의 관련성의 명확화, ⑧ 남녀공동참가사회에 기여 등의 취지를 전문 혹은 각 조문에 규정한다.

- 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책정근거를 규정한다.
- 학교의 역할에 대해 지·덕·체의 조화가 이루어진 교육을 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 교원이 연구와 수양에 전념하여 자질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있음을 규정한다.
- 가정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 근거하여 가정교육의 역할에 대해 규정한다.
- 국가·사회의 제반문제의 해결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의식이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규정한다.
-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와 지식, 종교가 가지는 의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규정한다. (시사통신 '내외교육' 2003년 3월 28일자)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지금까지 수정된 적 없어**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체제 속에서 교육기본법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교육기본법은 1947년 3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일본이 패전후 민주주의 사회 제도를 새롭게 구상하면서 전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교육입법의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

후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명시하고 교육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전문(前文)과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전문〉**

우리들은 먼저 일본국헌법을 확정하고 민주적이며 문화적인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려는 결의를 보였다. 이 이상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육성을 꾀함과 동시에 보편적이면서도 개성이 풍부한 문화의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의 보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이 전문에 제시된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목적은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을 중히 여기며, 자주적 정신에 가득 찬 심신 모두가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또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교육방침,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남녀공학, 학교교육, 사회교육, 정치교육, 종교교육, 교육행정 등의 조향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후 5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동안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은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개정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전후교육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육기본법이 일본의 민족적 전통을 부정하고 '조국에 나 애국심'을 결핍시키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전후'라는 특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한편으로 평화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지키려는 지식인, 교육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전쟁 중의 잘못된 교육체제를 근절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개인의 존엄, 진리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기본법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56년만에 개정논의 되는 교육법 내용

그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움직임은 어떠한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답신에서는 첫 번째로 일본사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자신감 상실이나 폐쇄

감이 깊어지고, 윤리관이나 사회적 사명감이 상실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저하나 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침체로 인해 취직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교육 역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서, 청소년이 꿈을 가지기 어려우며 규범의식이나 도덕심,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이시메



나 등교거부, 중도퇴학이나 학급붕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정이나 지역의 교육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애정을 돈독히 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며, 초·중·고등교육단계부터 고등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중·고등교육에 있어서 '확실한

학력'의 육성과 대학·대학원에 있어서 기초학력, 유연한 사고력·창조력을 지닌 인재의 육성, 교육연구를 통한 사회공헌이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사회와 국제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국민의식도 변모했으며, 교육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이념도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답신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직면한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보편적인 이념은 존중하면서 앞으로 중시해야 할 이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반에서 서서 교육의 각 분야에 걸친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①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자립한 인간의 육성, ② 풍요로운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인간의 육성, ③ '지(知)'의 세기를 이끌어 갈 창조성을 가진 인간의 육성, ④ 새로운 '공공(公共)'을 창조하고 21세기의 국가·사회의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일본인의 육성, ⑤ 일본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교양 있는 일본인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의 근본인 교육기본법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착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답신에서는 위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정의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의 '개



인의 존엄', '인격의 완성',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의 이념은 앞으로도 중요시하면서 21세기를 개척하는 마음이 풍요롭고 씩씩한 일본인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① 신뢰받는 학교교육의 확립, ② '지'의 세기를 이끌어갈 대학개혁의 추진, ③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의 추진, ④ '공공'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의식이나 태도의 함양, ⑤ 일본의 전통·문화의 존중, 향토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함양, ⑥ 생애학습사회의 실현, ⑦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개정 찬반 논의, 정작 일본 국민들은 시큰둥

현행의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과 더불어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장치이며 의지의 표현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의 유식자와 교육관계자, 교육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교육과 문화를 세계로 여는 모임'에서는 '교육기본법의 개악(改惡)에 반대한다. 교육과 문화를 세계에 열린 것으로 하기 위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모임은 이번 답신이 제시한 개정안은 '일본의 전통·문화의 존중'을 주장하며 '애국심의 육성', '복고적인 도덕교육의 강화', '국가에의 봉사·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능력주의·경쟁주의·강자의 논리에 의한 교육재편을 촉진하려는 내용이라고 비판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과 일반론을 제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 논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내에서도 집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과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문부성은 올해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결국 연립여당으로 구성된 '교육기본법에 관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법안 제출도 내년 국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기본법 개정은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내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사회가 지향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향하려는 사회상의 청사진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런 분위기 속에서 전후 반세기 동안 추구해 온 '평화'를 주축으로 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가 자칫하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앞으로 일본사회는 '새로운 사회상의 탐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더욱 성숙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사회와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진지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본법 개정은 새로운 교육의 이념과 원칙을 제시하려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탁상공론으로 끝날 뿐이다. [20]

# 통일 베트남, 그 개혁의 선두에 교육이 있다

- 베트남 사람들의 교육 : 통일 교육의 개발과 현재 상황 및 향후 발전 전망



Bui Minh Hien(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교수, hienbm@hep.edu.vn)

베트남 국민들은 높은 학습열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인구의 1/4 이상이 매일 정규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2001~2002년 통계에 따르면 약 7,600만 베트남 인구 중 2,300만 명이 학생이고 이들은 모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국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분야이고 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은 베트남 정부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베트남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다.

## 1. 베트남 국민의 통합교육과정의 발전과정과 특징 : 1975년 - 현재

약 80년간의 프랑스 식민통치로 인해 (1858~1945), 베트남 교육에 가장 큰 저해요소는 가난이었다. 단지 상위계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945년 독립 전까지 전 국민의 95%에 이르는 국민이 문맹이었다. 1945년 7월 프랑스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후 베트남은 두 지역으로 나뉘었다. 북쪽지역은 민주주의성향의 교육시스템에서 차차 사회주의성향의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사이공정부의 전신인 남쪽지역은 공화정을 추구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에 통일되었다. 통일은 베트남 역사, 특히 베트남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의 통일은 80년간의 프랑스 침공과 20여 년간의 미국과의 전쟁 후에 국가적인 독립을 위한 오랜 동안의 힘든 투쟁의 결과이다.
- 정치, 군사, 외교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전체적인 투쟁 후 1975년 봄, 전격적인 군사공격으로 베트남 남부에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인 사이공 정부를 제거했다.
- 이러한 요인들은 식민교육을 탈피해서 베트남 통일후의 향후 발전방향과 북쪽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기반으로 남쪽에 세워지게 될 통일후의 새로운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 1. 통합교육과정의 장단점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통일 후 5년 동안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많은 좋은 결과도 만들어냈다.

### 장점

- 많은 외국 국가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통합교육을 만드는데 있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꺼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이공 정부시절 동안 남쪽지역에서 혁명의 기반과 그 지역 주민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주된 힘으로써 많은 역할을 했다.
-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년간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온 경험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 북쪽지역 정부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전쟁 후에 남쪽지역을 점령한 후에 통합 교육시스템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북쪽지역 정부는 남쪽지역에 모든 분야에 걸친 통합 교육시스템을 세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계획은 전환과정을 감독하고 교육자들과 교육행정가들을 뽑고 남쪽지역에 제공될 교과서 등을 만들고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계획이다.

### 단점

- 교육모델, 교육 구조, 목표, 과목, 방법론, 관리방법, 강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미국에 이르는 주로 서방 교육을 따랐던 남쪽과는 달리 주로 소련의 교육모델에 영향을 받은 북쪽지역의 교육양상은 서로 달랐다.
- 남쪽지역에서는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들의 엄청난 부족으로 인해서 재훈련과 재교육이 필요했다.
- 교육시설, 교육자료, 교재 등 남쪽지역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될 교과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 베트남의 몇몇 지역에서 교육시설과 강의 자료들은 전쟁동안 많이 없어지고 쓸 수 없게 되었다.

1975년 통일 후 통합교육을 세우는 데 많은 제반사항의 필요로 인해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남부지역에서의 교육의 특징과 식민지의 흔적은 통일이 된 국가에 사회주의 공화국정부의 교육체계를 세우는 것을 어렵게 했다.

## 2. 통합교육을 세우는 과정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말에 베트남 사회에서 축적된 경험들과 혁명에 대한 전망에 기초를 한 베트남 공산당은 중요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단지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이 아닌 공산주의 사회로의 국민들의 이념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전반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다.

1975년 독립 후 1년 동안 남쪽지역에 있는 모든 공·사립학교는 통일된 사회주의 체계로의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받았다. 통일 후 첫 번째 학사일정에 대해 베트남 전역은 환영했다. 1975년 4월 30일, 목표로 했던 베트남의 통일 계획이 시행된 후에 1975년 9월, 아무런 사건도 없이 베트남 전역에서 학교들이 개교했다.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들은 거의 폐교했고, 공립학교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약 80년간의 프랑스 식민통치로 인해 (1858~1945), 베트남 교육에 가장 큰 저해요소는 가난이었다. 단지 상위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945년 독립 전까지 전 국민의 95%에 이르는 국민이 문맹이었다.

남쪽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들은 거의 폐교를 했고 공립학교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남쪽지역에 위치한 이전의 사이공 정부 아래 있었던 교사들은 정치학과 새로운 이념, 문화, 교육개념, 객관성, 새로운 교육체계에서의 수업과정을 배우게 될 단기 교수법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 아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재임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들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 코스를 만들었다. 북쪽지역 출신의 수천 명의 교사들은 남쪽지역 교사들을 감독하고, 남쪽지역 학교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북쪽지역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수천 명의 졸업생들은 남쪽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남쪽지역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2천만 권의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 1976년에 모든 학교에 교과서가 배부되었고 교육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다.

1975년 이전에 남쪽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은 17개였다. 7개의 공립학교와 10개의 사립학교였다. 교육체계와 이수과정과 인증과정은 모두 프랑스 방식을 따랐고, 1970년대 초반에는 몇몇의 학교에서 미국식을 따랐다. 시스템적으로 통합한 후에 남쪽지역의 고등학교들은 15개의 새로운 학교를 포함해서 재조직되었다. 이들 학교는 단계적으로 북쪽학교들의 형태와 같은 절차를 뒤따랐다. 남쪽지역의 대학들은 교육행정, 학위, 교과과정 개발, 교과서, 그리고 통합된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업자료와 국가적인 교육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북쪽의 대학으로부터 원조와 지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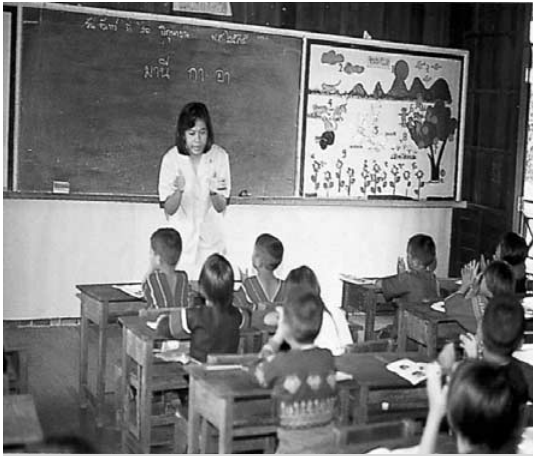
남쪽지역에서의 5년간의 새로운 교육시스템 도입과 수행 후, 1981년~1982년 교육과정 동안 베트남 전역의 학교들은 북쪽지역의 10학년제 교육과정과는 달리 12학년제 교육과정을 새로이 도입했다. 새로운 교과서들이 전국에 배포되었고, 교과과정 역시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결국 베트남은 전역에 걸쳐서 통합된 교육과정을 완전하게 수행된 것이다.

### 3. 베트남 전역에서의 통합 교육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 이념과 객관성, 방법론, 교육 기관 모델, 통합교육법 등에 관해서 베트남 전역에서 통합 교육시스템이 수행되었다. 통합교육의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이론에 기초한 대중적, 국민적, 과학적, 현대적,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를 했다.
-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동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었다. 여기에는 사회계층과 성, 그리고 종교, 직업과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 전체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에서는 교과과정과 정규 교육을 위한 기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여기에는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 이상 모두를 포함하였다.
- 수업료 지원 시스템은 의무교육 실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 1989년 이전에 정부는 의무교육에는 무상교육을 제공해왔다.
- 전국에 걸쳐서 제2차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제 2차 의무교육의 목표는 2005년까지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며, 2010년까지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이다.
-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 모든 학교의 입학과 시험체계, 인증체계, 졸업인증은 모두 표준화되었다. 또한 통합 교육행정시스템도 체계화되었다. 정부는 대표적인 표준안을 제공하고, 지방의 학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 II. 현재의 베트남 교육시스템

1989년 이래로 베트남은 소위 Doi Moi라고 불리는 Renovation policy(혁신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개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계획형 경제에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 과정은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인플레이션 감소와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결과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들은 거의 폐교를 했고 공립학교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남쪽지역에 위치한 이전의 사이공 정부 아래 있었던 교사들은 정치학과 새로운 이념, 문화 교육개념, 객관성, 새로운 교육체계에서의 수업과정을 배우게 될 단기 교수법을 이수해야만 했다.



북쪽지역 출신의 수천 명의 교사들은 남쪽지역 교사들을 감독하고, 남쪽지역 학교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잘 수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북쪽지역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수천 명의 졸업생들은 남쪽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를 이끌어냈다. 교육 분야에서 이 혁신정책은 또한 사회의 주요한 필요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교육 분야에서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론에 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급진적인 혁신개혁은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야 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있어서 교육과 훈련은 국가정책에 최우선 순위였다. 그래서 교육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 1. 모든 교육과정의 통합화와 다각화

오늘날까지 베트남에서는 유치원교육에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통일되고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유치원교육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유치원 교육과정은 3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이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초등교육과정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수업을 받는다. 그런 다음 6학년부터 9학년까지 아이들은 4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받으며,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등교육과정을 받는다. 고등교육과정은 2년에서 6년까지 차등을 두어 교육을 받는다. 마지막 과정인 대학교 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의 세 과정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형식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강의와 연구력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국·공립학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비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까지 세분화되었다. 또한 수업의 형태는 full-time 수업과 part-time 수업, 장기코스과 단기코스, 정규수업과 비정규수업, 훈련과 재훈련 수업, 공개강좌, 원격수업, 외국기관이 포함된 공동수업과 같이 나뉘어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1989년 이래로 비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개방해 왔다. 1990년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는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제한하고 규정을 했던 많은 규범들을 제거했다. 사립학교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과 규정들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전체 학생수에서 비공립학교의 학생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탁아소의 학생들은 66%, 초등학교 학생의 수는 50%, 중학교 학생수는 34%, 고등학교 학생수는 11%에 이른다.

### 2. 학교의 수

학교의 수도 처음에는 사회의 요구 수준에만 충족되었지만, 최근에는 급

격하게 증가되었다. 2001년~2002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2,300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250만 명의 유아들과 1,800만 명의 초·중등학생들과 27만 1,000여 명이 고등계절학기 수업을, 82만 명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40만 명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서 운용되는 계절학기 수업을, 100만 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 1995년~1996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학생의 수는 24%가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1996년에 46만 4,000명에서 2002년에는 두 배가 넘는 97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고등학교 수는 1990년대 초반 120여 개에서 1998년에는 157개, 2002년에는 178개로 증가했다. 계절학기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역시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다.

### 3. 교육수준의 향상

교육의 수준 또한 역시 여러 면에서 성장했다. 많은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Good”이나 “Excellent” 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 또한 역시 5%에서 10%로 증가했다. 천재들을 위한 교육은 주변국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이다. 1996년 7월 제27회 세계 물리올림피아드대회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되었을 때, 베트남 학생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제37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해 전체 37개국 중에 7위에 랭크되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성장해 왔다.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사회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학사에서 박사 출신들처럼 성장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 4. 교육의 보편화와 문맹률 감소

1985년까지 베트남 정부는 독립 후 9년간의 일반교육과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학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신정책을 채택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베트남 국민들 중 많은 수가 문맹이었다. 특히 1989년~1990년 동안에는 15~30세의 국민 중 약 12%에 이르는 약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문맹이었다. 또한 6~14세의 아이들 중 약 20%의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문맹인 학생들은 산이나 해안가, 시골, 그리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교육 불모지에서 살고 있었다.

게다가 초등학교 교사들은 질적인 면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했고, 중학교 역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부족했다. 결국 초등학교 교육의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고, 유급자와 자퇴자가 21%까지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 교육은 걸림돌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시설은 매우 낡아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루에 3부제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교육부를 필두로 10개의 정부부처와 기관들 출신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가문맹퇴치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Illiteracy Struggle)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가문맹퇴치위원회는 문맹퇴치와 초등학교 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후 1990년 1월에 문맹퇴치위원회 위원장은 No.01/HDBT라는 계획을 발표한 뒤 시행했다. 또한 1991년에는 국회가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해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해에는 7차와 8차 당회의와 중앙당 전체회의에서는 문맹을 퇴치하고 전체적인 초등학교 교육을 촉진시키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법의 시행과 2차에 걸친 당회의 결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맹퇴치와 초등교육 보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게 했다. 이와 비슷하게 각각의 위원회와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책임도 규정했다. 여러 정부 단체들은 문맹퇴치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서 각 단체들과 대규모의 단체들의 참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매년 교육부와 국가문맹퇴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전국에 이 캠페인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에 이르러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냈다. 그리고 2010년까지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둔 중등교육의 보편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베트남 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



어,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중 98%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한다.

## 5. 교육의 사회적 평등

오늘날 베트남은 53개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 그 중 전 국민의 80%는 King족 출신이다. 베트남은 교육을 받기 힘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소수민족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 즉, 그들을 위해서 초·중등 기숙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 결과 2001년까지 약 250개의 기숙학교와 100개의 세미 기숙학교가 소수민족을 위해서 세워졌다.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한 많은 세미나들이 UNICEF와 UNESCO와 같은 국제단체들과 1993년 11월 Education for the Khmer ethnic in South Vietnam, 1993년 7월 Education for the Cham ethnic, 1993년 12월 Education for the H'mong ethnic group과 같은 단체들의 도움으로 열렸다. Thai, Cham, Kh'mu, Bana, Giarai와 H'mong를 포함한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와 도서 벽지에서 100~120주의 학교수업과정을 위한 교과서가 출판되는 수많은 업적들도 있었다. 그리고 3학년과 1학년을 통합하는 실험과 교사들에게 다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기초 건강관리훈련을 받는 과정도 수행되었다.

고산지역에서의 지방 단과대학 교육과정과 Thainguyen, Hoa Binh, Tay Bac, Tay Nguyen과 Da Lat와 같은 산간지역에서의 지방 대학교 교육과정이 세워지거나 개선되었다. 오늘날에는 15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 중 약 94%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 평균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은 약 7.3년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성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6. 수업료 지원 시스템

수업료 지원 시스템은 비록 많은 제한된 부분에서 제공되기는 하지만,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2000년에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가계의 지출은 교육과 훈련에 쓰이는 정부와 가계의 총 지출액의 30%를 차지한다.

## 7. 정부보조장학금

정부보조장학금과 그 외 다른 출처로부터의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보조 장학금은 1990년도 8% 수준에서 2000년도 15% 수준까지 증가했다(국내총생산의 3% 수준) 다른 프로그램들과 대형 프로젝트들이 교육발전, 특히 일반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금을 끌어들었다.

## 8. 고등교육

### 고등교육기관의 수

2003년 현재 베트남에는 17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이 중 사립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 17개이며, 전문대학이 65개이다. 전문대학 분야는 현재 41개의 사범대학과 농업, 의학제휴, 미술, 은행업과 증권연구 분야의 과정을 제공하는 24개의 직업전문훈련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학은 교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교장은 교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교수투표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1989년 이후 대학들은 학교당국과 학생 대표의 선거를 통해서 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MOET(교육훈련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학네트워크의 재구성

대학네트워크는 4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 각 전문 분야 협력대학들(국공립)은 크게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국립대학(하노이와 호치민시)과 세 개의 지방대학(휴, 다낭, 텐징)들은 이미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몇몇의 구 전문대학의 합병으로 설립된 대학들이다. 특

히 경제, 공학, 미술, 법, 의학, 약학, 건축 등 한 분야의 연구에 중점을 둔 각각의 전문화 대학들이 세워졌다.

- 2) 베트남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최근에 세워진 대학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설립된 열린 대학이다.
- 3) 사립대학(준공립대학, 일반투자대학, 개인사립대학)은 조종대학과 공공단체와 지역사회에 의존하는 대학들이다.
- 4) 많은 수의 국제훈련대학들은 재료과학 대학원이나 정보통신과학훈련 대학과 같이 개방되어 있다.

###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입학

대학의 입학은 교육훈련부를 통한 두 분야의 과정이 연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먼저 중등학교졸업시험(SSLE)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한 20점을 받아야 한다. SSLE는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해력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각각 최대 10점씩 총 40점이다. 1986년 이전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시험이 교육훈련부 중심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부터는 대학과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선택과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모든 대학의 입학시험은 다시 교육훈련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시험을 통한 대학입학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학부과정

학부과정에는 단기과정과 장기과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단기과정은 전문대학이나 지역사회대학에서 제공되는 과정이다. 이는 보통 3년의 기간이 요구되는데, 고등교육수료증, 전문대학졸업장이 수여된다.

장기과정은 대학에 의해 제공되는데, 보통 4년에서 6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장기과정은 졸업과 동시에 고등교육졸업장과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예술과 과학, 교육, 경영, 그리고 외국어는 보통 4년의 학업기간이 요구된다. 공학, 농학, 그리고 약사학위는 보통 5년이 걸리고, 의학이나 치의학 과정은 6년이 걸린다.

### 대학원 과정

1976년부터 베트남의 대학원교육은 구 소련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구 동부권 국가들의 교육 기회의 축소와 서방경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융통성 있고 능률적인 대학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사학위는 2년의 학업 기간과 외부시험관들 앞에서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 과정은 경쟁시험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석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가능하다.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이후 최소 2년의 학업기간과 논문이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수여된다. 물론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4년 동안의 석·박사학위 단기 수료에 추천될 수도 있다. 또한 뛰어난 성적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한 정치학, 외국어, 그리고 관련 대학 또는 직업전문과정의 소위 말하는 'MINIUM'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입학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교육훈련부에 의해 선발된 국립위원회 의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 박사학위는 요즘 베트남 학교들 사이에 가장 유망한 최고의 학위이다.

## 9. 유학기회

1990년 이전에는 베트남은 주로 구 소련과 다른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교환 학생과 교육, 기술훈련 분야의 과정을 연계해

학점제도 : 학점제도는 1998년에 전국에 걸쳐 이전의 과목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전의 제도에서는 한 반의 학생들이 한 과정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모든 학위 과정 내내 같은 교육과정으로 같이 지냈다. 그러나 새로운 학점제도에서는 각 과정마다 학점을 배당하고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규정된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4년 학기는 보통 210학점 정도가 요구된다. 5년 학기는 270학점, 그리고 6년 학기는 320학점이 요구된다. 학점제도를 수행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한 학과 이상의 것을 배우는 데 더 융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타 대학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세계 교육체계에 좀더 일치한다는 데 있다.

왔다. 1952년부터 1990년까지 베트남은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구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보냈다. 특히 구 소련은 3만 명의 학부생과 1만 5,000명의 대학원생, 2만 5,000명의 기술자와 수천 명의 다른 과학자들을 포함해 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의 훈련을 도왔다.

그러나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1991년 이후로 베트남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예전의 문화와 교육의 협정은 사실상 끝났다. 이 때부터 베트남은 교육에서 69개의 국가, 19개의 국제조직, 그리고 70개의 비정부조직과의 국제적인 연계를 확장했다.

특히 매년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호주,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하는 약 1500~2000명의 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수의 전액장학금이 대학, 협회, 또는 자치단체들로부터 직접 베트남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약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선단체의 장학금이나 자기 돈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 10. 현재교육체제가 당면한 과제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의 교육체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베트남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이 앞서나가기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교육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편 베트남 교육이 주변국과 세계의 진보된 수준에까지 아직 오르지 못했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처럼 초기 발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교육은 학기수준과 직업훈련, 그리고 지역 불균형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자의 부족과 교수의 질이 입학생 증가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정도로 충분치 않은 것이다. 동시에 교육의 질 강화와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 조직은 여전히 개혁할 여지가 많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편의시설과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구도 빈약하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또한 교육체제의 관리조직이 매우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물론 최근에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투자도 여전히 최고의 결과를 내기에는 불충분한 상태라는 것도 베트남 정부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 III. 2010년까지의 교육발전의 전망

### 1. 종합적인 목표

2001~2010 교육개발전략계획은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계획은 좀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만들고, 베트남 교육이 주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일반 대중의 지식수준을 강화하며, 인력을 훈련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2001~2010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의 수행에 실질적인 면을 얻기 위한 변화와 표준화, 현대화, 사회참여의 목적과 조치, 단계, 그리고 향후 방향을 말해 주고 있다.

- 베트남 사회에 적합하고 사회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교육의 질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회를 지식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교육의 수준은 주변 선진국에 필적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 인력훈련의 질적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의 강화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훈련과 우수한 경영인, 숙련된 사무관리자, 숙련된 실무관리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우선적인 관심은 낮은 중등교육의 빠른 보편화에도 주어지고 있다.

- 목표와 취지, 방법,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과정개발의 혁신, 입학생 증가와 교육의 질과 효과의 향상과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에 만족할 만한 교수자의 개발, 교육경영의 혁신, 교육개발을 위한 내부추진 의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 2. 다른 방식의 강의와 수준에 따른 개발

이는 교육의 질과 효과의 증가와 함께 수준과 경력, 그리고 지역에 따른 인력구조에 적합한 입학생수의 계속된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두 번째 목적은 2010년까지 훈련된 노동력의 상이한 수준을 전문대학 수준과 그 이하는 6%, 직업 중등교육은 8%, 그리고 기술자들로 구성된 26%로 구성해 40%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국내 중등교육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다른 모든 주민들 특히 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좀더 제공하는 것이다.

### 일반교육

- 초등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의 장점을 개발하고, 지식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학습에 기초적인 기술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국에 걸친 초등교육을 보편화하는 데 있다. 또한 이는 초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을 2000년의 95%에서 2005년까지 97%, 그리고 2010년까지 99%로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하급중등학교의 주목적은 하급중등수준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하급중등교육 이후의 학생들의 편입을 위해 공학과 직업동향에 관한 예비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거나 또는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2005년까지 지방과 도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달된 지역에 보편화된 하급중등교육의 표준에 부응하고 전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의 하급중등교육학생 비율을 2000년까지 74%에서 2005년까지 80%, 그리고 2010년까지 90%로 올리는 데 있다.

- 상급중등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절한 표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기초교육을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능력별 학급편성을 수행하는 데 있다. 동시에 모든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기술적인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고 상급중등교육 이후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려해 주기 위해 직업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도록 하거나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분야를 잘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상급중등교육에 학생들의 입학률 2000년의 38%에서 2005년 45%, 그리고 2010년 50%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 전문중등교육

전문중등교육의 목적은 (1) 사회경제개발의 요구에 접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훈련체도를 설립하는 것이다. (2) 단기 직업훈련과 상급중등 또는 전문 중등교육을 기초로 한 높은 수준의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사원의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3) 이 나이 또래의 학생 10%를 2005년까지 끌어들이고 2000년까지 15%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직업훈련에서의 목적은 이러한 하급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직업훈련학교에 2000년도에 6%, 2005년까지 10%, 그리고 2010년까지 15%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좀더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에서의 목적은 상급중등교육과 전문중등교육을 마친 5%의 학생들을 2005년까지 이 훈련에 끌어들이고 2010년까지 10%를 끌어들이는 데 있다.

### 고등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목적은 양질의 인력, 산업화와 현대화와 세계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국가의 경쟁과 협력의 강화의 사회경제 요구사항에 관련한 필요에 만족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은 자격, 학력, 그리고 인력 할당에서의 교환체도를 수립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유망한 훈련 과정과 자기 경영과 다른 분야에서의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목적은 석사과정 입학생 수를 2000년도 1만 1,727명에서 3만 8,000명으로 증가하고, 2000년도 박사과정 학생수 3,870명에서 2010년까지 1만 5,000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인구 1만 명당 118명의 고등교육 학생수의 증가, 그리고 2010년도까지 20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비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을 위한 목적은 비형식 교육을 근로자들의 지식과 인적자원의 질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상황에



2000년경 베트남은 성공적으로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완성해냈다. 중등교육의 보편화 계획의 목표는 2010년까지 18세 이하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중 98%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한다. 이 통계는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따른 평생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사람, 모든 수준, 나이,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기회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지식사회의 구조에 적합한 공동사회의 흐름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성인 교양교육

성인 교양교육의 목적은 성인들, 특히 산악지대, 도서 벽지에 있는 성인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성과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교양 프로그램 제작자를 양성하고 초등교육 이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수년 후 하급중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생계훈련

이 계획은 수입의 증가와 직업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기술개발계획에 기초로 한 단기, 정기 또는 규칙적인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학습하고 재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의 다른 목적은 지역 수준의 제도로부터 교수, 경영, 관리자, 지도자, 그리고 공무원의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다.


#### 지체 부자유 아동들의 교육

이 계획의 목적은 지체 부자유 아동들에게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완전히 융합된 형태, 반만 융합된 형태, 그리고 특별한 형태가 있다. 학습하고 있는 지체 부자유 아동들의 비율은 2005년까지 50%에 이르고 2010년까지는 7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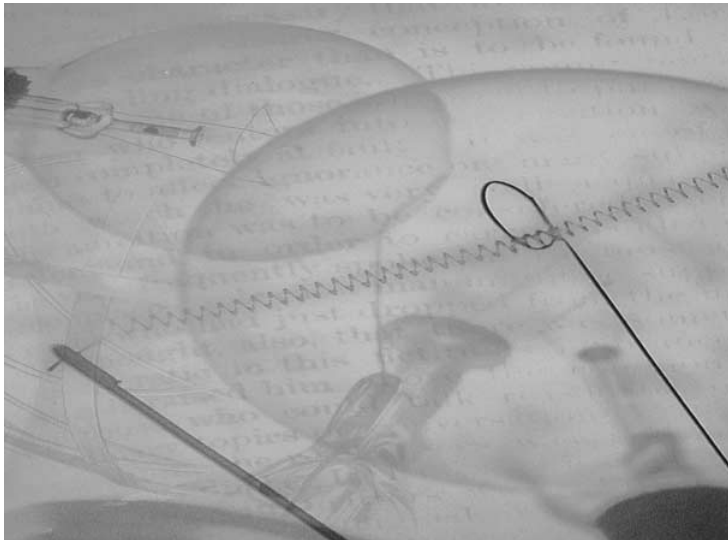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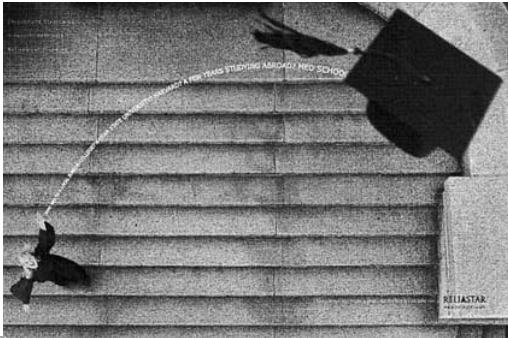
### 3. 교육개발을 위한 해결책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이 필요하다.

- a. 교육에서 좀더 혁신적인 목표와 내용, 교육과정의 개발
- b. 교수자와 교수방법의 개발
- c. 좀더 나은 교육 경영
- d. 제도개선과 학교조직의 개발
- e. 교육을 위한 좀더 많은 재정 지원과 하부조직
- f. 교육에 있어서의 강한 사회참여
- g. 튼튼한 국제협력

위에 언급된 해결책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경영의 혁신은 틀을 깨는 해결책이다. 

번역 : 정중엽



한국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경동

대학은 '교육적 선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김동훈

과외, 평준화, 영재교육정책의 딜레마 | 이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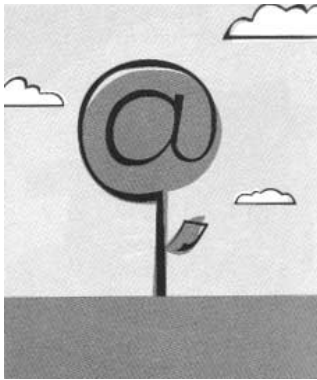
# 주간 교육정책포럼

이 곳에 소개하는 칼럼은 최근 3개월간 ER&D Network 주간 교육정책포럼에 실렸던 글입니다. <http://www.eduforum.re.kr>에서 회원 가입(무료 회원제)을 하시면 최근 교육 현안에 관한 깊이있는 칼럼을 매주 이메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경동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kdkimnew@hotmail.com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파생했다고 할 만하다. 이런 국가중심주의는 이미 구시대적 발상에 속한다. 지금은 지방자치 단위의 자율적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루속히 실천해야 할 21세기며…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 최신호(2003. 6. 9)에는 한국 경제의 기적을 지속시킬 처방에 관한 배로(Robert J. Barro) 씨의 분석이 실려 있다.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선 한국 경제는 선진국식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피하고 중진처럼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정책과 제도가 전보다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그 중 아주 중요하고 유리한 선택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육의 형편을 살펴보면 '교육'은 실종되고 '교육 정치'만 난무하는 형국을 실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근본에서부터 굼터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육 당사자들이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쟁점을 두고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는 사실은, 교육의 앞날은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심히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를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집약하면, 1) 교육의 정치화, 2) 교육의 상업화, 3) 교육의 독점화, 그리고 4) 교육의 세속화라는 네 가지

서로 연관된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은 누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치적 목적의 불모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 단체가 자신들의 권익과 직업적 이해 관심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 목적에 한정시켜 필요한 집합적 운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구나 특정한 이념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국가가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 말고는 어떤 특수 집단이든 자의로 시행해서는 곤란하다. 우리와 같은 분단 현실에서는 이 점을 특히 조심하는 것이 온당하다. 교직원 단체나 교원 개인들 중 이런 방면에서 성찰을 요하는 사람들의 각성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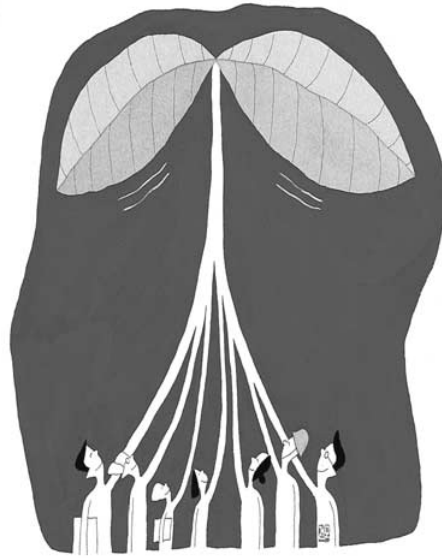
둘째,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교육 문제의 핵심 요인이 입학시험 위주의 학교교육과 교과목 운영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가 없다. 여기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이상 현상 중 하나가 소위 학원과 참고서 기업의 번창이다.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누구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의 탈을 쓰



고 축제를 하는 교육상업주의는 애당초부터 길을 터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와서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난망이겠으나, 입학전형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써 교육을 상업화하는 장사가 돈벌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실로 황급하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문제는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파생했다고 할 만하다. 이런 국가중심주의는 이미 구시대적 발상에 속한다. 지금은 지방자치 단위의 자율적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루속히 실천해야 할 21세기며, 교육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자멸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기도 벌써 지났다. 국가는 일차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는 지역과 학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한층 더 깊이 근원을 따지고 들면,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왜곡, 타락시키는 주범은 우리 사회의 출세주의와 학벌 중시 풍조임을 알 수 있다. 그 주체는 바로 학부모와 그 영향 아래 있는 학생 자신들이다. 교육을 순전히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만 평가하는 비뚤어진 가치를 교정하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제도적 변화나 시스템의 정비도 유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정도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며, 따라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출세를 포함해 지위 획득과 향상에 유용한 지식과 슬기를 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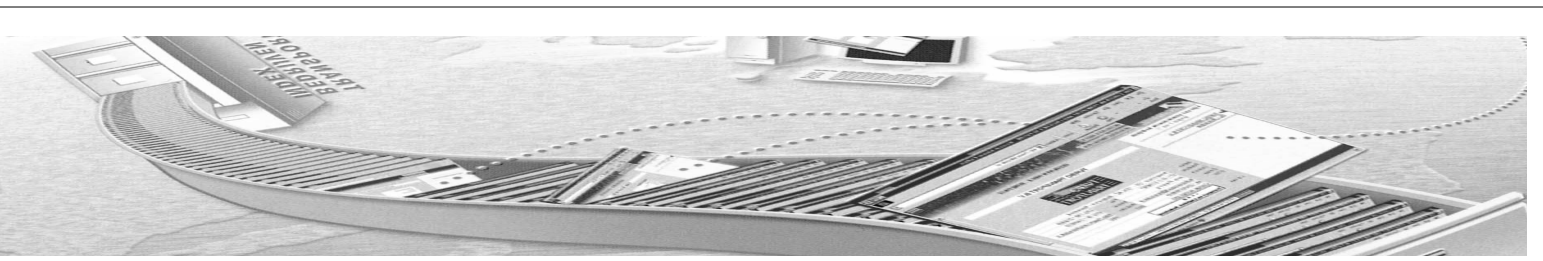
나갈 수 있다는 가치의 정상화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교육이 지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손아귀에 움켜쥔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색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해 인간힘 쓰면서 모든 교육의 자원과 인사와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경직된 구시대 의식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앞날이 어둡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에 완전 분권을 실시하면 각 지방과 각급 학교는 아마도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의 지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와 자율의 기초를 닦아 놓고 체계적

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시장 원리의 작용으로 차츰 정비가 될 것이고 정상적 토대 위에 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시장 원리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응하지만 문제는 왜곡된 시장에 있는 것이지, 가장 건전한 시장이야말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없이 효험이 큰 양약(良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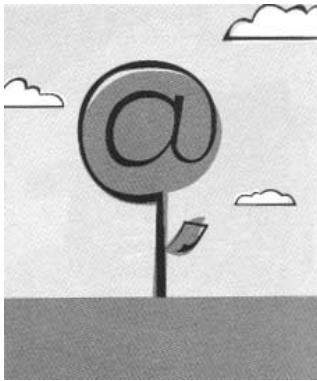
**필자약력**  
 김경동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학(Univ. of Michigan)과 코넬대학(Cornell Univ.)에서 각각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너 주립 대학(Univ. of North Carolina State) 교수, 듀크대학(Duke Univ.) 및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 초빙 교수, 월슨센터 연구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장, 기획실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중앙문화대상, 성곡학술대상 등을 두루 수상했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대학은 '교육적 선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김동훈 | 국민대학교 법대학장, dohookim@mail.kookmin.ac.kr



그들은 시험지로 사람을 고르지 않으며, 면접을 통해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다. 그 기준은 우리처럼 객관적이지도 않고, 변별력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다만, 면접 교수가 보기에 미래의 재목으로 자랄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이들의 예상 뒤집기는 지원생들을 늘 조마조마하게 만든다

오래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같은 고교를 졸업한 학생 둘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는데, 이 중 SAT 점수 1,380점을 얻은 학생은 봉사활동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고, 반면 특별활동경력이 미흡했던 학생은 더 높은 점수인 1,520점을 받고도 불합격했다. 불합격한 학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은 “하버드는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 공부벌레를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한다.

한편, 영국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 선발을 현지에서 오래 지켜보아 온 어떤 분의 소감은 이렇다. “그들은 시험지로 사람을 고르지 않으며, 면접을 통해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다. 그 기준은 우리처럼 객관적이지도 않고, 변별력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다만, 면접 교수가 보기에 미래의 재목으로 자랄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이들의 예상 뒤집기는 지원생들을 늘 조마조마하게 만든다. 전 과목 'A'를 받고, 전교에서 1등을 하기도 옥스포드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의 엄마 말에 따르면, 이들은 완전히 '오야 마음'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완전한 재량, 즉 '오야 마음'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이것은 우리의 대학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네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 있어 갖는 실질적인 재량이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 나라 현행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 각 대학에 시달하고, 각 대학은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면접고사 형식을 빌려 행해지는 지필고사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제재를 들먹이며 위협하는 교육부와 대학 당국간의 실랑이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대학이 오로지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완전한 재량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달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에 앞서 학생 선발의 자율을 주장하는 우리의 주요 대학들에게 자율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근래에 외국어고 등에서 유학 준비반을 만들어 수십 명의 학생들을 외국의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합격



학생들과의 뉴스 인터뷰 중에서 뚜렷이 기억에 남는 말은 “이 대학들은 나라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서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미국 대학에 대한 선택을 확신하게 됐어요”라는 대목이다. 이 말 속에는 국내 대학들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서보다는 수능 점수 몇 점짜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은연중 담고 있다. 자신이 살아온 삶과 꿈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점수 기계로만 보는 대학에 자신의 귀한 인생 시절 4년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뜻인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명문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오래 지낸 한 교포가 국내 월간지에 소개한 미국 명문대의 입학 사정 기준에 관한 글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미국 대학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 지능은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다……. (중략) 대체로 미국 대학이 입학 심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부하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목적이며,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열정을 가지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권장하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을 원한다.”

그들은 이러한 교육적 선발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마다 수십 명의 전문적 입학사정관을 두고 수많은 지원 서류를 세심히 검토하는 한편,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우수한 학생

을 스카우트한다. 우리 나라의 한 고등학교에도 미국의 예일·시카고·듀크대 등의 관계자가 잇따라 학교를 찾아 우수한 학생의 지원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대학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얼마나 값싸고 손쉽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알 수 있다. 그저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수능 점수 위주로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딱딱 해치우지 않는가. 이들은 입학생의 커트라인 점수를 올려서 위세를 부려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원자들 역시 점수 라벨을 붙인 상품 정도의 의미밖으로는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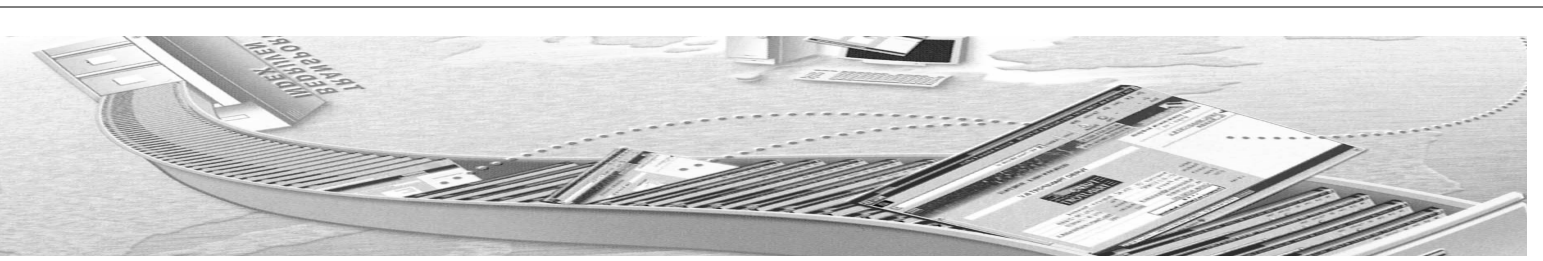
대입 수능을 5개월 여 앞두고 지난 6월 11일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점수 발표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이 첨예하다. 사실 모의고사를 금지한 후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라는 데에서도 더욱 그러하지만, 대입 모의고사 성적 수치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대입 모의고사는 곧 대학 입시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고, 대학 입시는 곧 대학 입학과 동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이 ‘대학 입시’와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이 시험 성적 이외에 다른 선발의 기준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럴수록 중등교육은 일종의 사육장이 되어 더욱 황폐해져 가고, 시험 제도를 숙주(宿主)로 삼아 ‘학

성 사교육’이라는 기생충은 번져가고 있다. 이제 대학은 ‘교육적 선발’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정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중등교육의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중등교육을 황폐화시켜 놓고 대학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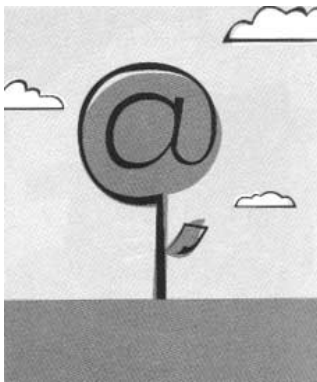
이제 고등교육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선두 대학들은 더 이상 국내 학생들 쟁탈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자면 학생 선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한다. 그저 점수를 합산해서 순서대로 배열해 정원 숫자에 맞추어 빨간줄을 그어대는 원시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많은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 지원자들의 살아온 얘기와 펼치고 싶은 꿈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 능력의 다양성과 잠재성이라는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완전한 재량을 누리는 토대가 되는 대학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대학 당국들이 숙고할 일이다. [20]

**필자약력**  
 김동훈 교수는 독일 쾰른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만들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교육 관련 칼럼집으로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2002),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2001) 등이 있다.



## 과외, 평준화, 영재교육정책의 딜레마

이해명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tolstoy55@hanmail.net](mailto:tolstoy55@hanmail.net)



“과외를 통해서 학업성적을 향상 시키려는 부모의 요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과외금지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외와 영재 교육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려는 욕구가 있는 한 과외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경쟁의 욕구를 막아보려는 것이 평준화 정책이다. 평준화 정책은 경쟁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보다는 평등에 의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가치를 둔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영재교육을 거부한다. 이렇게 평준화와 영재 교육, 그리고 과외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서로 화합할 수 없다. 다만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평준화정책이나 영재교육정책, 과외금지 정책은 현재 실험을 거친 단계로, 각각의 정책적 장·단점은 모두 드러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정책들을 수정·보완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외나 영재교육 그리고 평준화 정책은 이론에 기초해 시행될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공과(功過)를 따져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과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 동안 무엇이 문제였고 이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과거 우리는 사교육비의 팽창을 막기 위해 과외금지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부분적 허용으로 선회한 경험이 있다. 또 최근 “과외를 통해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부모의 요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과외금지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외정책의 공과(功過)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로 그 정책의 내용이 되는 ‘과외’의 효과이다. 과연 과외가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외는 중학생에게만 효과가 있고, 고등학생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은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 좌우되는 바 크기 때문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별도의 과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준화 정책이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평준화 정책의 이론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 정책은 어떻게 수정·보완될 수 있는가? '학교간의 서열화 방지'는 평준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지만 이 역시 실패한 바 있다. 이른바 구(舊) 명문학교 대신에 신(新) 명문학교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부터 시행된 영재교육정책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영재교육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도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재능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재능이 없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재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면 과열 입시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고, 이는 평준화가 가져온 성과를 하루이침에 무산시키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평준화의 공(功)인 과열 입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평준화의 일환으로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농어촌 학생 특례 입학제도라든가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역할당제가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평준화 정책에 의해 지역 명문 고등학교가 사라지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지역 학생 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분당이나 일산이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주했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차를 극복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차한 지역할당제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과외 문제는 억지로 금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학교간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기관이 과외의 효과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급한 대로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서열화 극복에 실패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목고, 영재교육기관, 자립형 사립고 등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의 확대나 영재교육기관의 남설(濫設)은 또 다른 입시 지옥과 사교육의 팽창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하건대,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은 재능을 지닌 일부 소수의 영재를 교육시키는 기관으

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한 평준화 정책 역시 지역에 특혜를 주는 방향이 아니라, 지방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이론' 보다는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 수립되어야 한다. 곧 새로운 이론에 기초해 그 실효에 관한 검증은 거치지 않은 정책 보다는 기존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공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필자약력 |

이해명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파견교수, 교육부 연구교수,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및 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영재교육방법, 교육개혁, 교육과정모델 등에 연구의 관심이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개화기 교육개혁 연구」,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결정구조」 등이 있다.

# 책

B

O

O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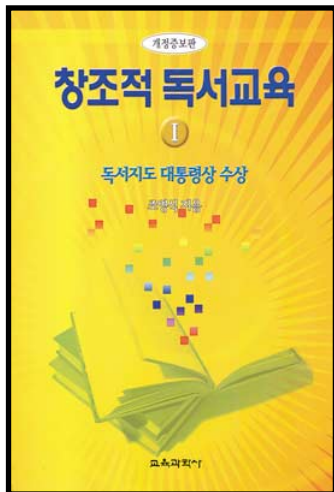
## 창조적 독서교육 I

조영식 지음 / 교육과학사

“독후감 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독후감 쓰기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인 독서교육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교육인적자원부 조영식 연구사의 주장이다. 조연구사는 독후감을 대신할 신나는 독서 감상표현 방법을 개발했다. 책을 읽고 ‘만화’로 그리거나, ‘피즐 만들기’, ‘숨은 그림 찾기’, ‘표정 그리기’, ‘퀴즈문제 만들기’, ‘독서신문 만들기’, ‘개작하기’, ‘도식화하기’, ‘광고하기’, ‘인터뷰하기’, ‘인물 비교하기’, ‘유머 쓰기’, ‘앙케트 조사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학생이 『콩쥐팍쥐』를 읽고 쓴 ‘개작’은 번득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엿보게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소비에 찌든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는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어요. 경제 능력을 상실한 콩쥐는 흥부네에서 머



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날 콩쥐는 빨래를 하기 위해 동네 냇가로 갔어요. 빨래를 하던 콩쥐는 떠나려가는 바지를 잡으려다 인당수에 빠졌어요. 용궁에 떨어진 콩쥐에게 용왕님이 물었어요.

“이 금바지가 네 것이냐?”

“아니어요, 저의 바지는 평범한 바지예요.”

착한 콩쥐는 용왕님께 금바지를 선물받고 지나가던 타이타닉호에 구조되었어요. 타이타닉호에서는 파티가 열렸어요. 파티에 금바지를 입고 간 콩쥐는 인기가 컸어요. 파티를 다 즐긴 콩쥐는 과자집에서 내렸어요. 과자집에서 콩쥐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의 조선으로 돌아갔어요.

한참 이순신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던진 창에 콩쥐가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콩쥐가 옆에 있는 한 병사에게 말했어요.

“나의 죽음을 우리 고장에 반드시 말해 줘쇼!”

독서감상 표현방법은 그 한계가 없이 다양하다는 것이 조연구사의 주장이다. 나아가 신나는 독서감상 표현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내재된 창의성도 길러진다고 설명한다.

『창조적 독서교육 I』에는 조연구사의 지도로 산출된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감상 표현 사례가 그대로 실려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동료들의 표현을 통해서 배우고, 교사는 교사대로 지도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이루어져 있다.

조연구사는 “허튼 농부는 농작물에 영양제를 주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땅심’을 길러준다”며 문제 풀이 학원보다는 독서가 학습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교육, 그 숲을 걷는 이들의 발걸음(교육정책포럼 라이브러리2)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엮음 / 문음사

이 책은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주간 교육정책포럼에 실렸던 글들을 엮은 칼럼집이다. 남궁석(국회의원),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모임 공동회장) 등 사회 각계 인사 25명이 교육이라는 숲을 걸으면서 전하는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모았다.

사색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사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H. 베르그송의 이야기는 그대로「교육정책포럼」에 전해져 실천되고 있다. 곧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논의하고, 논의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에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교육이라는 숲을 걸으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루나무 끝에 걸린 하늘을 보듯이 높은 관점으로, 때로는 솔잎처럼



날카로운 분석으로, 때로는 후박나무 커다란 이파리가 만드는 그들과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육을 사유하며,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수록 저자:

고전, 김용순, 김용일, 김정명신, 김진성, 김철규, 김희선, 남궁 석, 남승희, 박거용, 박경순, 박복선, 박성현, 박종은, 유상덕, 윤종건, 이만희, 이양희, 이장희, 장석만, 조동섭, 하인호, 허경태, 허병두, 황석근

》 교육정책포럼 라이브러리

제1권 :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50인의 창

제2권 : 교육, 그 숲을 걷는 50인의 발걸음

제3권 : 이 세상과 함께 교육을 노래한다

## 2002 한국교육평론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엮음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주요한 교육현안문제를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교육평론」을 발행한다.

『2002 한국교육평론』은 『국민의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참여정부」의 시작에 맞추어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라는 대주제를 설정하였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논리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은 교육분야에서 공동체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월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단축, 교원성과급제 도입, 특성화 고교 및 자립형 사립학교체제의 시범도입, 부총리제의 신설,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의 교육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



나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교원들의 권위실추와 사기저하의 문제, 학교교육의 위기, 교육계에 대한 불신, 교원단체간의 갈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2002 한국교육평론』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정책 입안 및 시행과정의 측면, 교육행정체제의 개편, 학교운영체제의 개편, 교육의 질관리 측면, 교직구조

의 개편 측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교육정책의 개선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2 한국교육평론」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극복과 계승’의 과제를 줄 것이다.

##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

말바 타한 지음 / 이해경 옮김 / 경문사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은 ‘수학’ 하면 으레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날려줄 책이다. 오랫동안 대학 수학 교재를 출판해 온 경문사가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 오디세이> 시리즈를 출간했다.


공식을 설명하거나 입시를 위한 수학 책이 아닌 우리의 삶과 수학이란 학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수학이 문화와 삶의 산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줄 책을 기

획 출판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도에 맞춰 처음으로 펴낸 책이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이다. 수학 공식이나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의 수학, 수학이란 학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수학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 책’이다. 소설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을 읽다 보면 어느새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화려한 문화가 꽃피고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 되어온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한 작은 마을의 목동인 베레미즈가 부와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텔리심의 사랑을 얻기까지의 흥미롭고 감동 깊은 모험의 세계로 떠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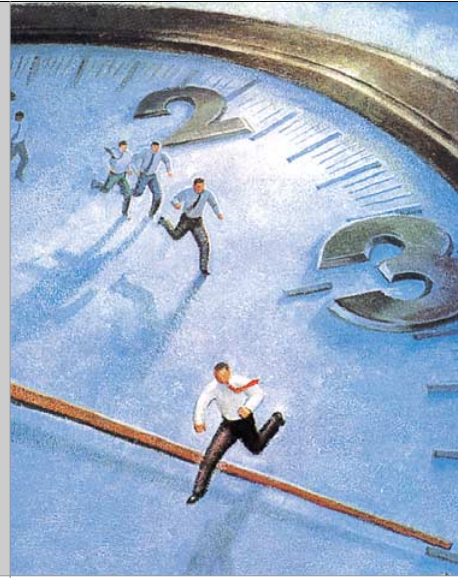
이 책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지닌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에 가벼운 터치로 수학을 재미있게 덧입혔다. 이국적인 페르시아의 향기와 바람을 느끼며 베레미즈와 재미있는 여행을 떠나다 보면 어느새 수학이란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음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있고 친근하게 읽을 수 있다. 



# 우리의 인적자원, 이제 ‘전략’ 이 필요하다

## –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준거와 그 지향성



홍영란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hyr@kedi.re.kr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인적요소를 막연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찾아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개발·관리·활용은 국가·사회 및 개인 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증대로 인한 사회통합의 강화, 인적자원개발의 국가 전략화, 생애주기의 장기화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 등과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더욱 크게 강조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의해 자본·지식·정보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조적 지식 근로자의 양성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소외와 지식·정보 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구성원간의 결속과 연대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해야 할 국가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질적 경쟁력이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미래의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실천적인 개념 규정을 토대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비전과 목표 아래 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목표와 추진 내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요청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기업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협의의 ‘인적자원 개발(HRD)’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과 인력양성 및 활용·관리, 지원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방향과 범위를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과 학습 체제를 총칭하며, 또한 개발된 인적자원의 사회적 효용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지원체제의 효율적 활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의 모든 것 그 자체가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엇을 인적자원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전제와 관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다 인적자원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초점화(focusing)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인적자원 개발,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1. 잠재가치의 발굴

‘인적자원’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자원’이란 예상되는 미래 용역 및 이익 가치를 유발시키는 유·무형의 재화 또는 그 원천을 의미한다. 즉 어떤 대상을 놓고 그것이 자원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 지금 뿐 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가치를 유발시키는 인적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보면, 인적자원이 자원으로서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래에 특정한 가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잠재가치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가 보유한 국민들의 인적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 미래의 잠재가치를 가질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의 발굴과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인적자원의 가치여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미래 시점에서 특정한 전제를 설정하고 보았을 때 예상되는 잠재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의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 2. 희소자원의 개발과 암묵지의 발굴

인적자원의 가치는 희소성에 기초하므로 특정한 인적자원이 희소할수록 그것의 자원적 가치는 커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인적요소를 막연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찾아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가 보유한 인적요소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교우위적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 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적요소에는, 생물학적인 특성상 비교우위를 갖는 것도 있고, 기술적 수준상 비교우위를 갖는 것도 있으며, 전통음악과 예술과 같이 사회적·문화적 특성상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도 있다. 이렇듯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는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만이 보유했거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희소자원의 발굴과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인적자원은 그 속성상 그것을 가진 사람 속에 체험지(또는 암묵지)의 형태로 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은 학문, 종교, 예술, 기술, 교육 분야 등 전문성을 전제로 한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암묵지는 개인을 통해 소유되지만, 특정한 전문분야의 역사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 속에도 전통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일시적인 유행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확인된 인적자원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통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전략적 접근과 통합의 추진

현 단계의 인적자원개발이나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강조이다. 인적자원개발이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와 사회 또는 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전체 개념인 인적자원에는 전략적 선택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의 모든 것 그 자체가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무엇을 인적자원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전제와 관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모든 것을 다 인적자원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초점화(focusing)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국가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10대 지식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10대 지식강국의 모델을 근거로 우리와의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목표수준과 비교할 때 무엇이 부족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인적자원의 양성·활용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사회적 신뢰)이 기본적인 인프라의 형태로 형성·축적되어 있는 것이 10대 지식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우리의 현 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를 형성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의 기획 기능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 주력 기간산업의 산업적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직업연구(현장형 직업분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양성기관의 역할을 학교급별, 지역별, 기관별로 분담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중앙 통제식 강제 배분이 아니라 전문성과 비교우위의 차별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수립된 전략의 통합적 추진과정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기존의 추진부서로 다시 나누어져 저마다의 시각에서 각자 초점을 달리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통합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인 단위까지 수립하고 이를 정밀히 점검하며,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설조직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 4. 각 하위요소들간의 정합성 제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나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하위제도들간의 정합성(coupling)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들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높여 정책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나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정한 하위제도나 요소에 매몰되지 않고 좀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보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영역과 하위과제들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전략분야 인적자원개발이 사회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을 약화시킨다든지, 공직부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가 민간부문 인적자원 활용개선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정책 상충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충

결국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사람과 지식'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정책이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인간발전 정책이어야 한다.

의 결과,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심지어 정책 폐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5. 최적합성 제고의 필요성

인적자원은 그것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미스매칭(mis-matching)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미스매칭이 발생하면 인적자원의 속성상 이의 전환이 매우 어렵고 그 기간도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적자원의 경우 미스매칭이 발생하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면 되지만, 인적자원의 경우 학과를 잘못 택하거나 또는 직업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의 전환이 쉽지 않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민 개개인 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경력개발제도나 자격제도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는 물론 각종 진단도구나 교육프로그램 등 내용적 인프라도 필요하고, 상담과 같은 운영적 인프라는 물론 각종 직업정보 DB나 매뉴얼 등 시스템적 인프라도 중요하다.

### 6. 인적자원관리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인적자원관리 주체의 역할은 최적의 인적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자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것을 보유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인적자원과 그 많은 보유자를 얼마나 적절하게 분류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인적자원의 풀(pool)을 확보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사람과 지식' 국가발전의 핵심역량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공익성의 증진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이상에서 제시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준거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정책적 지향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인적자원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가치를 가진 구체화된 인적요소라는 점이며, 둘째,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잠재가치나 희소성을 가진 인적요소를 찾아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관리·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략적 초점화로써, 국민의 모든 것을 다 인적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시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정책 운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러한 선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지식'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실천이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강조하는 인간발전 정책으로써,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계층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 국민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성장과 형평성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혁신 정책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기본 토대인 국민 개개인과 조직이 가진 지식과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유도·지원하는 개혁정책이며,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 활동과 생애 전반에 걸친 능력개발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체화된 지식과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김은주 |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자료운영팀장, bonnyk@kedi.re.kr

### 교원 수급

이 연구는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의 1999년~2000년 2년간의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조사(1999-00 School and Staffing : SASS)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90년대말 미국 교육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교원 부족의 규모와 교원 부족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를 조사하고자 이루어졌다. SASS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간에는 45,000명에 달하는 교원이 새 학년이 시작된 이후에야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족한 교원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채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부족한 교원은 어느 정도가 충원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족한 교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규모를 직접적으로 측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원의 충원이 실제로는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방과 소수 민족, 저소득층의 경우가 보다 더 교원 부족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남부와 서부의 주(States)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원의 충원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나 지역 당국이 교원 수급에 있어서 균형적인 분배에 대해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 수립시 교원의 취업과 유지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제안했다.

### <연구결과>

- 교원 부족은 지역의 문제이지 국가적인 위기는 아니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내의 남부, 남동부, 남서부 지역에서 결원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지역적인 불균형 역시 도시나 근교에 있는 학교인가, 지방에 있는 학교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도시의 학교에서는 교원의 충원을 지연하는 비율이 근교 학교들보다 50%가 높게 나타나며, 지방학교에 비해 2배나 높게 나타났다.

- 40% 이상이 소수민족(monority student)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교원의 충원을 지연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한 학생들이 40% 이상인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교원의 충원을 지연하는 비율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데이터는 빈곤하거나 소수민족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과에 따라서도 교원 수급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교과 등의 경우는 교원 수급상황이 어려우며, 영어, 기본적인 교과, 사회교과는 교원 충원이 보다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 교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교원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를 확대시키는 등의 교원 수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체적인 교원수의 증가효과는 가져오지만 지역이나 교육구, 학교, 과목에 따른 교원부족을 해소시키는 효과는 가지고 오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 연구자들은 교원 개개인에게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이 부족한 교원을 충원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목표가 뚜렷한 프로그램을 입안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 : Patrick Murphy, Michael DeArmond, Kacey Guin  
 자료명 : A National Crisis or Local Problems : Getting Perspective on the Scope and Scale of the Teacher Shortage.  
 발표시기 : 2003. 7.  
 출처 : Educational Policy Analysis Archives, vol.11 no.23

### 지각능력과 동기

어린이들의 자가지각능력과 본질적인 동기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한다.

캐나다정부의 인문사회연구회(Social Science and human Research Council)와 퀘벡 정부의 FCAR 기금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지각능력과 본질적인 동기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높다고 가정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몬트리

을 지역 공립학교를 다니는 중산층 가정의 초등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남학생 : 63명, 여학생 : 52명) 첫 학년부터 그 이후 2년간 을 시험하여 이루어졌다.

수학과 읽기 영역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지각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두 가지 영역에 대해 학년말에 수행결과 (performance)를 측정했다.

3년간의 장기 연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소개한다.

첫째, 수학과 읽기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지각하는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는 학교에서의 처음 3년 동안 교차하여 변화하는가?

둘째, 어린이들의 지각하는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는 과목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어린이들이 지각하는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는 각 교과에 따라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결과〉**

- 지각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의 변화는 교과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발적인 동기는 각 학년에서 학업성취와 교과영역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반면, 지각 능력은 수학과 읽기 두 가지 영역 모두 학업성취와는 의미 있는 관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특정한 교과와 상관 없이, 전형적인 성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들은 교과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발적인 동기의 차이에 있어서 보다 조속하게 나타났다. 과거의 수행능력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물론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보다 조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Therese Bouffard et al.  
 자료명 : Changes in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among elementary schoolchildren  
 발표시기 : 2003. 6.  
 출처 : British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3. 171~186

**학교와 학업성취**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의 중등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가능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캐나다의 12개 공립 고등학교 학생 16,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개선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요인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했으며, 각 학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와 정책집행에 관련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다음의 요소들을 들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기대감, 강력하고 치밀한 행정력, 학업성취에 집중을 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성공을 위한 다른 지표들에 집중, 수행해야 할 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개혁,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 학교의 계획과 활동결과에 대한 연계성의 분석, 통합된 계획과 수행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조화, 훌륭한 지도방법과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 인식,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속의식과 유대감, 학교의 기본적인 사명과 핵심 가치에 대한 지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학교 분위기와 구성원간의 온정적인 관계,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주도하고 학습과의 관

련성 형성, 조직적인 교실 수업과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지지, 조직 프로그램 · 서비스의 다양성과 융통성.

**〈제안〉**

- 정부, 교육구, 교원단체, 학교공동체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중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다

- 학생들의 학습이나 실습과 관련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교장은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 각 학교에 따라 수월한 영역을 특성화하여 이것들이 다른 영역들에도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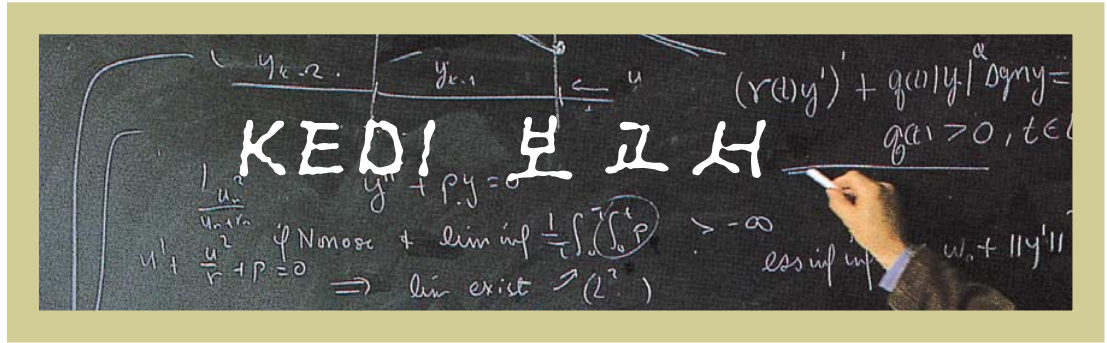
- 학교는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지식 등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교는 교사들의 특수한 요구를 분석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 학교는 학생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한 학습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진다.



연구자 : Norman Henchey et al.  
 자료명 : Schools that make a difference: twelve Canadian secondary schools in low-income settings (final report)  
 연구기관 :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xcellence in Education  
 발표시기 : 2001. 11.



RR2002-10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연구**  
 연구 책임자 | 공은배



**연구목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그 기초를 유지해 온 교육정책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보다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학교, 학생, 교원, 교육내용, 교육지원 정책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각 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했다. 먼저 적절한 평가 모형과 기준을 설정한 다음, 각 정책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단계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한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오랫동안 그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 정책 가운데에서 교교평준화 정책, 중등교원 양성정책, 중등사학 지원정책, 교육과정 평가정책, 교육재정 확보정책을 평가 대상 정책으로 선정했다.

둘째,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구안했다. 먼저 거시적인 시각에서 각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셋째, 평가 대상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각 정책은 형성, 결정, 집행 단계별로 평가하되 다음의 절차를 밟아 평가되었다. ① 평가대상 및 유형 확인, ② 정책 목표, 수단 및 구조의 파악, ③ 평가 방법 결정, ④ 자료 수집·분석 및 결과 검토.

마지막으로, 설정된 평가 기준별로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재구성해 향후 한국 교육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탐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주요 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정책의 과정, 쟁점, 그리고 가치와 관련해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과정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그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점,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의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 집행과정 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둘째, 정책 사례를 평가하면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로서는 ① 시장 논리의 교육적 적용, ② 선택의 권리와 학교 선택, ③ 수월성의 추구하고 다양화, ④ 학교 부실화와 자유재량권, ⑤ 전문성 증진과 통합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한국의 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주목되었다. ① 평등성 :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평등성의 추구가 중요하다. ② 전문성 : 교원 양성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확보 의지가 중요하다. ③ 자율성 : 중등 사학 교육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좀더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④ 민주성 : 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는 중요한 정책성공 요인이 된다. ⑤ 충족성 :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루어진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전국 248개교의 2001년도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비 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초·중·고 3개 단위 학교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시행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그 동안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단위 학교 재정제도의 개념 및 운영 동향을 간략히 개관하고, 우리나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 및 추진경과를 고찰하며,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기대 효과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추진 노력들을 분석했다. 또한 첫째,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에 대해 조사·연구한 14개의 선행 연구 분석, 둘째, 전국 16개 시·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 총 248개교의 2001년도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비 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셋째, 초·중·고등학교 각학교급별로 선정된 학교들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수행 실태를 살피고 학교예산회계제도 시행의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아울러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

RR2002-11

## 학교예산회계 제도의 실태 분석

연구 책임자 | 한유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1년 3월 도입된 이래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시행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재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방안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예산회계 운영 현황 파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출장·면담조사,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워크숍에 참가했으며,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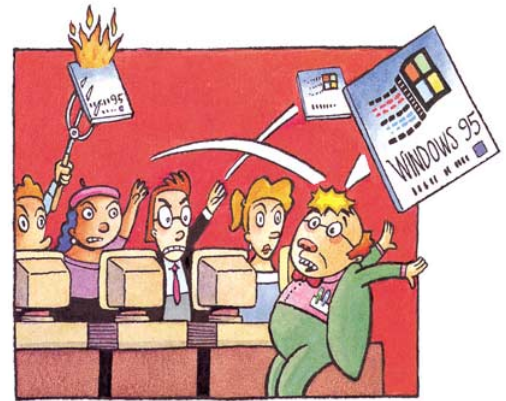
연구 분석 결과,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 과정은 전반적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절차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이나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의 모든 예산이 통합·운영되어 학교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계획된 집행으로 중복투자를 막고, 학교의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이 자율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호응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 아직 시행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꾸준한 개선노력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앞으로 본 제도의 유용성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산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표준교육비의 문제와 목적경비 배분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예산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계획과 예산편성시기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총액예산제'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익자 부담경비 관리의 문제, 예산소위원회 상설화, 예산편성요구서의 제도화 및 참여의 법정화, 회계업무의 간소화 및 전산화, 자체수입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성취도 향상 측정과 같은 실질적인 책무성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학교재정에 대한 행정 감사의 기법을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맞추어 개발

하고,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소규모학교의 예산 및 회계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현장의 구성원과 더 나아가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RR2002-12

##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명세서 기준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 박영숙



### 연구목적

교육명세서(educational specification, 교육시방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공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활용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명세서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고, 작성하고자 해도 작성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명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명세서를 개발함에 있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명세서의 활용 일반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개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 및 지침 분석, 학교시설 계획에서의 교육명세서 요건 분석, 외국의 교육명세서 사례 분석, 교육명세서 개발 요구 분석, 학교급별 교육명세서 개발(안), 향후 학교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했다.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 및 지침 분석에서는 학교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했다.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 및 지침 분석에서는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해 제시했다. 학교시설계획에서의 교육명세서 요건 분석에서는 학교 시설 계획의 관련 모형과 시설 계획이 일련의 절차로 추진됨을 밝히고, 학교시설 계획시 교육명세서가 어떠한 단계에서 작성되고 활용되는가에 관해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교육명세서 개발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급별 교육명세서를 예시적으로 개발해 제시했다.

예시 개발(안)에서는 가능한 학교 규모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했다. 통합 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경우를 예시했다. 교육명세서의 활용 일반화를 위해 국가 시·도 교육청 수준, 단위학교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계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서 학교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 교육명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명세서는 개별 학교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을 위해 교육명세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교육명세서위원회에는 건축가를 비롯해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교육전문가 등 학교교육과 학교건축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해 시설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명세서 작성 기준으로는 6개의 구성 영역과 70여 가지의 구성 내용을 개발해 제시했다. 6개의 구성영역으로는 ① 교육명세서위원회 구성 및 작성 절차, ② 학교 및 학급 규모, ③ 학교부지 및 수용 대상, ④ 학교공공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⑤ 학교시설 공간 구성 요건, ⑥ 학교건축 계획 및 절차로 구분했으며, 이들 6개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한 23개 영역을 제시했다.

23개 영역에는 교육명세서개발위원회 구성, 교육명세서 작성 원칙 및 내용, 교육명세서 작성 절차,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직원수, 학생 수, 교지의 입지 조건 및 특징, 교지 및 교사 총면적, 수용대상 및 인원수, 소요예산, 학교 운영 특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교수·학습 방법, 시설 사용자 요구, 소요 시설 종류, 시설 용도별 공간 구성 요건, 교과별 공간 구성 요건, 교구설비 요건, 실내 및 부대 시설 환경, 학교건축 계획의 방법, 학교건축 계획의 절차가 포함되었다. (KDI)



## KEDI 도서회원에 가입하시면 KEDI의 최신 연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0년간  
국가 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국내 최고의 교육분야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짐
- (2)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회), 『한국교육』(연 3회) 우수
- (3) 기관회원: 연구보고서 20여종  
일반회원: 연구보고서 10여종 (익년도 3월중 우수)

### ·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회비: 1계좌당 기관회원 200,000원 / 일반회원 120,000원

· 입금계좌: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Tel : (02) 3460-0408, 0234 Fax : (02) 3460-0151

한국교육개발원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02 • 3460 • 0114 www.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Home Page

>> 한글 인터넷 주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webmaster@kedi.re.kr](mailto:webmaster@kedi.re.kr) | Copyright(c) 1998, KEDI All Rights Reserved.



## 한국교육개발원 Main Site

- 기관안내   원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30년 Gallery, 조직/기구, 전화번호안내, 약도/건물배치도
- 사업/비전   KEDI Mission, 기관경영목표, 사업계획서, 경영공시, 연구사업목록, 연구위원 목록
- KEDI소식   공지 사항, 입찰 공고, 보도 자료, 신문 기사, 사진 동경
- 자료실    세미나토론회자료, 연구보고서자료, 한국교육자료, 교육개발자료
- Cyber출판   신간 안내,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출판물 검색, 장바구니 보기, 주문/배송정보
- 열린마당   의견계시판, 회원 가입, Daily News, KEDI Mail, 설문조사, 모니터링
- 이용안내   Site Map, Site 안내, Site Q&A, Site 통합검색, Sub Site 안내, 추천 Site

## 한국교육개발원 Sub Site

KEDI 영문	<a href="http://eng.kedi.re.kr">http://eng.kedi.re.kr</a>	<a href="mailto:joelle@kedi.re.kr">joelle@kedi.re.kr</a>	02-3460-0219
학점은행	<a href="http://edubank.kedi.re.kr">http://edubank.kedi.re.kr</a>	<a href="mailto:edubank@kedi.re.kr">edubank@kedi.re.kr</a>	02-3460-0425
교육통계시스템	<a href="http://std.kedi.re.kr">http://std.kedi.re.kr</a>	<a href="mailto:webmaster@std.kedi.re.kr">webmaster@std.kedi.re.kr</a>	02-3460-0380
전자도서관	<a href="http://202.31.182.12">http://202.31.182.12</a>	<a href="mailto:book@kedi.re.kr">book@kedi.re.kr</a>	02-3460-0407
방송통신고	<a href="http://achs.kedi.re.kr">http://achs.kedi.re.kr</a>	<a href="mailto:achs@kedi.re.kr">achs@kedi.re.kr</a>	02-3460-0393
학교종합평가	<a href="http://schooleval.kedi.re.kr">http://schooleval.kedi.re.kr</a>	<a href="mailto:juah@kedi.re.kr">juah@kedi.re.kr</a>	02-3460-0321
평생교육센터	<a href="http://ncle.kedi.re.kr">http://ncle.kedi.re.kr</a>	<a href="mailto:ncle@kedi.re.kr">ncle@kedi.re.kr</a>	02-3460-0356
영재교육	<a href="http://202.31.182.19">http://202.31.182.19</a>	<a href="mailto:mkson@kedi.re.kr">mkson@kedi.re.kr</a>	02-3461-0236
연계체제운영	<a href="http://ernd.kedi.re.kr">http://ernd.kedi.re.kr</a>	<a href="mailto:ksk7307@kedi.re.kr">ksk7307@kedi.re.kr</a>	02-3460-0473
교육정책포럼	<a href="http://mailzine.kedi.re.kr">http://mailzine.kedi.re.kr</a>	<a href="mailto:mailzine@kedi.re.kr">mailzine@kedi.re.kr</a>	02-3460-0474



E R&D network 주간 「교육정책포럼」은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분야의 대안적 뉴스미디어의 역할과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 E R&D network

## 주간『교육정책포럼』

교육 개발 2003년 9+10월호 Vol.30 No.5 통권141호 2003년 8월 25일 발행 격월간 등록번호 문화비:02718 등록번호 2001년 4월 11일 권 4,500원



웹사이트 안내 <http://mailzine.kedi.re.kr>



### 教育政策 執行과 教育研究·開發과의 連繫體制

- **교육시론**은 다문학적 구도에서 교육문제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글입니다.
- **현안문제진단**은 최근 교육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게재합니다.



- **현장리포트**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 **연구보고서**는 교육관련 기관들의 주요 연구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세계교육동향**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련된 핵심 기사를 소개합니다.



- **Daily News**는 각 신문방송의 모든 교육관련 소식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열린세미나**는 개최된 세미나를 선정하여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 **독자의소리**는 게재된 글 및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본 메일진은 주 1회(목요일) 발행하며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면 교육정책포럼을 매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교육정책포럼」 운영팀 [mailzine@kedi.re.kr](mailto:mailzine@kedi.re.kr) 02-3460-0399, 0474 (팩스) 02-3460-0122